

중점연구 2012 - 6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

New Income-Generating Measur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 in Gyeongnam

권용덕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

New Income-Generating Measures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 in Gyeongnam

2012. 10

연구책임

권용덕(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강마애(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병규(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발 간 사

경남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대비했을 때 2003년에 44.0%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도 55.7%로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도시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크며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여건이 그리 수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득격차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대농과 소농의 계층 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농가 간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구조와 추이는 농업·농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용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농업의 취약성을 더욱 자극하여 농업·농촌기반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고, 농가소득 보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최소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기존 소득원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소득안정 및 창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으로 개방경제 하에서 개방 압력과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3영역, 즉,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를 농업·농촌소득의 안정 및 창출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과제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대하여 과제와 대책을 도출하고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과정에서 친절하고 성실한 자문을 수행해 주신 여러 자문위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이 은 진

요약 및 정책제언

I. 요약

1. 서론

- 도시 근로자소득 대비 경남 농가소득은 2003년 44.0%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도 55.7%로 11.7%p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농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도시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크며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여건이 그리 수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소득격차 문제는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격차뿐만 아니라 대농과 소농의 계층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농가간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농가소득의 구조와 추이는 1저 2고(저성장·고실업·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에서 더욱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용 등)를 해결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또한 국제 농산물가격 상승과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향세를 면지 못하고 있는 국내농업의 취약성을 더욱 자극하여 농업·농촌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음
-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음. 농가소득 보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최소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기존 소득원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소득안정 및 창출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외부적으로 개방경제하에서 개방 압력과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3영역 즉,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를 농업·농촌소득의 안정 및 창출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과제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소득증대와 창출을 위한 영역을 크게 농산업적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산업적 영역은 농가소득 발생원을 기준으로 농업소득원과 농외소득사업원으로 구분하였음. 소득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업소득은 현재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품목과 작목(43개)과 축산물(7개 축종) 및 수출농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농외소득사업은 농공단지, 농산물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그린

투어리즘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은 국내외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고 경남 농업·농촌의 환경과 농가소득 분석은 통계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진흥청·경남도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였음. 농산업 영역에서 농업소득분석은 다시 농업부문·축산부문·수출농업부문으로 세분하고, 농업부문의 성과는 농촌진흥청의 43개 품목의 표준소득자료를 기초로 조수입과 부가가치액을 이용한 Position matrix 분석을 수행하여 각 품목과 작목의 시계열적 경쟁위치(competition position)를 도출하였고, 축산부문은 생산비 분석을 수행하였음. 농외소득사업은 경남도 정책자료와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농가공 및 식품산업, 관광농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남 농업 및 농촌의 소득증대와 창출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제시하였음

2. 경남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 및 분석

○현대화와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경남의 농업·농촌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농촌 경제 측면에서는 토지생산성 증대, 1차 종사자 감소,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농식품의 수출증가라는 특징을 보임. 사회 및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귀농 및 귀촌의 증가, 다문화 가구의 증가, 기초생활 환경의 열악 등이 제시되며,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지면적의 감소, 아열대기후로의 변화 등이 중요한 변화양상으로 제시됨

○이러한 환경 변화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하락과 농촌지역의 활력 감소가 예상되므로 탈농촌화를 방지하고,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위한 변화가 필요함. 둘째, 각종 FTA 발효 등 농업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시급히 필요함. 셋째, 세계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 종자산업 발전 등에 발맞추어 농

업에 대한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의 주요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이 필요함. 넷째, 농업·농촌의 메카트렌드에 맞추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화 친화산업 육성, 글로벌 경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작목(유지작물·바이오매스·미세조류 등) 발굴 및 육성, 첨단산업기술에 활용한 첨단기술농업 육성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농촌이 생산을 위한 일터의 공간에서 일터·삶터·쉼터의 공간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추세로, 경남의 농촌도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¹⁾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3. 경남 농가소득 구조분석

- 경남의 농가소득 구조 분석 결과 다섯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첫 번째 특징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비중이 농업소득비중보다 높다는 점임. 셋째, 농업조수익중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농업생산성은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 농업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단위자본당 농업소득의 저성장은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인한 농업경영여건의 악화를 야기시킬 우려도 예상되며, 다섯째,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2011년 77.4%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농간(대농과 소농간) 계층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별화된 계층별 소득증대 방안이 요구됨. 또한 고소득계층에 해당하는 대농이나 중간농은 많은 경우 전업농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전문화·기계화·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소득의 파이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농업부문의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기존 소득원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고, 공공경제 영역에서는 직불제나 사회보장지원 등과 같은 소득 및 사회보장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1)농촌과 도시의 환경 혼재,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어울려 생활하는 현상.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4.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음

영역			요약	시사점
농산업 영역	농업 소득	농업	○지속적 위축 영역(39.0%)에 빠진 품목 많음 ○지속적 성장 중인 품목(31.7%) 또한 향후 지속 적 위축에 빠질 우려가 존재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	○Position Matrix분석에 따른 품목별 차별화 된 전략 수립 ○Nation food, Local Food 육성 전략 구분
		축산업	○조수입은 최근에 감소,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축종별 경영비 중 조사료 비중이 높음	○마케팅 산지조직화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경영비 부담요인인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 필요
		수출농업	○파프리카·딸기·단감·장미 등이 경남의 주요 수 출품목임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양하고, 국가에 따라 수 출제약요인이 상이함	○국가별 시장 환경 파악 필요 ○시장 환경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Global Food 산업 육성 필요
	농의 소득	농공단지	○농공단지 중 경남의 비중이 높음 ○전국에 비해 가동업체의 비중이 낮음	○경남 농공단지의 가동률 증가방안 필요 ○농어촌지역 산업화단지로 활용 및 전환
		농산물 가공·식 품산업	○경남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업체보다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과 관련한 업체가 크게 증가함 ○전국과는 식품산업 관련 생산액 증가구조가 다름	○농산물가공과 관련하여 전국과 구조가 상이 함에 따라 경남 고유의 전략이 필요함 ○지역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필요
		그린 투어리즘	○관광농업의 경우 숙박수입이 감소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숙박형 체험 증가	○시군단위 농업관광경영체의 육성 ○우수사무장제도의 확대 및 활용 ○지역리더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기업	경제적 성과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 또한 점차 감소함 ○외부제정에 대한 의존도 감소 ○매출 증가에 따라 원자재 구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 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증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수익 성이 여전히 낮음 ○공공시장 참여현황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음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기단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 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강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성이 낮 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호책 마련. 지역자원 의무사용 제도 도입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경남의 경우 전국평균치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비중이 높음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경제적 수 입을 향유할 기회 증가	○경남의 경우 공공시장의 참여가 더욱 필요 함. 공공제품 구매 바스켓 제도 도입 필요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경영능력 미흡, 자금부족, 판매부진 ○마케팅역량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지역능가 참여 미흡	○마케팅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사후관리체계 강화,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역인력 참여 유도 ○농촌사회 재능기부 활성화 필요

II. 정책제언

□ 기본방향

- 농가소득의 정체와 불안정의 심연에는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요인이 얹혀 있어 현재와 같은 비전과 전략으로는 위기의 본질을 극복할 수 없음.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는 직접적으로 개방확대 등에 따른 농업소득의 하락에 기인한 농가소득 저하, 그리고 농촌의 낮은 삶의 질에서 비롯됨.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
- 농가소득 보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최소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함. 효율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농업에서 벗어나 농민-농업-농촌의 순환상생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발전 이념을 중시하고 수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농가소득의 창출과 안정화를 위한 지역의 당면 과제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임. 개방경제 확대에 따라 한편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농업-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3각체제의 지속가능경제를 강화하는 것임. 지속가능경제는 농민-농업-농촌의 3각체제가 일터·쉼터·삶터로써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완성도를 높이게 됨. 둘째, 경제 3영역과의 관계설정과 연계임. 농민-농업-농촌을 잇는 3각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제의 완성은 경제 3영역(시장경제영역, 공공경제영역, 사회적경제영역)으로 상호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연계성이 녹아들 때 가능함

□ 공공영역의 소득 및 사회 안정망 구축

- FTA 상생기금의 설치
- 직불제 정비와 강화 및 계층별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 농가부채 완화 및 경영회생프로그램 가동

○농업재해지원제도(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선 및 선진화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의 도입

□ 농산업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Position Matrix에 따른 품목별 전략

◦그룹 1영역 :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성장 추구

◦그룹 2와 4영역 : 품목 및 사업경쟁력 강화 추진

◦그룹 3영역 : 강력한 재생대책 추진

○농업소득 증대 및 창출

◦Glob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 강화

◦Nation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농업 강화

◦Loc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강화

○농외소득 증대방안 및 창출

◦농공단지 소득증대 방안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소득증대 방안

○그린투어리즘 소득증대 방안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신성장동력원 창출방안

◦고령장수화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및 실버형 여가산업 육성

◦Medical Food 개발 및 육성

◦녹색성장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곤충산업 육성

◦종자산업 육성

◦미세조류(algae)산업 육성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
- 융합복합기술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 분자농업과 식물공장 육성
 - 첨단기술농업 육성
- 여가문화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 말산업 육성
 - Farm Party 사업 개발 및 육성

□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중태 및 창출방안

○ 정책과제

- 유사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커뮤니티 단위사업의 지역연계와 사업연계성 강화 필요
- 지역인력의 참여확대와 중간조직의 육성 필요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 필요

○ 정책대안

-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전담조직 설치
- 경남 농어촌 사회적경제활성화재단 설립
- 경남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주도의 통합적 농정체계 구축
- 민간 농정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정책 추진시스템 정립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구분		정책 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광역시·군)	농어민/ 시 민
시장경제 영역	농업 소득	○Glob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 강화 ○마케팅보드구성, 전국연합 육성 등	○	○	○
		○Nation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강화 ○계약생산과 농가조직화, 협동조합간 사업연합 등	○	○	○
		○메가트렌드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및 육성 ○고령화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항노화산업 및 실버형여가산업 ○Medical Food 개발 및 육성 ○녹색성장시대 친환경산업 발굴 및 육성 ○곤충산업, 종자산업, 바이오/미세조류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융복합기술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분자농업과 식물공장, IT농업 ○여가문화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말산업 육성 ○Farm Party 사업 개발 및 육성	○	○	○
		○Loc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먹거리 체계 강화	○	○	○
	농외 소득	○농공단지를 농어촌 산업화단지로 활용 및 전환 ○지경부와 농식품부 정책적 공조 강화 ○‘농어촌자원산업화 TF’구성	○	○	○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품목별 공급사슬연계 강화 ○생산자단체와 생협 및 식품산업 참여 확대	○	○	○ ○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시군단위 농촌관광경영체의 육성 및 농가경영 다각화 ○시군단위 농촌관광전담팀 조직 및 시군단위 협의회구성 ○우수사무장제도 확대 및 활용	○	○ ○ ○	○ ○ ○
	공공경제 영역	○FTA 상생기금의 설치	○		
		○직불제 정비와 강화 및 계층별 농가안정망 구축	○	○	
		○농가부채 완화 및 경영회생 프로그램 가동	○	○	
		○농업재해지원제도 개선	○	○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도입	○	○	
사회적경제 영역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전담부서 및 조직 설치		○	
		○경남 농어촌 사회적경제활성화재단 설립 ○기금조성, 운영지원, 중간조직 육성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	
		○경남 사회적경제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공공구매시장 조성		○	

- 목 차 -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와 대상	4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수행체계도	6
제2장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	11
제1절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	11
1. 개방화환경	11
2. 국제 곡물시장 환경	13
3. 식량수요 및 소비의 고급화	16
제2절 우리나라 농업의 메가트렌드	16
1.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16
2.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	17
제3절 경남의 농업·농촌 환경분석	19
1. 분석틀 : 현대화와 글로벌화의 영향	19
2. 농업 및 농촌경제의 변화	21
3. 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	24
4. 환경적 변화	28
제4절 소결	30
제3장 경남 농가소득 구조분석	35
제1절 소득격차의 문제	35
1.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35
2. 소농과 대농간 소득격차	37

제2절 농가소득증대의 문제	39
제3절 농업소득증대의 문제	40
제4절 농업생산성의 문제	43
제5절 농가부채의 문제	44
제6절 소결	46
 제4장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51
제1절 소득증대와 창출의 이론적 방향과 좌표	51
제2절 농산업영역의 성과와 과제	53
1. 농업소득사업의 성과와 과제	53
2. 농외소득사업의 성과와 과제	79
제3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96
1.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관련 정책 및 현황	96
2. 경남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조직 현황	99
3. 경남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조직 성과와 과제	100
제4절 소결	111
 제5장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방안	117
제1절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17
1. SWOT 분석	117
2. 과제 도출	118
제2절 기본방향	120
1. 패러다임의 전환	120
2. 기본방향	121
제3절 공공영역의 소득 및 사회 안정망 구축	123
1. FTA 상생기금의 설치	123
2. 직불제 정비와 강화 및 계층별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123
3. 농가부채 완화 및 경영회생프로그램 가동	124
4. 농업재해지원제도(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선 및 선진화	124
5.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의 도입	124

제4절 농산업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125
1. Position Matrix에 따른 품목별 전략	125
2. 농업소득 증대 및 창출	126
3. 농외소득 증대 방안 및 창출	126
4. 그린투어리즘 소득증대 방안	128
5. 신성장동력원 창출방안	128
제5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135
1. 정책과제	135
2. 정책대안	136
제6절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138
1. 추진체계 구축	138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139
참고문헌	143

- 표 목 차 -

(표1-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표2- 1) 한국의 FTA 추진현황(12.7월 기준)	11
(표2- 2) 기체결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12
(표2- 3) 중국과 인도의 곡물소비 전망	15
(표2- 4)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 전망	15
(표2- 5) 최근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	15
(표2- 6) 세계 1인당 식량 공급량	16
(표2- 7) 세계와 한국의 메가트렌드	17
(표2- 8) 세계와 한국의 메가트렌드	19
(표2- 9) 경남의 토지 생산성	21
(표2-10) 경남의 1차산업 종사자 추이	22
(표2-11) 농가교역조건 동향(2005=100, 전국)	23
(표2-12) 경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24
(표2-13) 경남의 농촌인구 추이	25
(표2-14) 경남의 다문화 가구 수('10)	26
(표2-15) 기초생활 환경의 비교	27
(표2-16) 경남의 경지면적 추이	28
(표3- 1) 도농 가구당 소득비교	36
(표3- 2) 대소농간 소득비교(전국)	38
(표3- 3) 경남의 농가 가구당 소득	39
(표3- 4) 경남의 농업소득 및 경영비	41
(표3- 5) 경남의 농가 생산성	43
(표3- 6) 농가 가구당 부채(전국)	45
(표4- 1) 분석대상 품목	53
(표4- 2) Position별 구분(4기 기준)	55
(표4- 3) 품목별 Position 분류(4기 기준)	56
(표4- 4) 지속성장 영역 품목(4기 기준)	58
(표4- 5)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품목(4기 기준)	59
(표4- 6) 지속적 위축 영역 품목(4기 기준)	60

(표4- 7) 이익없는 성장 품목(4기 기준)	61
(표4- 8) 경남의 축종별 사육가구	64
(표4- 9) 경남의 축종별 마리수	65
(표4-10) 한우 번식우의 수익성	66
(표4-11) 한우 번식우의 경영비	66
(표4-12) 한우 비육우의 수익성	67
(표4-13) 한우 비육우의 경영비	67
(표4-14) 젖소의 수익성	68
(표4-15) 젖소의 경영비	68
(표4-16) 육우의 수익성	69
(표4-17) 육우의 경영비	69
(표4-18) 비육돈의 수익성	70
(표4-19) 비육돈의 경영비	70
(표4-20) 산란계의 수익성	71
(표4-21) 산란계의 경영비	71
(표4-22) 육계의 수익성	72
(표4-23) 산란계의 경영비	72
(표4-24) 경남의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증가 기여도('06~'10)	73
(표4-25) 경남의 주요 국가별 농수산물 수출증가 기여도('10~'11)	74
(표4-26) 경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 기여도('09~'11)	75
(표4-27) 주요 수출시장별 개요 및 수출제약요인	78
(표4-28)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사업 내용	80
(표4-29) 농공단지 조성현황	81
(표4-30)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	82
(표4-31) 농공단지 고용실적	82
(표4-32) 농공단지 생산실적	83
(표4-33) 농공단지 수출실적	83
(표4-34)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 내용	84
(표4-3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내용	85
(표4-36) 향토산업육성사업 내용	86
(표4-37) 경남의 식품제조산업 업체수 현황	86
(표4-38) 경남의 식품산업 생산액	87

(표4-39) 경남의 식품산업 매출액	88
(표4-40)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내용	89
(표4-41) 관광농업 사업 내용	90
(표4-42) 농어촌민박 사업 내용	90
(표4-43) 그린투어리즘 관련 현황('09)	91
(표4-44) 경남의 관광농원 현황	91
(표4-45) 경남의 관광농원 운영실적	92
(표4-46)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방문객수	93
(표4-47)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	94
(표4-48) 경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95
(표4-49)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여건	96
(표4-50) 마을관련 주요 육성정책과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사업조직	98
(표4-51)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여건	99
(표4-52) 경남의 사회적기업 현황('11년 말)	99
(표4-53) 경남의 마을기업 현황('12년)	99
(표4-54) 경남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현황('12년)	100
(표4-55)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표	101
(표4-56)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102
(표4-57)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	104
(표4-58)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	105
(표4-59) 경남의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조달 현황	107
(표4-60) 경남의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108
(표4-61) 경남의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109
(표4-62) 전국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분석 결과	110
(표4-63) 경남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분석 결과	111
(표4-64)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소결	113
(표5- 1)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19

- 그림목차 -

(그림1- 1) 연구수행체계도	7
(그림2- 1) 월별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14
(그림2- 2)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친 이상기후('10)	14
(그림2- 3) 농업·농촌환경 분석틀	20
(그림2- 4) 경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	24
(그림2- 5) 경남의 귀농가구 수	25
(그림2- 6)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 유입건수 추이(전국)	26
(그림2- 7) 한반도 1981~2010년 연평균 기온(a), 연강수량(b)	29
(그림2- 8) 한반도 2011~2040년 연평균 기온(a), 연강수량(b)	39
(그림2- 9) 북상하는 주요 작물재배지	30
(그림3- 1) 도시와 농가가구당 소득	36
(그림3- 2)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37
(그림3- 3) 대농간 농가경상소득 차이(전국)	38
(그림3- 4) 경남의 농가 가구당 소득구조	40
(그림3- 5) 경남의 농업총수입과 경영비 추이	42
(그림3- 6) 경남의 농업경영비 구조	42
(그림3- 7) 농가경상소득과 농가부채 추이	45
(그림3- 8) 농가부채중 농업관련부채 및 가계부채의 구성	46
(그림4- 1) 비화폐경제와 화폐경제의 영역과 경제조직체의 개념적 위상	51
(그림4- 2) 소득중대 방향	52
(그림4- 3) Position Matrix 정의(조수입-부가가치)	54
(그림4- 4) 4기 품목별 Position	57
(그림4- 5) 지속성장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58
(그림4- 6)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59
(그림4- 7) 지속적 위축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61
(그림4- 8) 이익없는 성장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62
(그림4- 9) 영역별 경로이동 패턴	62
(그림4-10)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유형	79
(그림4-11)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81

(그림4-12) 경남의 관광농업 수입원	92
(그림4-13)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구조	94
(그림4-14)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총액기준)	101
(그림4-15)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평균기준)	102
(그림4-16)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총액기준)	103
(그림4-17)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평균기준)	103
(그림4-18)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총액기준)	104
(그림4-19)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평균기준)	105
(그림4-20)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총액기준)	106
(그림4-21)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평균기준)	106
(그림4-22) 지역별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참여현황	107
(그림4-23) 지역별 취약계층 고용비율	108
(그림4-24) 지역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109
(그림5- 1) 지속가능경제와 개방경제의 공생	122
(그림5- 2) 농가소득 창출과 안정화를 위한 경제3영역과의 관계 및 연계	122
(그림5- 3) 품목영역별 대응전략	1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필요성과 목적

개방화와 IMF 이후 농촌에서 소득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농업환경이 국제 무역변화와 연계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소득안정 기조가 과거와 다르게 크게 와해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소득 대비 경남 농가소득은 2003년 44.0%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도 55.7%로 11.7%p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도시와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 도시근로자 대비 농업소득(경남)은 2003년 18.9%에서 2011년 21.0%로 2.1%p 증가하여 조금이나마 개선되긴 하나 도농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여건이 그리 수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득격차 문제는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격차뿐만 아니라 대농과 소농의 계층간에도 발생하고 있어 농가간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소농과 대농간의 농가소득비(=대농/소농)를 보면 2011년 2.16배로 대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1.83배)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에 들수록 대·소농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내에서도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영세소농은 고령화로 인해 농외소득 확보가 어렵고, 규모화된 전업농은 가격하락으로 소득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구조와 추이는 1저 2고(저성장·고실업·고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에서 더욱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용 등)를 해결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 농산물가격 상승과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향세를 면지 못하고 있는 국내농업의 취약성을 더욱 자극하여 농업·농촌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최소한

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다. 농가소득 보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최소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기존 소득원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소득안정 및 창출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외부적으로 개방경제하에서 개방 압력과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3영역 즉,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를 농업·농촌소득의 안정 및 창출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과제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와 대상

소득증대와 창출을 위한 영역을 크게 농산업적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산업적 영역은 농가소득 발생원을 기준으로 농업소득원과 농외소득사업원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업소득은 현재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품목과 작목(43개)과 축산물(7개 축종) 및 수출농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농외소득사업은 농공단지, 농산물가공산업 및 식품산업, 그린투어리즘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²⁾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을 통해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농업의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현대화와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른 경남의 농업·농촌환경을 경남의 농업 및

2) 공공영역에서 정책사업의 현황과 성과측정은 제외함. 공공영역의 국내소득지지 정책은 생산증대와 소득지지, 식량안보의 유지, 도·농간 균형발전과 국토보전, 자연경관 및 환경의 보존 등과 관련되는 정책을 총칭함. 실제로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직접지불제를 들 수 있으나 경영이양직불제, 쌀 소득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함. 직불제가 생산에 연계될 경우 과잉생산구조가 발생하여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각각 직불제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은 사실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공공영역에서 소득안정화 방안은 기존의 문헌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함.

농촌경제의 변화 측면, 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 측면, 환경적 변화 측면에서 지역적 영향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경남의 농가소득 구조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계층간 소득격차·농가소득증대문제·농업소득증대문제·농업생산성 문제·농가부채문제의 특성과 양상을 다룬다.

4장에서는 소득증대와 창출의 개념적 좌표를 정립하고, 농업소득사업과 농외소득사업을 포함한 농산업 영역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또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과제와 성과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의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을 공공영역과 농산업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살펴본다.

3. 연구방법³⁾

먼저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은 국내외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남 농업·농촌의 환경과 농가소득 분석은 통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진흥청, 경남도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산업 영역에서 농업소득분석은 다시 농업부문·축산부문·수출농업부문으로 세분하고, 농업부문의 성과는 농촌진흥청의 43개 품목의 표준소득자료를 기초로 조수입과 부가가치액을 이용한 Position matrix 분석을 수행하여 각 품목과 작목의 시계열적 경쟁위치(competition position)를 도출하였고, 축산부문은 생산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외소득사업은 경남도 정책자료와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농공단지·농가공 및 식품산업·관광농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남 농업 및 농촌의 소득증대와 창출을 위한 과제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3)본 연구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 중 이슈를 확인하고 나서 이슈의 진행방향을 추정하게 되는 ‘통상 미래 예측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자료 또는 추세에 근거하여 미래 사회변화의 모습을 투사(Projection) 하는 ‘트렌드(Trend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남 농업·농촌의 변화양상을 도출하였음.

(표1-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부문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분석대상
○ 경남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 및 분석 ◦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 ◦ 우리나라 농업의 메가트렌드 ◦ 경남의 농업·농촌 환경분석	○ 문헌연구 ○ 자료분석	○ 국내외
○ 경남 농가소득 구조분석 ◦ 소득격차의 문제 ◦ 농가소득증대의 문제 ◦ 농업소득증대의 문제 ◦ 농업생산성의 문제 ◦ 농가부채의 문제	○ 문헌연구 ○ 자료분석	○ 전국·경남
○ 농산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 농산업영역의 성과와 과제 ◦ 사회적경제영역의 성과와 과제	○ 문헌연구 ○ Position Matrix분석 ○ 자료분석(생산비 분석·성과분석)	○ 경남
○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방안 ◦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기본방향 ◦ 공공 영역의 소득 및 사회안정망 구축 ◦ 농산업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 문헌연구 ○ 상기 분석된 결과와 통합적 접근을 통한 결과도출	○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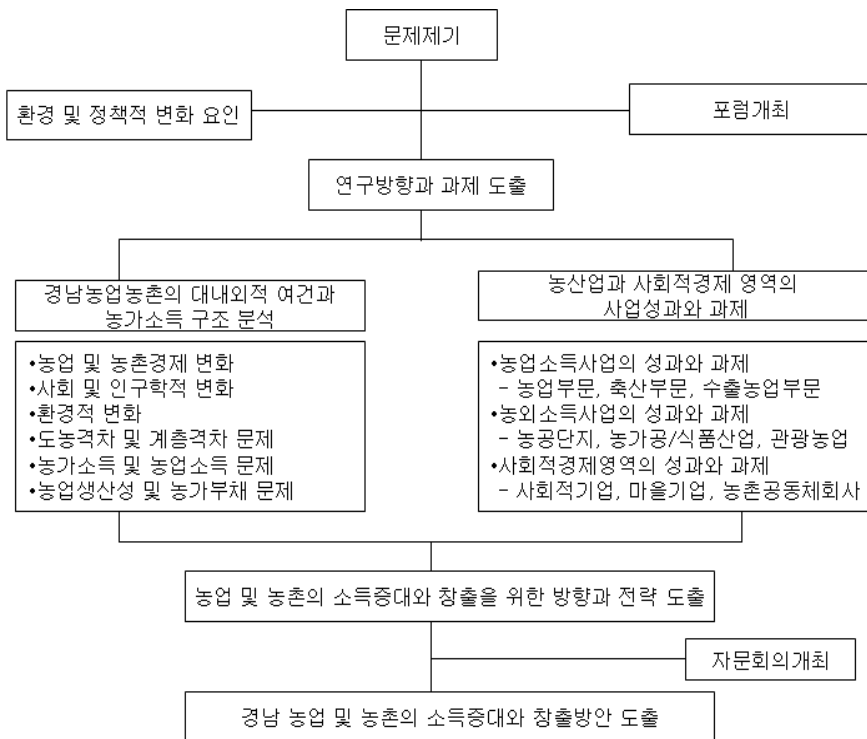
제3절 연구수행체계도

본 연구의 연구수행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적·정책적 변화요인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크게 경남 농업 및 농촌환경 변화와 농가소득 구조분석으로 통해 경남이 직면하는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환경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소득격차·계층격차 등을 포함하는 경남이 직면하는 농가소득 문제를 도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농가소득을 발생시키는 소득원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농산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두 가지 영역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산업 영역의 성과와 과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사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과와 과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남의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을 위한 방향과 전략 및 대안을 도출하였다.



(그림1-1) 연구수행체계도

제2장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

제1절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 농업의 메가트렌드

제3절 경남의 농업·농촌 환경분석

제4절 소결

제2장 환경 및 정책적 변화요인

제1절 세계 농업환경의 변화

1. 개방화환경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02년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2년 7월 현재 45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2개국과는 타결, 12개국과는 협상진행, 15개국과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표2-1) 한국의 FTA 추진현황(2012년 7월 기준)

진행단계	국가	비고
발효	칠레·싱가포르·EFTA(4개국)·ASEAN(10개국)·인도·EU·페루·미국	8건, 45개국
타결	터키·콜롬비아	2건, 2개국
협상진행	캐나다·GCC(6개국)·멕시코·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중국	7건, 12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일본·한중일·MERCOSUR(4개국)·이스라엘·베트남·몽골·중미(5개국)·말레이시아	8건, 15개국

주1)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ASEAN: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3)GCC: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4)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5)중미(5개국):파나마·코스타리카·파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자료)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이처럼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둘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NAFTA 이후 멕시코와 같이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등장하였다. 셋째, WTO와 같은 다자협상의 경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회원국 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등장하였다. 넷째,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효혜조치가 실익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었다. 다섯째,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FTA가 이용되었다.⁴⁾

이러한 시장개방으로부터 농업시장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UR·WTO·FTA로 이어지는 농업시장 개방 확대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위주의 농정을 자유무역과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전환하도록 기존 세계농업 질서의 틀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또는 부분적 개방’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인 쌀의 경우에는 모든 FTA에서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관세율 쿼터(TRQ) 제공, 계절관세 도입, 관세의 부분철폐, 철폐기간 연장,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확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발효된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농산물 양허안이 도출되는 결과를 보였다.⁵⁾

(표2-2) 기 체결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한·칠레 FTA (‘04년 4월 발효) 1,432품목	○ 관세철폐 1,009품목(70.5%), 10년 초과 장기철폐 12품목 ○ 양허제외(쌀·사과·배 등 21품목) ○ 계절관세:신선포도(11~4월 10년 철폐, 나머지 기간 현행관세 유지) ○ DDA이후 논의:고추·마늘·양파 등 373품목 ○ TRQ+DDA 이후 논의:쇠고기·자두 등 18품목
한·싱가포르FTA (‘06년 3월 발효) 1,452품목	○ 관세철폐 869품목(66.7%) ○ 양허제외(쌀·사과·배·양파·마늘·쇠고기 등 품목)
한·EFTA FTA (‘06년 9월 발효) 1,451품목	○ 스위스(34%)·노르웨이(46%)·아이슬란드(58%) 양허 ○ 가공농산물은 FTA 본 협정에서 양허내용을 규정하고, 기본농산물의 양허 내용은 별도의 양자협정을 통해 규정 ○ 가공농산물의 경우 전체 305개 품목 중 259개 품목(84.9%) 대해 양허(인삼제품 제외), 190개 품목은 10~50% 관세인하 ○ 쌀·육류·낙농품·양념류 등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

주)품목은 HSK 10단위 세 번을 의미함.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www.fta.go.kr)에서 발췌함.

5)관세율 쿼터(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임.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임.

(표2-2) 기체결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계속)

구분	주요 내용
한·ASEAN FTA (’07년 6월 발효) 1,452품목	○ 관세철폐 1,003품목(70%), 2010년까지 철폐 ○ 양허제외: 쌀·쇠고기(냉동)·돼지고기·닭고기·고추·마늘·양파·감귤·맨더린·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녹차 등 58품목 ○ ’16년까지 5%이하로 감축(152품목), ’16년까지 1/5감축(190품목) ○ ’16년까지 50%감축(주스류·보리 등 36품목) ○ ’16년까지 50%이하로 감축(사과·배·치즈 5품목) ○ TRQ(매니옥·강낭콩 8품목)
한·인도 CEPA (’10년 1월 발효)	○ 양허제외: 쌀·감귤·고추·마늘·양파·꿀·참깨·들깨·과일주스·녹차·홍차·밀가루·설탕·전분·옥수수·우유·분유·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 ○ ’17년까지 철폐, 5%이하로 감축(대부분의 품목이 해당) ○ ’17년까지(8년 이내) 50% 감축(사료용 옥수수·인스턴트 커피·시럽 등)
한·EU FTA (’11년 7월 발효) 1,499품목	○ 관세철폐 1,371품목(91.5%), 15년 초과 장기철폐(녹차·생각·땅콩·참깨 등 8품목), 20년 철폐(동양배·후지사과) ○ 양허제외: 쌀 16품목 ○ TRQ(낙농품·천연꿀 등 12품목), ASG, 계절관세
한·페루 FTA (’11년 8월 발효) 1,496품목	○ 관세철폐 1,389품목(92.8%), 15년 초과 장기철폐(107품목) ○ 양허제외: 쌀 16품목 ○ 현행관세 유지: 쇠고기·고추·마늘·양파·감귤·사과·배·치즈·인삼류 등 89품목 ○ ASG: 닭고기·무당연유·체대치즈·천연꿀·맨더린·녹두·팥 14품목 ○ 계절관세: 포도·오렌지
한·미 FTA (’12년 3월 발효) 1,531품목	○ 관세철폐 1,502품목(98%), 15년 초과 장기철폐(포도·인삼·사탕수수 등 10품목), 20년 철폐(동양배·후지사과), 계절관세 ○ 양허제외: 쌀 16품목 ○ TRQ(낙농품·천연꿀·감자·오렌지·대두 등 15품목), ASG, 계절관세

주) 품목은 HSK 10단위 세 번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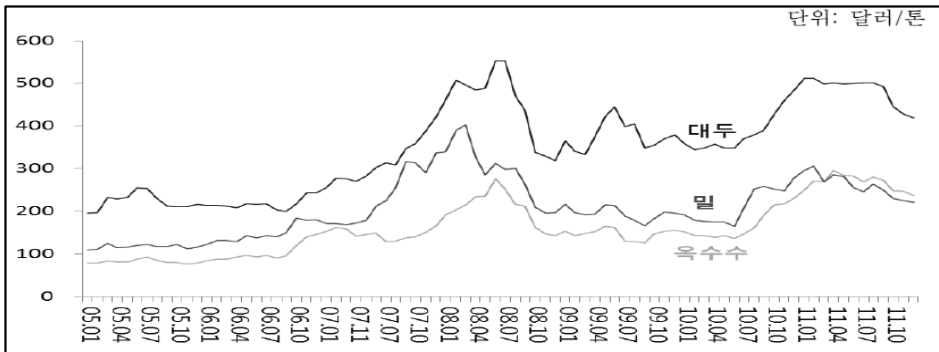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 국제 곡물시장 환경

최근 쌀의 재고량이 ’00/’01년 36.8%에서 ’10/’11년 21.6%로 감소, 소맥 재고량이 동기간 34.9%에서 27.5%로 감소, 옥수수 재고량이 동기간 25.4%에서 14.6%로 감소하는 등 세계 주요곡물의 재고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05년 1월 톤 당 200달러 수준이었던 대두의 선물가격은 ’11년 상반기에 5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05년 1월 톤 당 100달러 수준이었던 밀과 옥수수 또한 ’11년 상반기에 3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여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소비·불확실성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는 ’10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상기후로 인하여 곡물 생산은 감소하였다.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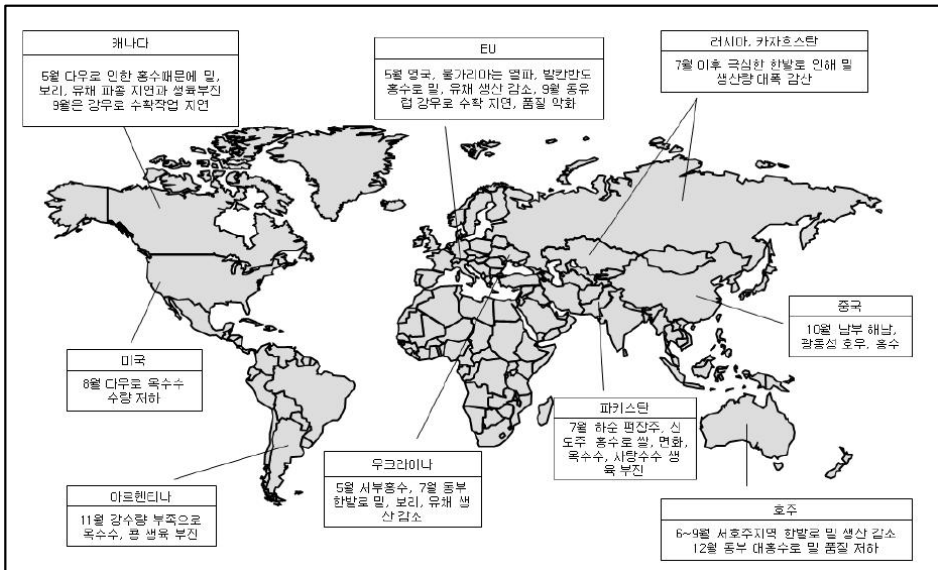
아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옥수수와 대두의 생육이 부진하여 생산이 감소하였다.



주)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시카고상품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재인용.

(그림2-1) 월별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그림2-2)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친 이상기후('10)

소비측면에서는 세계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신흥경제국(BRICs)의 도시화 및 소득 증가로 인하여 곡물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11/12년 기준 세계 전체 밀·옥수수·대

두 소비량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29%·24%·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의 소비량은 '06/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였다.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로 곡물수요 증가와 가격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3) 중국과 인도의 곡물소비 전망

(단위:천톤)

구분		'06/'07	'07/'08	'08/'09	'09/'10	'10/'11	'11/'12
중국	밀	102,000	106,000	105,500	107,000	109,500	113,500
	옥수수	145,000	150,000	153,000	165,000	176,000	191,000
	대두	46,120	49,818	51,435	59,430	65,950	71,000
인도	밀	73,477	76,423	70,924	78,150	81,810	84,700
	옥수수	13,900	14,200	17,000	15,100	18,300	18,900
	대두	7,546	9,530	8,425	8,761	10,855	11,000

자료)USDA, FAS, Market and Trade Data, PSD Online.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에서 재인용.

(표2-4) 세계 바이오연료 소비 전망

(단위:백만 ℓ)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바이오에탄올	48,266	57,657	70,980	83,378	92,932	99,152	106,629	114,185
바이오디젤	4,909	8,056	10,004	13,788	16,443	18,711	22,081	24,370

자료)OECD, OECD-FAO Agriculture Outlook, 2011-2030, 30 May-1 June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고유가로 농자재가격 인상 등 곡물 생산비가 증가하고,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투기 자본이 곡물 선물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 곡물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확대되었다.

(표2-5) 최근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가격 하락 요인
○ 국제 유가 강세 ○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 ○ 신흥 경제국 곡물 수요 증가 ○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율 하락 전망	○ 세계경제 불안정성 증대로 원자재 수요 감소 ○ 곡물 선물투기 감소 ○ 밀 기말재고율 상승 전망

자료)시카고상품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재인용.

3. 식량수요 및 소비의 고급화

신흥경제국(BRICs)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물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먼저 최근 웰빙과 로하스(LOHA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의 기능성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1인당 곡물 공급량은 '90년 이후 연평균 0.5%씩 감소하는 반면, 채소·과일·육류·계란·우유의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먹기 위한 소비에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6) 세계 1인당 식량 공급량

(단위:kg/년·%)

구분	'90~'92	'93~'95	'96~'98	'99~'01	'02~'04	'05~'07	연평균 증가율
곡물	150.3	150.4	150.5	148.4	147.5	146.6	-0.5
채소	77.3	84.7	93.7	107.0	115.0	118.2	8.7
과일	51.0	54.6	57.9	60.0	62.6	67.6	5.8
육류	33.7	35.0	36.2	37.8	38.7	39.8	3.4
계란	6.5	7.0	7.8	8.1	8.3	8.5	5.5
우유	75.6	75.8	77.2	78.2	79.9	83.7	2.1

주)곡물은 맥주맥류 제외·과일은 주조용 포도 제외·우유는 버터를 제외함.
자료)FAO(www.fao.org).

제2절 우리나라 농업의 메가트렌드

1.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는 경제사회 측면과 과학기술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미래의 경제사회 트렌드로는 첫째, 탈산업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물질주의를 탈피하고 신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글로벌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가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탈석유시대와 물 부족과 식량난 등 에너지와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넷째,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와 환경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심이었던 국제정치가 미래에는 다극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트렌드로는 첫째 나노기술 등의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둘째로 에너지 및 환경기술 산업화 등 녹색기술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6T(IT·NT·BT·ET·CT)에 기초한 융복합기술 발전이 전망된다.

이에 맞춰 한국의 메가트렌드 또한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 트렌드로는 첫째로 안정적 경제성장, 둘째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셋째로 다문화사회 시대, 넷째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 트렌드로는 녹색기술 성장과 과학기술의 융복합화가 전망된다.

(표2-7) 세계와 한국의 메가트렌드

구분	세계의 메가트렌드	한국의 메가트렌드
경제사회	탈산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에너지·식량부족 기후변화·환경문제 인구구조의 변화 국제정치 불안	안정적 경제성장 고령화와 인구감소 다문화사회 시대 한반도 정세 변화
과학기술	기술개발의 가속화 녹색기술 성장 융복합기술 발전	녹색기술 성장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재정리.

2.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⁶⁾

세계 및 한국의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2030년까지 이어질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는 고령화 사회,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와 환경중시, 과학기술발전, 새로운 가치지향으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래에는 고령화시대로,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6)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을 재정리함.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등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고령 농업인의 생계안정 및 노인복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영향으로 농업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친화적인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의 농업생산 주력을 형성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 또한 예상된다.

둘째, 현재 세계는 모든 면에서 글로벌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공조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대응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대응정도에 따라 지역간·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농업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무한경쟁에 적응하면서 농산물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30년에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반도의 아열대화로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가 재편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및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곡물의 생산 감소와 채소류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에, 새로운 성장작목(유지작물·바이오매스자원·미세조류)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첨단과학과 융복합기술들이 농업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첨단산업기술이 다양하게 농업부문에 활용되는 추세로, 농업분야에도 점진적으로 6T(IT, NT, BT, ET, ST, CT)가 상용화 되며, 자동화·로봇화·무인화로 농업인력 소요 감소와 정밀농업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수용 격차가 확대되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농촌경관, 전통·문화유산 등의 가치 및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새로운 가치 지향의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 사회는 개성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시대로, 식품안전성과 맛·영양의 중시,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 산업화, 귀농·귀촌 증가, 농촌을 여가·휴양·전원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이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8) 세계와 한국의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과급 영향
고령화 사회 (장수 시대)	○ 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수명 연장 ○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장수에 대한 니즈 ○ 수요 증가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시대)	○ FTA 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 등으로 발전 ○ 미국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 '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	○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증시 (녹색산업시대)	○ 지구온난화로 '30년 기온 1.2℃ 상승, 강수량 5%가량 증가 ○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 유지작물, 미세조류 등 확산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과학기술발전 (융복합기술시대)	○ INBEC기술의 보편화·융합화 ○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 로봇상용화로 '25년 노동시장 50% 대체 ○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 경제성장 탈피, 삶의 질 중시 ○ 개성, 집단지성 중시 ○ 지식창조사회 발전 ○ 여가 및 문화 가치 증대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어메니티, 농촌관광 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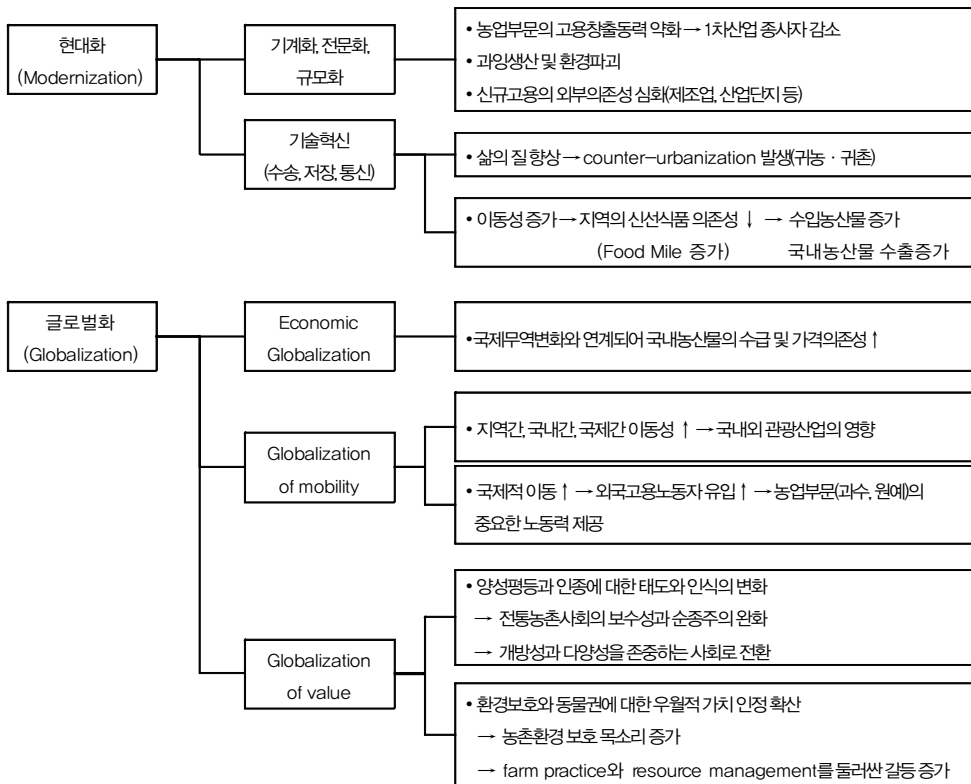
제3절 경남의 농업·농촌 환경분석

1. 분석틀 : 현대화와 글로벌화의 영향

농업·농촌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여러가지 들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화(Modernization)와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들 수 있다(Woods, 2005).

현대화는 기계화·전문화·규모화와 수송·저장·통신 등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기계화·전문화·규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어 1차산업 종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신규고용은 제조업이나 산업단지 등의 외부여건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생산력이 향상되어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

안전성의 붕괴와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수송·저장·통신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도시화가 확대된다. 하지만 과도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악화된 반면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다. 이로 인하여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송과 저장기능과 수단의 발달은 농산물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지역 내 농산물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푸드마일(food mile)을 증가시킨다. 푸드마일 증가로 해외 농산물의 수입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3) 농업·농촌환경 분석틀

글로벌화는 경제적 글로벌화(Economic Globalization), 이동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Mobility), 가치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Value)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내경제 여건이 국제무역변화와 연계되어 국내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의 글로벌화는 지역간·국내간·국제간 이

동성을 향상시켜 국내외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동의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증가시켜 향후 농업부문(특히 과수나 원예)의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글로벌화는 양성평등과 인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야기시켜 전통 농촌사회의 보수성과 순종주의를 완화시키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농촌 환경의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가되어 농업경영활동(Farm-practice)과 자원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업 및 농촌경제의 변화

1) 토지 생산성 증대

경남의 토지 생산성을 살펴보면 '03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조미채소가 '03년 24.50톤/ha에서 '11년 35.26톤/ha으로 '03년 대비 43.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채류는 '03년 35.06톤/ha에서 '10년 44.46톤/ha으로 26.8% 증가, 식량작물은 '03년 3.67톤/ha에서 '11년 4.54톤/ha으로 23.5% 증가하여 조미채소, 과채류, 식량작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엽채류의 경우 '03년 45.27톤/ha에서 '10년 44.92톤/ha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경남의 토지 생산성

(단위:톤/ha·%)

구분	'03	'05	'07	'09	'10	'11	'03대비 증가율
식량작물	3.67	4.35	4.27	4.78	4.38	4.54	23.5
과채류	35.06	39.24	41.97	43.16	44.46	-	26.8
엽채류	45.27	53.40	51.31	50.48	44.92	-	-0.8
근채류	43.19	48.52	48.51	48.30	42.90	47.20	9.3
조미채소	24.50	28.04	32.60	36.05	36.25	35.26	43.9

자료)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이와 같이 시설의 현대화 및 농기계의 현대화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현대화가 더욱 발전한다면 면적당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

'11년 전국의 1차산업 종사자는 1,540천명으로 '04년 1,824천명의 84.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04년 이후 연평균 2.4%씩 감소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산업 종사자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04년 8.1%에서 '11년 6.4%로 1.7%(p) 감소하였다.

경남의 경우에도 '11년 1차산업 종사자는 183천명으로 '04년 239천명의 76.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경남의 경우 '04년 이후 연평균 3.7%씩 감소하여 전국치보다 더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산업 종사자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04년 16.2%에서 '11년 11.6%로 4.6%(p) 감소하여 1차산업 종사자의 유출이 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2-10) 경남의 1차산업 종사자 추이

(단위:천명·%)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연평균 증감율
전국	1,824 (8.1)	1,813 (7.9)	1,781 (7.7)	1,723 (7.4)	1,686 (7.2)	1,648 (7.0)	1,566 (6.6)	1,542 (6.4)	-2.4
경남	239 (16.2)	238 (16.2)	227 (15.3)	218 (14.5)	217 (14.2)	191 (12.6)	186 (12.1)	183 (11.6)	-3.7

주)()내는 전산업 종사자 수 중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전국의 농가판매가격지수('05=100)는 '04년 104.2에서 '08년 99.4로 대체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08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11년 현재 120.2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05=100)는 '04년 96.3에서 '11년 12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재구매 등 경영비 상승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이용하여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를 산출한 결과 '04년 108.2에서 '08년 86.2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08년을 기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11년 현재 패리티지수는 94.3을 나타내고 있다. 각 년도별 패리티지수를 보면 '04년에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높아 교역조

건이 유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더 높아 교역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11) 농가교역조건 동향(2005=100, 전국)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농가판매가격지수	104.2	100.0	99.2	101.4	99.4	101.0	108.1	120.2
농가구입가격지수	96.3	100.0	101.8	104.8	115.3	120.4	122.2	127.4
농가교역조건	108.2	100.0	97.4	96.8	86.2	83.9	88.5	94.3

주)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

자료)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각년도

4) 농림수산물의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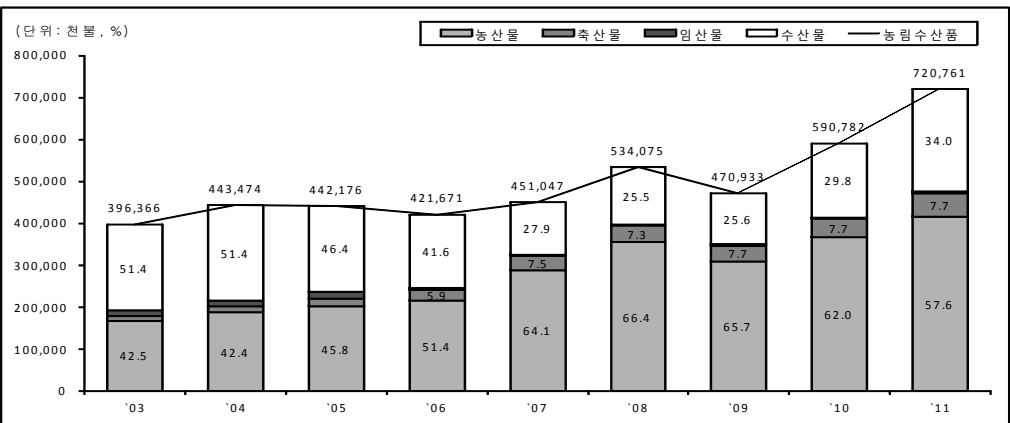
경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03년 3억9,637만불에서 '11년 현재 7억2,076만불로 연평균 7.8%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7년까지는 4억만불 초반 수준이었으나 '08년도에 5억3천만불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09년 수출 감소로 인하여 4억8천만불 수준으로 하락한 후 최근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03년 1억6,838만불에서 '11년 4억1,502만불로 연평균 11.9%씩, 축산물이 '03년 1,133만불에서 '11년 5,555만불로 연평균 22.0%씩, 수산물은 '03년 2억381만불에서 '11년 2억4,470만불로 연평균 2.3%씩 증가하였다. 반면에 임산물은 '03년 1,285만불에서 '11년 549만불로 연평균 10.1%씩 감소하였다. 농림수산물 수출액에서 품목별 차지비중은 '11년 현재 농산물의 수출비중이 57.6%로 가장 높으며, 수산물이 34.0%, 축산물 7.7%, 임산물 0.8%순으로 나타났다. '03년도 품목별 차지비중과 비교하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출비중이 각각 15.1%(p), 4.8%(p)씩 증가하였으며, 임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2.4%(p), 17.4%(p)씩 감소하였다. '07년 이후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출액 비중은 큰 변화없이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11년 들어서 농산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2-12) 경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단위:천불·%)

구 분	'03	'05	'07	'08	'09	'11	연평균 증감율
농림수산물	396,366 (100.0)	442,176 (100.0)	451,047 (100.0)	534,075 (100.0)	470,933 (100.0)	720,761 (100.0)	7.8
농산물	168,381 (42.5)	202,500 (45.8)	288,927 (64.1)	354,880 (66.4)	309,538 (65.7)	415,016 (57.6)	11.9
축산물	11,326 (2.9)	18,688 (4.2)	33,770 (7.5)	39,174 (7.3)	36,428 (7.7)	55,554 (7.7)	22.0
임산물	12,845 (3.2)	15,853 (3.6)	2,496 (0.6)	3,807 (0.7)	4,436 (0.9)	5,491 (0.8)	-10.1
수산물	203,814 (51.4)	205,135 (46.4)	125,853 (27.9)	136,214 (25.5)	120,531 (25.6)	244,700 (34.0)	2.3

주) ()내는 농림수산물 수출액 중 품목별 차지비중임.
자료)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2-4) 경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추이

3. 사회 및 인구학적 변화

1)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남의 농가인구는 '03년 406,333명에서 '11년 336,641명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반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03년 116,845명에서 '11년 121,474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였다. 노령인구의 차지비중은 '03년 28.8%에서 '11년 36.1%로 7.3%(p)증가하였다. 경남의 경우 농가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농촌노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수준은 전국(3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3) 경남의 농촌인구 추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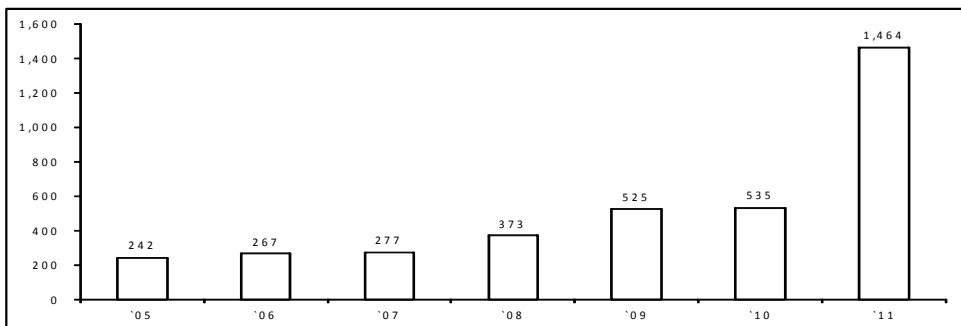
구분		'03	'05	'07	'09	'10	'11	연평균 증감율
전국	농가인구	3,530,102	3,433,573	3,274,091	3,117,322	3,062,956	2,962,113	-2.2
	65세 이상인구	981,966 (27.8)	999,306 (29.1)	1,051,701 (32.1)	1,067,262 (34.2)	972,679 (31.8)	999,517 (33.7)	0.2
	농가인구	406,333	392,926	368,240	343,591	347,499	336,641	-2.3
전국	65세 이상인구	116,845 (28.8)	122,928 (31.3)	125,570 (34.1)	126,061 (36.7)	116,586 (33.6)	121,474 (36.1)	0.5

자료)통계청(www.kosis.kr).

2) 귀농·귀촌의 증가

경남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05년 242세대에 불과하였으나 '10년 535세대로 증가하였으며, '11년에 1,464세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경남의 경우 귀농·귀촌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농촌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젊은 농업인의 귀농·귀촌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농촌활력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던 귀농가구의 경우 기존의 농촌인구와의 요구도가 상이하고, 도시의 고소득층 및 전문가 집단의 유입으로 인하여 농촌인구 계급이 재구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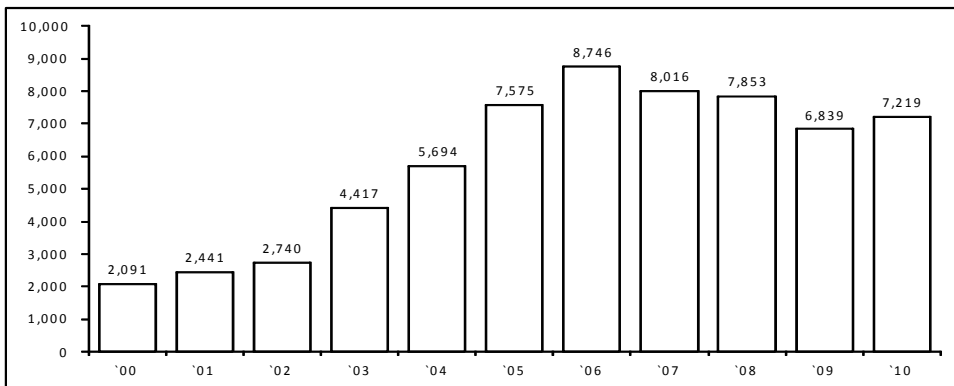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그림2-5) 경남의 귀농가구 수

3) 다문화 가구의 증가

'00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읍·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00년 2,091명 이었던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10년 7,219명으로 연평균 13.2%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 8,746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10년에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자료)통계청(2011)·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재인용.

(그림2-6)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 유입건수 추이(전국)

(표2-14) 경남의 다문화 가구 수('10)

(단위:세대·%)

구분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친족가구					비친족 가구
		계	내국인 (귀화 등)	외국인	계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등)	내국인 (출생) +외국인	외국인 +외국 인	기타	
경남	22,044 (100.0)	6,326 (28.7)	192 (0.9)	6,134 (27.8)	12,074 (54.8)	3,240 (14.7)	5,917 (26.8)	2,515 (11.4)	402 (1.8)	3,644 (16.5)
도시	13,174 (100.0)	4,438 (33.7)	129 (1.0)	4,309 (32.7)	6,933 (52.6)	1,618 (12.3)	3,218 (24.4)	1,868 (14.2)	229 (1.7)	1,803 (13.7)
농어촌	8,870 (100.0)	1,888 (21.3)	63 (0.7)	1,825 (20.6)	5,141 (58.0)	1,622 (18.3)	2,699 (30.4)	647 (7.3)	173 (2.0)	1,841 (20.8)

주1)내국인(출생)은 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뜻함.

2)내국인(귀화 등)은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귀화,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뜻함.

3)자료에서 '다문화 가구'의 개념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규정된 '다문화 가정'과 상이함.

4)도시지역은 행정구역이 동부인 지역,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읍면부인 지역으로 구분함.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0년 기준 경남의 다문화 가구수는 22,044세대로 이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는 8,870세대로 40.2%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다문화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1.3%로 도시(33.7%)보다 낮아 결혼을 전제로 성립한 다문화 가구가 도시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비친족 가구원의 비율이 20.8%로 도시지역(13.7%)에 비해 높아 결혼을 전제로 성립한 다문화 가구뿐 만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농어촌지역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열악한 기초생활 환경

지역별 기초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상수도보급률(%), 1일 1인당 급수량(ℓ), 인구 천명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개소/천명), 쓰레기수거구역 인구 비율(%)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군부의 경우 시부에 비해 기초생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보급의 경우 군부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09년 56.3%로 '05년(49.7%)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의 60.2% 수준으로 전국과 시부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1인당 급수량 역시 '09년 232 ℓ 로 '05년(199 ℓ)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의 69.9% 수준으로 전국과 시부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는 '08년 천명당 4.4개소로 전국 평균의 163%로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집적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5) 기초생활 환경의 비교

구분	상수도보급률 (%)		1일 1인당 급수량(L)		인구 천명당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수(개소/천명)			쓰레기수거구역 인구비율(%)		
	2005	2009	2005	2009	2005	2008	2009	2005	2008	2009
전국	90.7 (100.0)	93.5 (100.0)	351 (100.0)	332 (100.0)	2.5 (100.0)	2.7 (100.0)	-	100.0 (100.0)	100.0 (100.0)	-
경남 시부	89.0 (98.1)	92.9 (99.4)	328 (93.4)	319 (96.1)	3.7 (148.0)	3.9 (144.4)	4.2	99.0 (99.0)	99.0 (99.0)	99.1
경남 군부	49.7 (54.8)	56.3 (60.2)	199 (56.7)	232 (69.9)	4.1 (164.0)	4.4 (163.0)	4.7	131.7 (131.7)	99.8 (99.8)	100.0

주1) ()내는 전국 평균(=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을 포함.

3) 인구 천명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인구기준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남 통계연보, 각년도.

4. 환경적 변화

1) 경지면적 감소

경남의 경지면적은 '06년 170.5천ha에서 '11년 157.0천ha로 연평균 1.6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연평균 감소율(1.16%)보다 높아 경지면적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⁷⁾ 이는 경남 농촌의 농업기능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16) 경남의 경지면적 추이

(단위:ha·%)

구분	'06	'07	'08	'09	'10	'11	연평균 증감율
전국	1,800,470	1,781,579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1.16
경남	170,530	168,551	166,674	164,122	159,651	156,992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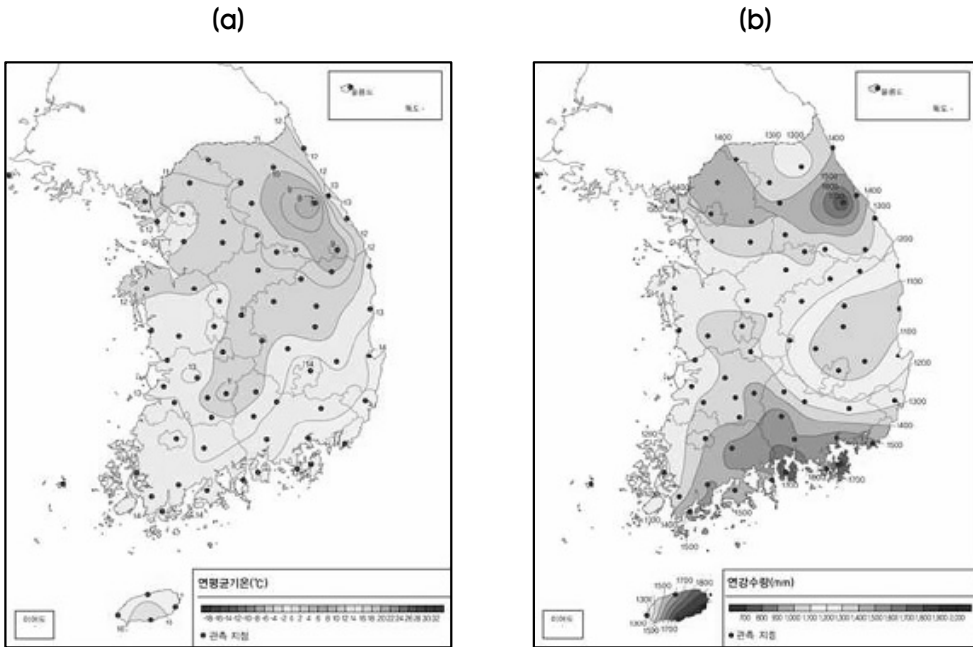
자료)통계청(www.kosis.kr).

2) 아열대기후로의 변화

IPCC 4차 보고서('07)에 따르면 '80~'99년 지구의 연간 평균온도 대비 기온이 1℃ 상승하는 경우 양서류의 멸종과 산호의 백화현상이 증가, 1.5~2.5℃ 상승하는 경우 약 20~30%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3℃이상 상승하는 경우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멸종 등 상당한 생태계 피해 발생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11)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 일부지역은 '11~'40년에 아열대 기후로, '41~'70년에는 남해안 전 지역이 아열대기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열대 기후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가뭄 및 홍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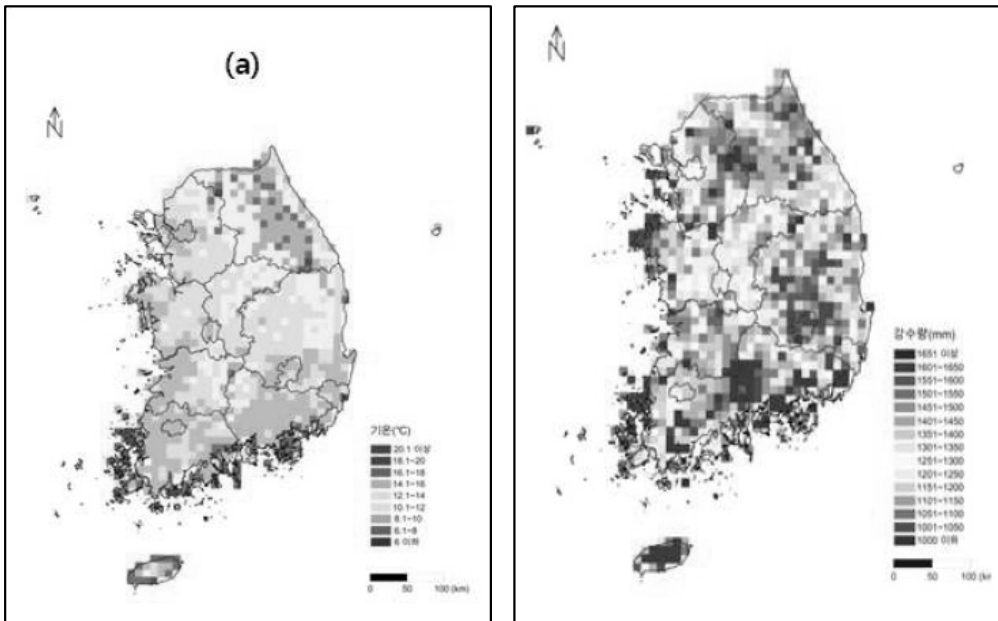
7)경지면적 감소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중에서 충북(-1.65%)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음.

8)경남의 연 강수량 추이를 보면 '08년(876mm)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0년 1,488mm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7~9월 강수의 집중정도 또한 '08년 31.5%에서 '10년 57.9%로 증가 추세임.



자료)국립환경과학원,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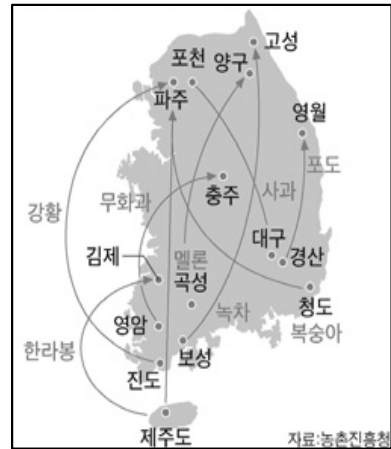
(그림2-7) 한반도 1981~2010년 연평균 기온(a), 연강수량(b)



자료)국립환경과학원, 2011.11.

(그림2-8) 한반도 2011~2040년 연평균 기온(a), 연강수량(b)

이러한 기후변화로 농업지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제주도 특산물로 알려진 한라봉이 충북에서도 재배되는 등 주요 산지가 북상하면서 지역 특산물 목록까지 바뀌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도 농업기후자원이나 농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품종과 재배양식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농촌진흥청, 2011.

(그림2-9) 북상하는 주요 작물재배지

제4절 소결

세계적으로 개방화, 곡물가격의 급등, 식량수요 및 소비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첨단기술과의 융합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장개방화 대응, 중자산업 발전 등 주요작물 변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러바니제이션 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계 및 한국의 메가트렌드를 토대로 2030년까지 이어질 농업·농촌의 메카트렌드는 고령화 사회·글로벌경제·기후변화와 환경중시·과학기술발전·새로운 가치 지향으로 요약된다.

현대화와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경남의 농업·농촌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농업·농촌 경제 측면에서는 토지생산성 증대·1차 종사자 감소·농가교역조건 악화·농식품의 수출증가라는 특징을 보인다. 사회 및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귀농 및 귀촌의 증가·다문화 가구의 증가·기초생활 환경의 열악 등이 제시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지면적의 감소·아열대기후로의 변화 등이 중요한 변화 양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성 하락과 농촌지역의 활력 감소가 예상되므로 탈농촌화를 방지하고,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각종 FTA 발효

등 농업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세계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 종자산업 발전 등에 발맞추어 농업에 대한 R&D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의 주요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농촌의 메카트렌드에 맞추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화 친화산업 육성, 글로벌 경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작목(유지작물·바이오매스·미세조류 등) 발굴 및 육성, 첨단산업 기술에 활용한 첨단기술농업 육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촌이 생산을 위한 일터의 공간에서 일터·삶터·쉼터의 공간으로 가치가 전환되는 추세로, 경남의 농촌도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⁹⁾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9) 농촌과 도시의 환경 혼재,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어울려 생활하는 현상.

제3장 경남 농가소득 구조분석

제1절 소득격차의 문제

제2절 농가소득증대의 문제

제3절 농업소득증대의 문제

제4절 농업생산성의 문제

제5절 농가부채의 문제

제6절 소결

제3장 경남 농가소득 구조분석

제1절 소득격차의 문제

1.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경남 농가와 도시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농가판매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경남의 자료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치를 이용하였으며, 월간 근로자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으며, 경남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였다.

경남의 농가소득은 '03년 18,449천원에서 '11년 26,450천원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3년부터 '07년까지 연평균 8.5%씩 증가하였으며, '0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2%씩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소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03년 41,957천원에서 '11년 47,403천원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가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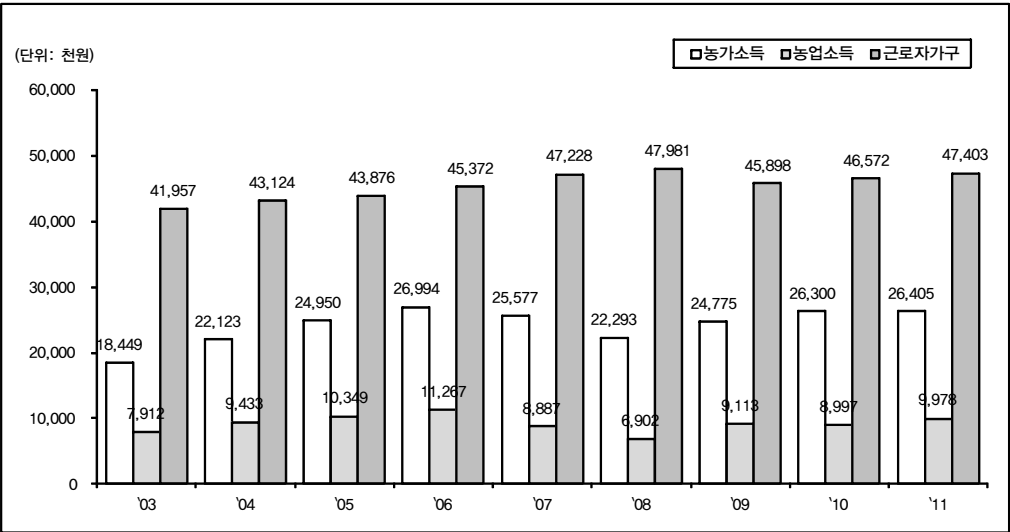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03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44.0%에 불과하였으며, '11년 현재에는 55.7%로 1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서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년부터 '06년까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07년과 '08년 농가소득이 급감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08년 이후 다시 농가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다시 해소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03년 18.9%에서 '11년 21.0%로 2.1%(p)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표3-1) 도농 가구당 소득비교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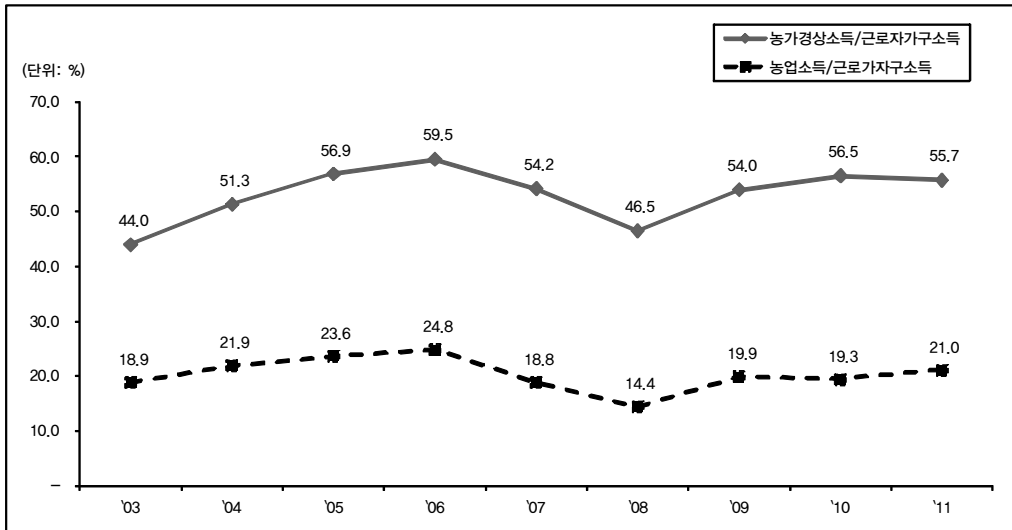
연도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근로자 (A/C×100)	농업/근로자 (B/C×100)
'03	18,449	7,912	41,957	44.0	18.9
'04	22,123	9,433	43,124	51.3	21.9
'05	24,950	10,349	43,876	56.9	23.6
'06	26,994	11,267	45,372	59.5	24.8
'07	25,577	8,887	47,228	54.2	18.8
'08	22,293	6,902	47,981	46.5	14.4
'09	24,775	9,113	45,898	54.0	19.9
'10	26,300	8,997	46,572	56.5	19.3
'11	26,405	9,978	47,403	55.7	21.0
연평균 증가율					
'03~'11	4.6	2.9	1.5		
'03~'07	8.5	2.9	3.0		
'09~'11	3.2	4.6	1.6		

주1)'08년의 경우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시점임.
2)농가소득은 농가소득에서 비경상소득(경조수입, 사고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3)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경남의 자료이나, 근로자 가구소득은 전국치임.
4)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5)근로자 가구소득은 경남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10=100).
6)근로자 가구소득은 월간 근로자소득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으로 환산함.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1) 도시와 농가가구당 소득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2)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2. 소농과 대농간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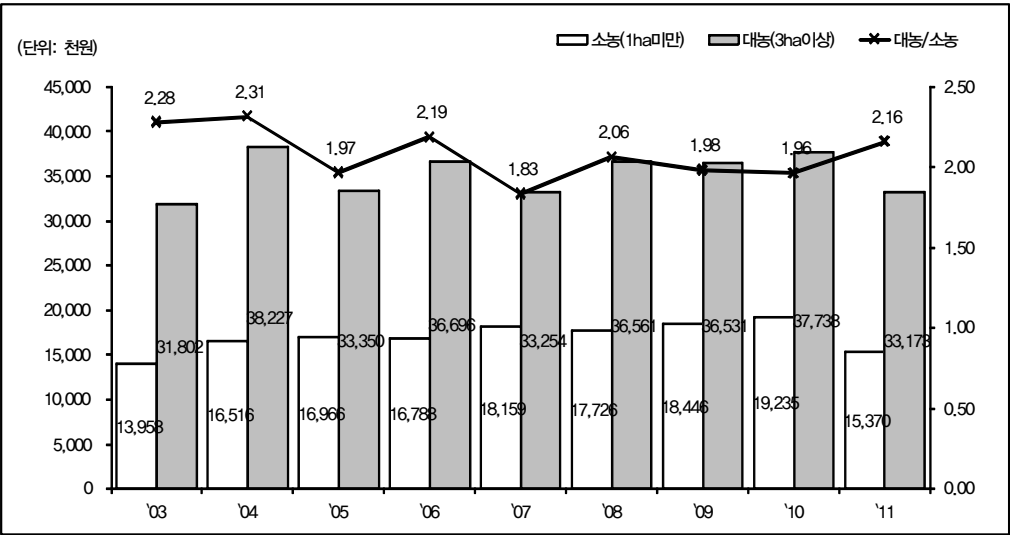
소농과 대농간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을 이용하였으며, 경남의 자료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농업소득을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였다. 소농과 대농간의 구분은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농은 재배면적이 1ha미만인 가구로 대농은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소농 가구의 농업소득은 '03년 13,958천원에서 '11년 15,370원으로 연평균 1.2%의 증가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0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5.9%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농의 경우에도 '03년 31,802천원에서 '11년 33,173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1.1%씩 증가한 반면 '0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과 대농간의 농가소득비(=대농/소농)를 보면 '11년 2.16배로 대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9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에 대소농 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져 농촌사회 안에서도 소득격차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2) 대소농간 소득비교(전국) (단위:천원·%)

연도	소농(1ha미만)			대농(3ha이상)			대소농간 농가소득비 (B/A)
	농가 소득(A)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 소득(B)	농업소득	농외소득	
'03	13,958	2,966	10,992	31,802	24,869	6,933	2.28
'04	16,516	4,775	11,741	38,227	29,499	8,728	2.31
'05	16,966	4,848	12,117	33,350	25,117	8,233	1.97
'06	16,788	4,305	12,483	36,696	27,863	8,832	2.19
'07	18,159	3,983	14,177	33,254	23,991	9,263	1.83
'08	17,726	3,825	13,901	36,561	26,144	10,418	2.06
'09	18,446	4,281	14,165	36,531	26,842	9,689	1.98
'10	19,235	4,970	14,264	37,738	27,917	9,821	1.96
'11	15,370	2,732	12,638	33,173	23,419	9,754	2.16
연평균 증가율							
'03~'11	1.2	-1.0	1.8	0.5	-0.7	4.4	
'03~'07	6.8	7.6	6.6	1.1	-0.9	7.5	
'09~'11	-5.9	-13.9	-3.7	-3.2	-4.4	0.2	

주1)'08년의 경우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시점임.
2)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며,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3) 대농간 농가경상소득 차이(전국)

제2절 농가소득증대의 문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농가경상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되어 진다. 항목별로 농업소득은 '03년 7,912천원에서 '11년 9,978천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2.9%씩, '09~'11년까지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최근에 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농가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42.9%에서 '11년 37.8%로 5.1%(p) 감소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의 비중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은 '03년 8,260천원에서 '11년 11,534천원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8.1%씩, '09~'11년까지 연평균 9.3%씩 증가하였다. 농가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44.8%에서 '11년 43.7%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간의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농외소득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경남의 농가 가구당 소득

(단위:천원·%)

연도	농가경상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계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03	18,449(100.0)	7,912(42.9)	8,260(44.8)	1,956(10.6)	6,305(34.2)	2,277(12.3)
'04	22,123(100.0)	9,433(42.6)	8,870(40.1)	2,110(9.5)	6,759(30.6)	3,820(17.3)
'05	24,950(100.0)	10,349(41.5)	9,222(37.0)	2,436(9.8)	6,785(27.2)	5,379(21.6)
'06	26,994(100.0)	11,267(41.7)	9,902(36.7)	3,204(11.9)	6,699(24.8)	5,825(21.6)
'07	25,577(100.0)	8,887(34.7)	11,281(44.1)	3,865(15.1)	7,416(29.0)	5,409(21.1)
'08	22,293(100.0)	6,902(31.0)	9,107(40.9)	2,785(12.5)	6,322(28.4)	6,284(28.2)
'09	24,775(100.0)	9,113(36.8)	9,661(39.0)	2,615(10.6)	7,047(28.4)	6,001(24.2)
'10	26,300(100.0)	8,997(34.2)	10,684(40.6)	2,518(9.6)	8,166(31.0)	6,619(25.2)
'11	26,405(100.0)	9,978(37.8)	11,534(43.7)	3,704(14.0)	7,830(29.7)	4,893(18.5)
연평균 증가율						
'03~'11	4.6	2.9	4.3	8.3	2.7	10.0
'03~'07	8.5	2.9	8.1	18.6	4.1	24.1
'09~'11	3.2	4.6	9.3	19.0	5.4	-9.7

주1)'08년의 경우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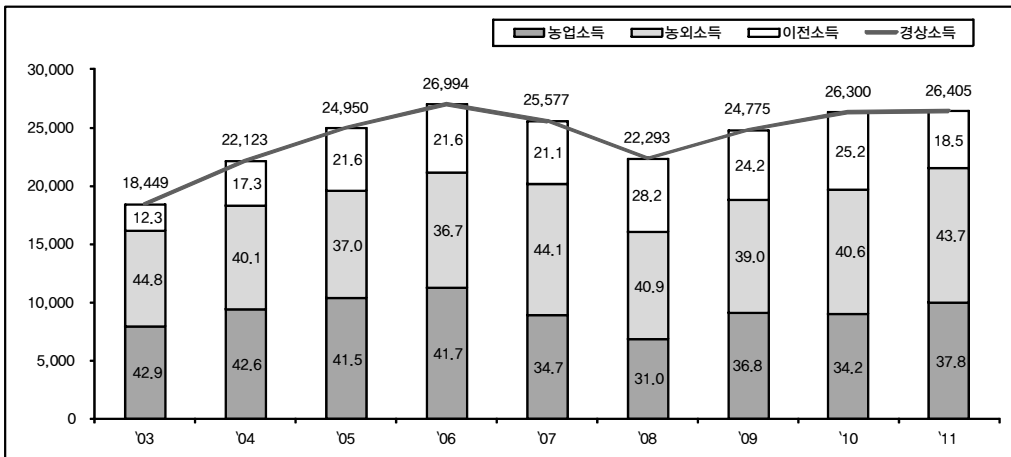
2)농가경상소득은 농가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3)농가경상가격을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이전소득은 '03년 2,277천원에서 '11년 4,893천원으로 연평균 10.0%씩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24.1%씩 증가하였으나, '09~'11년까지 연평균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년에 들어서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농가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12.3%에서 '11년 18.5%로 6.2%(p) 증가하였으며, '08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의 증가세와 농가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농외소득의 증가세가 높아 앞으로도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을 통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4) 경남의 농가 가구당 소득구조

제3절 농업소득증대의 문제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요인을 보기 위해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노무비, 중간재비를 이용하였다. 농업총수입은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였으며, 농업경영비와 노무비, 중간재비는 농가구입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였다.

농업총수입은 '03년 20,653천원에서 '10년 24,223천원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는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으나, '09~'10년까지 14.1%씩 감소하는 등 '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농업수입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11년에 들어 27,816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03년 14,891천원에서 '10년 13,469천원으로 연평균 1.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2.7%씩 증가하였으나, '09~'10년까지 15.9%씩 감소하는 등 '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농업경영비 지출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년에 들어 농업경영비가 16,830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경영비의 비중을 보면 '03년 72.1%에서 '10년 55.6%로 16.5%p 감소하여 농업경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영비 차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3-4) 경남의 농업소득 및 경영비

(단위:천원·%)

연도	농업 총수입 (A)	농업 경영비 (B)	노무비 (C)	중간재비 (D)	경영비 비중 (B/A×100)	노무비 비중 (C/B×100)	중간재비 비중 (D/B×100)
'03	20,653	14,891	861	9,096	72.1	5.8	61.1
'04	23,966	15,726	887	9,816	65.6	5.6	62.4
'05	26,276	15,928	783	10,384	60.6	4.9	65.2
'06	27,760	16,071	943	10,068	57.9	5.9	62.6
'07	26,024	16,581	991	10,227	63.7	6.0	61.7
'08	20,424	11,657	688	6,669	57.1	5.9	57.2
'09	28,196	16,008	664	10,875	56.8	4.1	67.9
'10	24,223	13,469	464	8,670	55.6	3.4	64.4
'11	27,816	16,830	-	-	60.5	-	-
연평균 증가율							
'03~'10	2.3	-1.4	-8.5	-0.7			
'03~'07	5.9	2.7	3.6	3.0			
'09~'10	-14.1	-15.9	-30.1	-20.3			

주1)'08년의 경우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시점임.

2)농업총수입을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3)농업경영비와 노무비, 중간재비는 농가구입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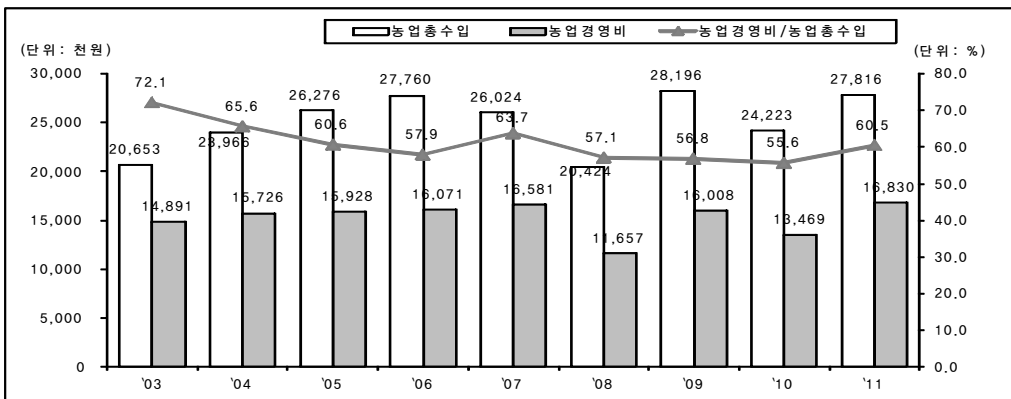
4)중간재비=경영비-(노임+임차료+감가상각비)로 계산함.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농업경영비 중 노무비는 '03년 861천원에서 '10년 464천원으로 연평균 8.5%씩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였으나, '09~'10년까지 30.1%씩 감소하는 등 '07년 이후 노무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농업경영비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5.8%에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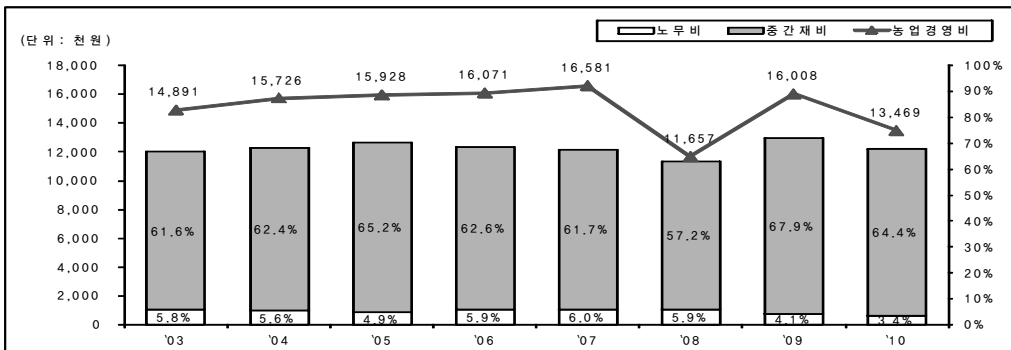
년 3.4%로 2.4%(p) 감소하였다.

농업경영비 중 중간재비는 '03년 9,096천원에서 '10년 8,670천원으로 연평균 0.7%씩 감소하여 노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으나, '09~'10년까지 20.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경영비에서 중간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61.1%에서 '10년 64.4%로 오히려 3.3% 증가하였다. 농업경영비에서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 인력의 노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노무비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유류비 및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중간재비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유가와 사료비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재비의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5) 경남의 농업총수입과 경영비 추이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6) 경남의 농업경영비 구조

제4절 농업생산성의 문제

농업생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노동 시간당 농업소득·단위 자본당 농업소득·단위면적당 농업소득을 이용하고자 한다. 경남의 노동시간당 농업소득은 '03년 4.7천원에서 '10년 9.3천원으로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5.8%씩, '09~'10년까지 16.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에 다소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이는 농업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노동시간이 감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단위 자본당 농업소득은 '03년 260.0천원에서 '10년 285.8천원으로 연평균 1.4%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0.7%씩 감소하였으나, '09~'10년까지는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노동 및 토지에 대한 자본재투입의 증대로 인하여 저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5) 경남의 농가 생산성

(단위:천원·%)

연도	농업노동 시간당 농업소득	단위 자본당 농업소득	단위 면적당 농업소득
'03	4.7	260.0	687.8
'04	6.7	310.0	836.9
'05	7.0	324.0	931.0
'06	7.1	330.6	978.8
'07	5.9	252.5	791.9
'08	6.0	218.3	716.3
'09	7.9	237.6	950.5
'10	9.3	285.8	949.1
연평균 증가율			
'03~'10	10.3	1.4	4.7
'03~'07	5.8	-0.7	3.6
'09~'10	16.8	20.3	-0.1

주)농업소득은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단위 면적당 농업소득은 '03년 687.8천원에서 '10년 949.1천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였으나, '09~'10년까지 0.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농업소득 또한 단위 자본당 농업소득과

유사하게 '06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09년에 큰 상승을 보인 후 최근까지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업생산성은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당 농업소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위 자본당 농업소득의 저성장은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인한 농업경영여건의 악화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농가부채의 문제

경남의 농가부채에 대한 자료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부채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았다. 농가부채액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눠 실질가격으로 전환하여 이용하였다. 농가부채는 '03년 28,997천원에서 '11년 20,436천원으로 연평균 4.3%씩 감소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0.4%씩, '09~'11년까지 연평균 3.2%씩 감소하였다. 농가경상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감소하여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03년 157.2%에서 '11년 77.4%로 79.8%(p)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농업관련 부채는 '03년 20,878천원에서 '11년 11,998천원으로 연평균 6.7%씩 감소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4.2%씩, '09~'11년까지 연평균 4.4%씩 감소하였다. 농가부채 중 농업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72.0%에서 '11년 58.7%로 13.3%(p) 감소하여 농업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대비 농업부채의 비중은 '03년 113.2%에서 '11년 45.4%로 67.8%(p)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가계 및 기타부채는 '03년 8,119천원에서 '11년 8,438천원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03~'07년까지 7.8%씩 증가한 반면, '09~'11년까지 연평균 1.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 중 가계 및 기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28.0%에서 '11년 41.3%로 13.3%(p) 증가하여 농가부채 중 의료비·교통비 등의 가계 및 기타부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농가부채를 보면 농업관련 부채가 큰 감소를 보인 반면, 가계성 부채(가계 및 기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 부채(농업관련)가 줄어든 것은 경영지원 및 직불제 등의 소득보전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3-6) 농가 가구당 부채(전국)

(단위:천원.%)

연도	농가경상소득 (A)	농가부채			소득대비 부채비중 (B/A×100)	소득대비 농업부채비 중 (C/A×100)
		총계(B)	농업관련(C)	가계 및 기타		
'03	18,449	28,997(100.0)	20,878(72.0)	8,119(28.0)	157.2	113.2
'04	22,123	27,925(100.0)	19,116(68.5)	8,809(31.5)	126.2	86.4
'05	24,950	27,210(100.0)	17,701(65.1)	9,508(34.9)	109.1	70.9
'06	26,994	27,663(100.0)	17,482(63.2)	10,180(36.8)	102.5	64.8
'07	25,577	28,574(100.0)	17,597(61.6)	10,977(38.4)	111.7	68.8
'08	22,293	22,364(100.0)	14,042(62.8)	8,324(37.2)	100.3	63.0
'09	24,775	21,817(100.0)	13,139(60.2)	8,678(39.8)	88.1	53.0
'10	26,300	22,267(100.0)	13,407(60.2)	8,860(39.8)	84.7	51.0
'11	26,405	20,436(100.0)	11,998(58.7)	8,438(41.3)	77.4	45.4
연평균 증가율						
'03~'11	4.6	-4.3	-6.7	0.5		
'03~'07	8.5	-0.4	-4.2	7.8		
'09~'11	3.2	-3.2	-4.4	-1.4		

주1)'08년의 경우 표본개편에 의한 시계열 단층이 발생한 시점임.

2)농가경상소득은 농가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3)농가경상소득은 농가판매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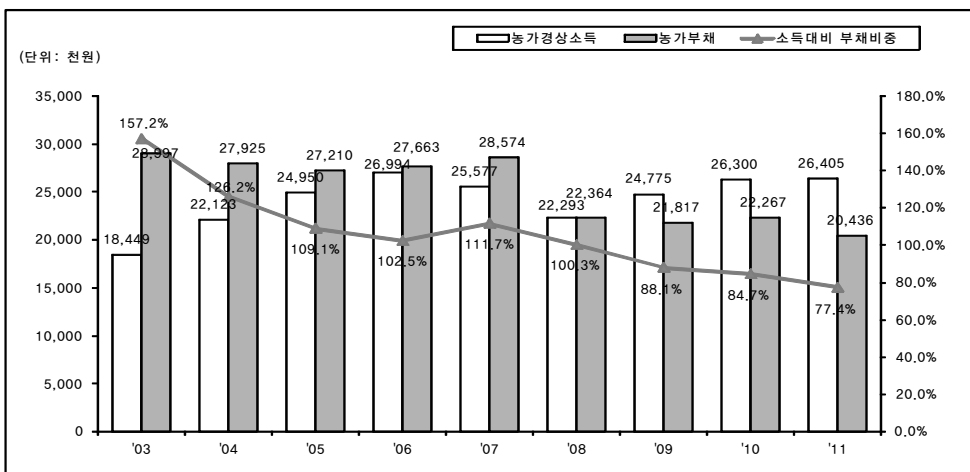
4)부채액은 연도말 기준임.

5)부채액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누워 실질가격으로 전환함(2005=100).

6)농업관련 부채액은 농업용과 겸업용의 합이며, 가계 및 기타 부채액은 가계용과 기타용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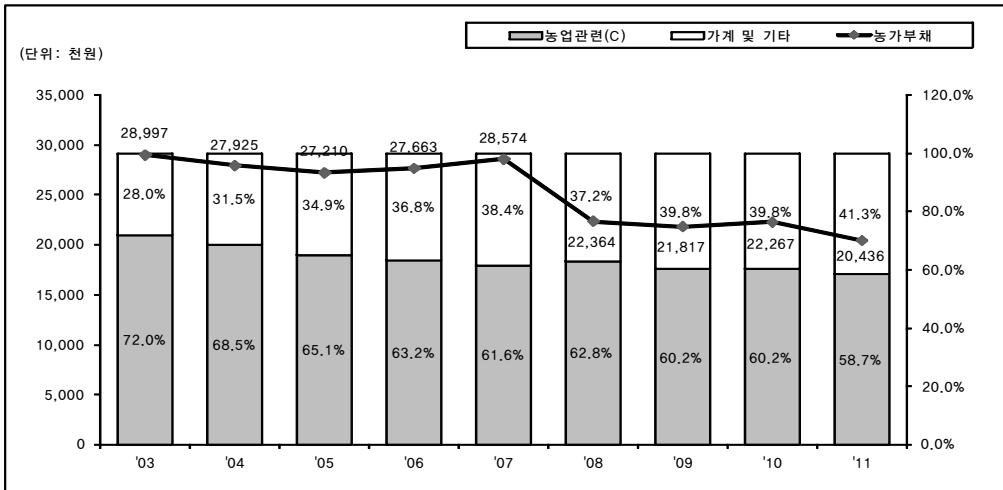
7)()내는 농가부채 총액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7) 농가경상소득과 농가부채 추이



자료)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그림3-8) 농가부채중 농업관련부채 및 가계부채의 구성

제6절 소결

경남의 농가소득 구조 분석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근로자와 농가간의 소득격차는 2011년 55.7%로 2008년(46.5%)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대농과 소농의 격차 또한 2011년 2.16배로 2007년 1.83배 이후 증가하여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비중이 농업소득비중보다 높다는 점이다. 2011년 농외소득비중과 농업소득비중은 각각 43.7%·37.8%로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다.

셋째, 농업조수익 중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 인력의 노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노무비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유류비 및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중간재비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결국 경영비 절감의 핵심은 중간재비의 절감에 있다.

넷째, 농업생산성은 기계화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 농업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단위자본당 농업소득의 저성장은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인한 농업경영여건의 악화를 야

기시킬 우려도 예상된다.

다섯째,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2011년 77.4%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농가부채를 보면 생산성 부채(농업관련 부채)는 큰 감소를 보인 반면, 가계성 부채(가계 및 기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 부채(농업관련)가 줄어든 것은 경영지원 및 직불제 등의 소득보전관련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농간(대농과 소농간) 계층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별화된 계층별 소득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저소득(영세농·가족농) 계층은 토지와 자본규모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되 농외소득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외소득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농외소득사업을 개선·확대하여 비농업취업기회를 늘임으로써 이들에게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비농업취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지 관점(공공영역)에서 접근하거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관점에서 새로운 일과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소득계층에 해당하는 대농이나 중간농은 많은 경우 전업농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전문화·기계화·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소득의 파이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부문의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기존 소득원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고, 공공경제 영역에서는 직불제나 사회보장지원 등과 같은 소득 및 사회보장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10)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5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임.

제4장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제1절 소득증대와 창출의 이론적 방향과 좌표

제2절 농산업영역의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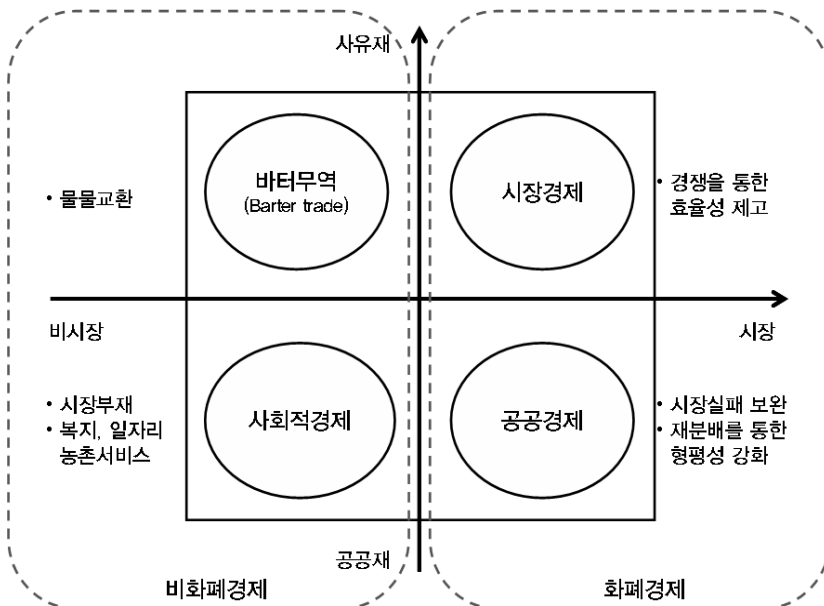
제3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제4절 소결

제4장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제1절 소득증대와 창출의 이론적 방향과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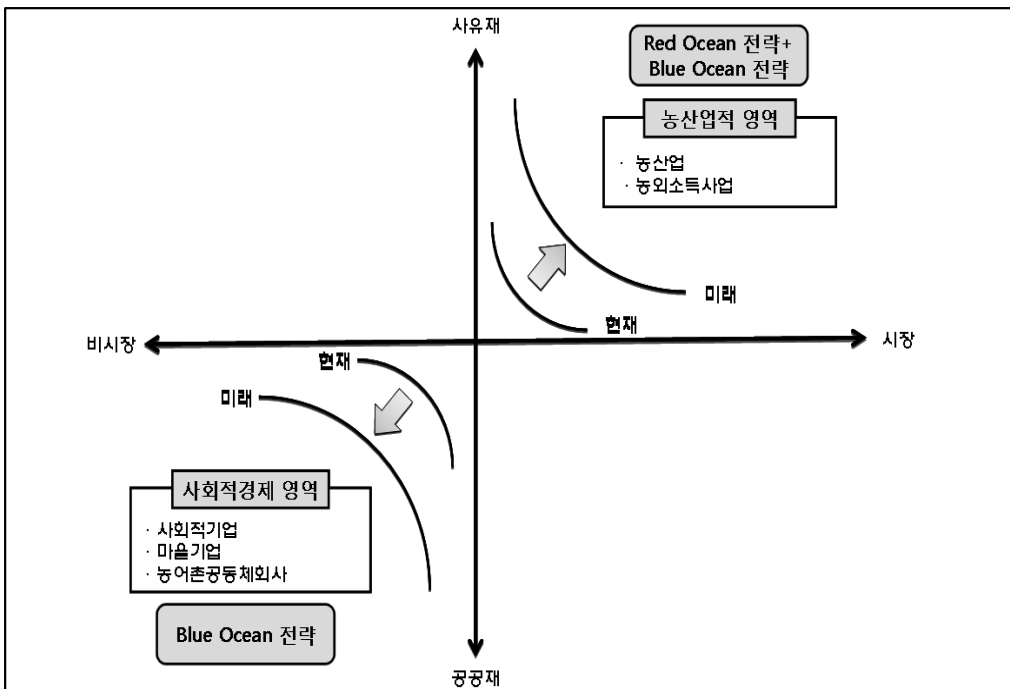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이 조직되는 공간과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하나의 축은 시장성을 지니는 화폐경제 영역과 비시장성을 지니는 비화폐경제 영역이며, 다른 하나의 축은 사유재인지 공공재인가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두 축으로 시장경제 영역(제1사분면)·바터무역 영역(제2사분면)·사회적경제 영역(제3사분면)·공공경제영역(제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장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화폐경제 영역)을 살펴보면 시장성과 사유재 성향을 지닌 시장경제 영역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반면에 시장성과 공공재 성향을 지닌 공공경제 영역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강화를 담당한다. 비시장성을 지니고 있는 영역(비화폐경제 영역)은 다시 사유재 성향을 지닌 바터무역은 물물교환이 주를 이루는 경제영역이며, 공공재 성향을 지닌 사회적경제 영역은 시장부재·복지 및 일자리 창출·농촌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는 경제영역이다.



(그림4-1) 비화폐경제와 화폐경제의 영역과 경제조직체의 개념적 위상

이러한 구분은 농촌지역에서 동일하게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경제활동 조직체가 활동하고 있다. 시장경제 영역은 농산업적 영역으로 농산업과 농외소득사업이 대표적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은 농촌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농산업적 영역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산업 및 사업의 경우는 경쟁력 강화(Red Ocean 전략)를 통한 생존이 필요하며, 동시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Blue Ocean 전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 및 연대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므로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Blue Ocean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농산업적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경남의 추진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4-2) 소득증대 방향

제2절 농산업영역의 성과와 과제

1. 농업소득사업의 성과와 과제

1) 농업부문

(1) 분석대상

경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정보가 공표되는 품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경남의 품목 중 '05~'10년까지의 자료가 확보가 용이한 43개 품목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사과·배·노지포도·양잠의 경우에는 '09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분석품목으로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로 크게 6개 분류로 구분된다.

(표4-1) 분석대상 품목

분류	구성품목
식량작물	맥주보리·노지꽃옥수수·시설꽃옥수수·고구마·봄감자·가을감자
노지채소	가을배추·고랭지배추·구마늘·노지시금치·당근·연근
시설채소	피망·파프리카·시설들깨잎·시설고추·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방울토마토·시설호박·시설참외·시설수박(축성·반축성)·시설딸기(축성·반축성)·시설멜론·시설양상추·알로에
과수	사과·배·복숭아·노지포도·단감·유자·참다래·매실
화훼	시설국화·시설장미
특용작물	녹차·오미자·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양잠

(2)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43개 품목에 대한 조수입과 부가가치액을 이용하였다. 생산성을 경쟁력 의의 함수라고 할 때 해당 품목의 경쟁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생산성 측정은 산출/투입비율로 측정되는데 품목과 투입 및 산출단위가 상이할 경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상호 비교가 가능한 생산성 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지표로 조수입과 부가가치액 지표가 있다. 조수입은 농산물의 시장 및 규모 성장성을 나타내는 반면, 부가가치는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성장성과 비용절감성을 동시에 포괄한다. 조수입과 부가가치액의 증감율을 두 축으로 하였을 때, 제1사분면은 지속성장·제2사분면은 조수입 급감/이익 선방·제3사분면은 지속적

위축·제4사분면은 이익없는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성장은 성장과 부가가치가 모두 양호한 상태이며, 조수입 급감/이익 선방은 성장은 부진한 반면 부가가치는 양호하여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속적 위축은 성장 및 부가가치가 모두 부진한 상태이며, 이익없는 성장은 성장은 양호한 반면 부가가치가 부진하여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림4-3) Position Matrix 정의(조수입-부가가치)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감률은 3개년도 이동평균율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1기는 '05~'07년, 2기는 '06~'08년, 3기는 '07~'09년, 4기는 '08~'10년으로 구분하여 각 기별로 연평균 증감률을 산출하였다. 이후 4기의 연평균 증감률을 이용하여 품목별 Position을 분류하였다. 또한 각 시점(1~4기)별로 품목들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이동경로 패턴을 도출하였다.

(3) 최종 4기 Position 분석결과

가을배추와 구마늘의 경우 조수입 증감률이 각각 68.9%·63.3%, 부가가치 증감률이 각각 102.2%·96.8%로 다른 품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품목별 Position을 파악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기('08~'10년) 41개 품목의 조수입 성장률의 평균은 7.1%, 부가가치 성장률의 평균은 9.2%로 나타났다. 각각의 평균을 두 축의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분류한 결과 조수입과 부가가치 성장률이 평균보다 높은 지속성장(제1사분면)영역은 13개 품목(31.7%)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입 급감/이익선방(제2사분면)영역은 7개 품목(17.1%),

지속적 위축(제3사분면)영역은 16개 품목(39.0%), 이익없는 성장(제4사분면)영역은 5개 품목(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감율이 모두 평균을 상회하여 개방하에서 성장을 구가한 품목은 31.7%인 반면,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감율이 모두 평균을 하회한 품목은 39.0%로 품목간 실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장(제1사분면)영역은 평균 조수입증감률이 17.7%, 평균 부가가치증감률이 26.1%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은 식량작물로는 가을감자·고구마·노지풋옥수수, 노지채소로는 고랭지배추·노지시금치·당근, 시설채소는 시설오이(반축성)·시설호박, 과수로는 배·복숭아·유자가 해당되었으며, 특용작물로는 느타리버섯·오미자가 해당되었다.

조수입 급감/이익선방(제2사분면)영역은 평균 조수입증감률이 2.0%, 평균 부가가치증감률이 15.5%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은 노지채소로는 연근, 시설채소로는 시설고추·시설들깨잎·시설방울토마토·시설참외·파프리카, 화훼류는 시설국화가 해당되었다.

지속적 위축(제3사분면)영역은 평균 조수입증감률이 -0.6%, 평균 부가가치증감률이 -6.0%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은 식량작물로는 맥주보리·봄감자·시설 풋옥수수, 시설채소로는 시설딸기(반축성)·시설수박(반축성·축성)·시설토마토(축성), 과수류는 노지포도·매실·사과·알로에·참다래, 화훼류는 시설장미가 해당되었으며, 특용작물은 녹차·새송이버섯·양잠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익없는 성장(제4사분면)영역은 평균 조수입증감률이 11.7%, 평균 부가가치증감률이 4.6%로 나타났다. 해당품목은 시설채소로 시설딸기(축성)·시설멜론(축성)·시설양상추·피망, 과수류는 단감이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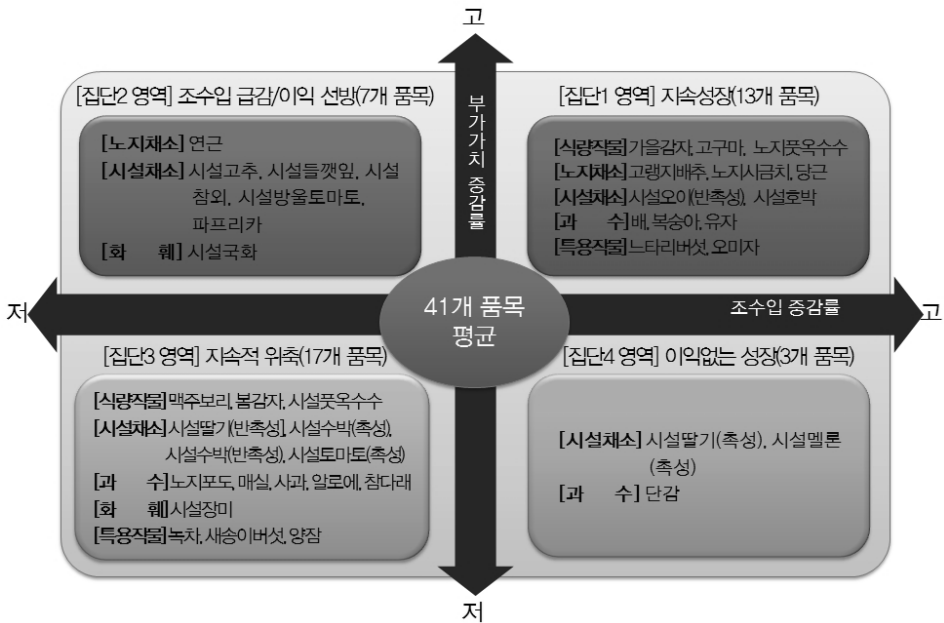
(표4-2) Position별 구분(4기 기준)

분류	지속성장 (제1사분면)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제2사분면)	지속적 위축 (제3사분면)	이익없는 성장 (제4사분면)
품목수	13개 품목 (31.7%)	7개 품목 (17.1%)	16개 품목 (39.0%)	5개 품목 (12.2%)
평균 조수입증감률	17.7%	2.0%	-0.6%	11.7%
평균 부가가치증감률	26.1%	15.5%	-6.0%	4.6%

분류별로는 식량작물은 지속성장 영역과 지속적 위축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노지채소는 지속성장 영역에 해당하는 품목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 25.0%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채소는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 33.3%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 위축 영역과 이익없는 성장 영역이 각각 26.7%, 지속성장 영역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과수는 지속적 위축 영역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성장 영역 33.3%, 이익없는 성장 영역 11.1% 순으로 나타났다. 화훼류는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과 지속적 위축 영역이 각각 50.0%를 차지하였으며, 특용작물은 지속적 위축 영역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성장 영역이 40.0%로 나타났다.

(표4-3) 품목별 Position 분류(4기 기준)

분류	지속성장 (제1사분면)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제2사분면)	지속적 위축 (제3사분면)	이익없는 성장 (제4사분면)
식량작물	3개(50.0%)		3개(50.0%)	
	○ 가을감자 ○ 고구마 ○ 노지꽃옥수수		○ 맥주보리 ○ 봄감자 ○ 시설꽃옥수수	
노지채소	3개(75.0%)	1개(25.0%)		
	○ 고랭지배추 ○ 노지시금치 ○ 당근	○ 연근		
시설채소	2개(13.3%)	5개(33.3%)	4개(26.7%)	4개(26.7%)
	○ 시설오이(반축성) ○ 시설호박	○ 시설고추 ○ 시설들깨잎 ○ 시설방울토마토 ○ 시설참외 ○ 파프리카	○ 시설딸기(반축성) ○ 시설수박(반축성) ○ 시설수박(축성) ○ 시설토마토(축성)	○ 시설딸기(축성) ○ 시설멜론(축성) ○ 시설양상추 ○ 피망
과수	3개(33.3%)		5개(55.6%)	1개(11.1%)
	○ 배 ○ 복숭아 ○ 유자		○ 노지포도 ○ 매실 ○ 사과 ○ 알로에 ○ 참다래	○ 단감
화훼		1개(50.0%)	1개(50.0%)	
		○ 시설국화	○ 시설장미	
특용작물	2개(40.0%)		3개(60.0%)	
	○ 느타리버섯 ○ 오미자		○ 녹차 ○ 새송이버섯 ○ 양잠	



(그림4-4) 4기 품목별 Position

가) 지속성장 영역(제1사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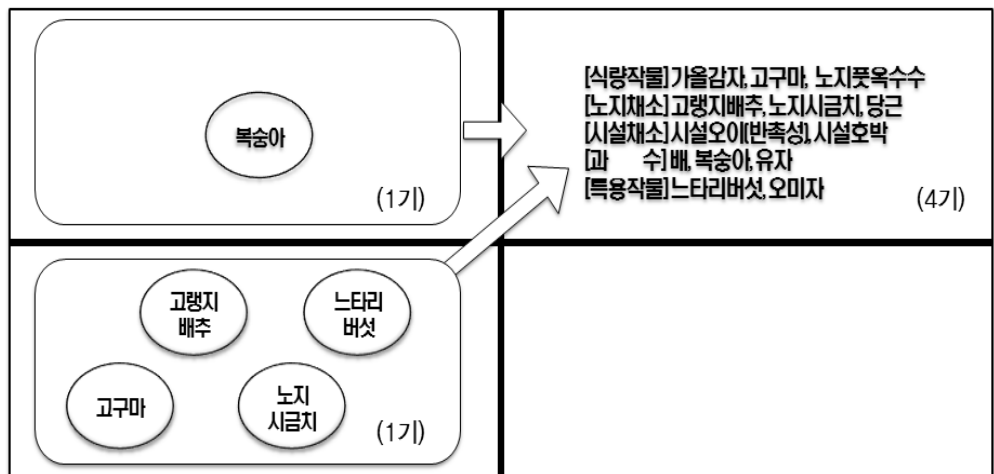
4기에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감률 모두 평균이상인 지속성장 영역에는 13개 품목이 해당되며, 식량작물·노지채소·과수가 각각 3개씩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해당품목 중 가을감자의 경우 조수입 증감률이 36.3%, 부가가치 증감률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지채소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경우 조수입은 20% 중후반대, 부가가치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품목에 대한 1기와 4기의 품목별 Position을 살펴보면, 1기에 제1사분면에 위치한 8개 품목은 4기에도 제1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은 타사분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고랭지배추·노지시금치·느타리버섯의 4개 품목은 1기에는 제3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 제1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위축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의 경우에는 1기에는 제2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1사분면으로 이동하여 조수입이 증감률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지속성장 영역 품목(4기 기준)

(단위:%)

품목	식량작물			노지채소			
	가을감자	고구마	노지 꽃옥수수	고랭지 배추	노지 시금치	당근	
조수입증감률	36.2	12.5	8.3	23.0	24.4	24.9	
부가가치증감률	63.8	11.2	10.3	32.7	29.8	43.7	
품목	시설채소		과수			특용작물	
	시설오이 (반축성)	시설 호박	배	복숭아	유자	느타리 버섯	오미자
조수입증감률	10.5	10.9	9.9	7.5	16.1	16.9	19.1
부가가치증감률	43.5	13.4	11.7	9.2	13.7	35.4	20.8



(그림4-5) 지속성장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나) 조수입 급감/이익선방(제2사분면)

4기에 조수입은 평균보다 낮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에는 7개 품목이 해당되며, 시설채소가 5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해당품목은 대부분 부가가치 증감률이 10% 중후반에 해당되나, 조수입 증감률은 연근과 시설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0% 수준으로 조수입 증감률이 정체되어 조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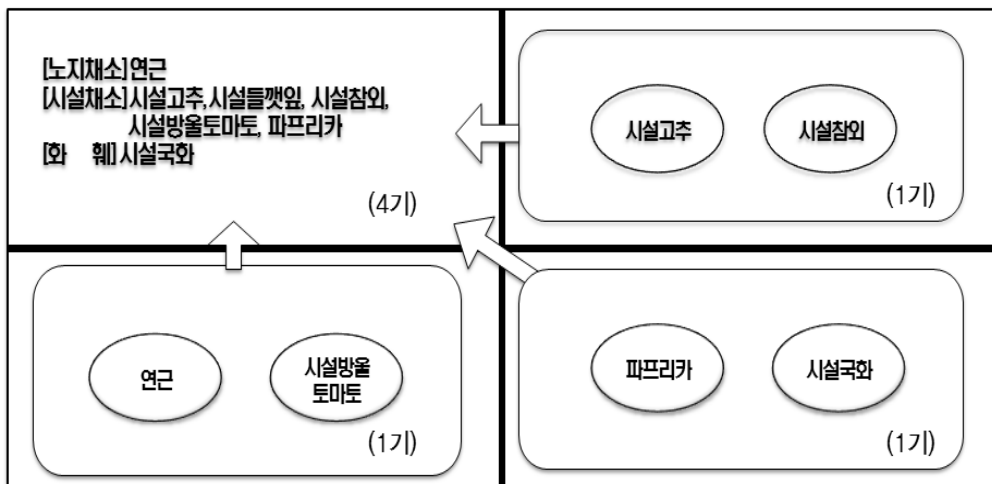
7개 품목에 대한 1기와 4기의 품목별 Position을 살펴보면, 1기에 제2사분면에 위치

한 시설들겻잎은 4기에도 제2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품목은 타 사분면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과 시설방울토마토의 2개 품목은 1기에는 제3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2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증감률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조수입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고추와 시설참외의 2개 품목은 1기에는 제1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 제2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조수입 증감이 정체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와 시설국화의 2개 품목은 1기에는 제4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2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증감률은 개선되었으나 조수입 증감률이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품목(4기 기준)

(단위:%)

품목	노지채소	시설채소					화훼
	연근	시설고추	시설들겻잎	시설방울토마토	시설참외	파프리카	시설국화
조수입증감률	5.8	5.4	0.1	-0.2	1.3	-0.2	1.9
부가가치증감률	11.8	14.8	10.6	15.1	20.2	11.0	25.4



(그림4-6) 조수입 급감/이익선방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다) 지속적 위축(제3사분면)

4기에 조수입과 부가가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지속적 위축 영역에는 16개 품목이 해당되며, 과수가 5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해당품목 중 양잠(조수입 증감률이 -12.5%, 부가가치 증감률이 -48.9%)과 맥주보리(조수입 증감률이 -9.0%, 부가가치 증감률이 -35.0%)로 가장 지속적 위축에 빠져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 중 봄감자·시설꽃옥수수·시설토마토(축성)·노지포도·매실 등 일부품목의 경우 타 품목에 비해 증감률이 긍정적인 편에 속하여 타 영역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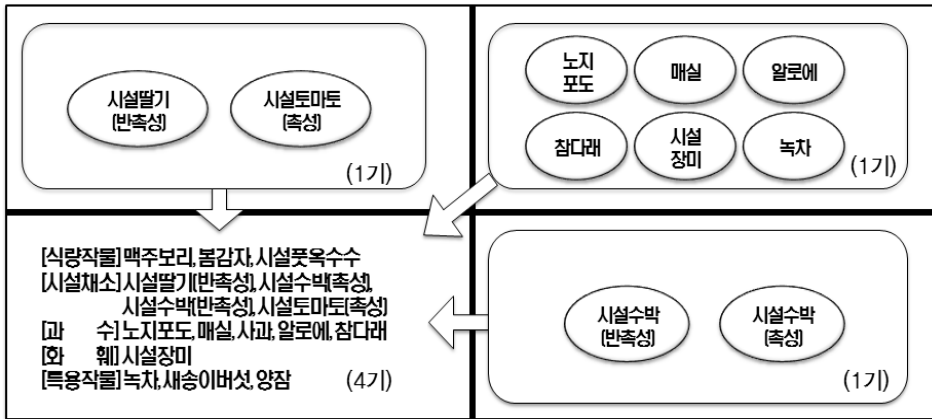
16개 품목에 대한 1기와 4기의 품목별 Position을 살펴보면, 1기에 제3사분면에 위치한 8개 품목은 4기에도 제2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위축 위기에 빠져있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참다래·시설장미·녹차의 4개 품목은 1기에는 제1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3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성장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설토마토(축성)은 1기에는 제2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 제3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조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증가 또한 정체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설수박(축성)은 1기에는 제4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 제3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증가뿐만 아니라 조수입 증가 또한 정체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지속적 위축 영역 품목(4기 기준)

(단위:%)

품목	식량작물			시설채소				과수
	맥주 보리	봄 감자	시설 꽃옥수수	시설딸기 (반축성)	시설수박 (반축성)	시설수박 (축성)	시설토마 토(축성)	
조수입증감률	-9.0	1.4	4.9	2.6	5.2	-1.2	6.0	6.8
부가가치증감률	-35.0	6.7	0.6	-1.7	-9.9	6.0	3.2	7.0

품목	과수				화훼	특용작물		
	매실	사과	알로에	참다래	시설장미	녹차	새송이버섯	양잠
조수입증감률	5.4	-4.0	-0.2	-5.0	0.3	-4.7	-6.2	-12.5
부가가치증감률	5.4	-2.8	3.0	-10.9	4.5	-9.5	-13.2	-48.9



주)알로에의 경우에는 '05년 자료의 부재로 1기의 증감률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2기의 Position으로 대체함.

(그림4-7) 지속적 위축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라) 이익없는 성장(제4사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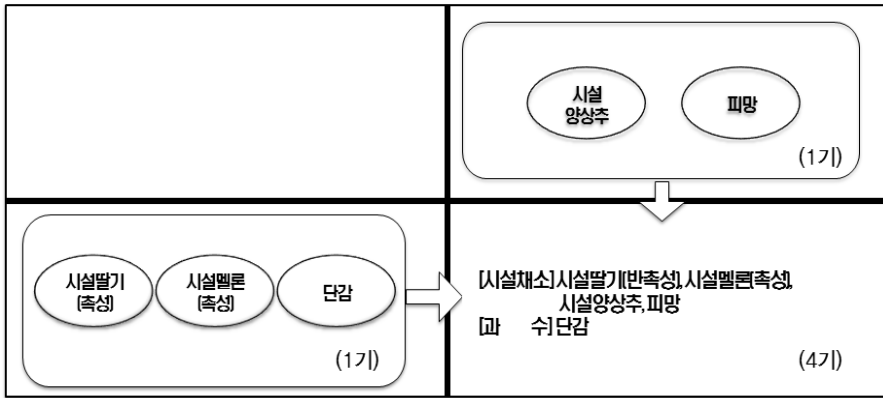
4기에 조수입 증감률은 평균보다 높으나, 부가가치 증감률이 낮은 이익없는 성장 영역에는 5개 품목이 해당되며, 시설채소가 4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해당품목 중 시설양상추의 경우 조수입 증감률이 23.5%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가가치 증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멜론(축성)과 단감의 경우 조수입 증감률과 부가가치 증감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품목에 대한 1기와 4기의 품목별 Position을 살펴보면, 시설양상추·피망의 2개 품목은 1기에는 제1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4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성장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부가가치 증감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설딸기(축성)·시설멜론(축성)·단감의 3개 품목은 1기에는 제3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4기에는 제4사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조수입 증감률이 개선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이익없는 성장 품목(4기 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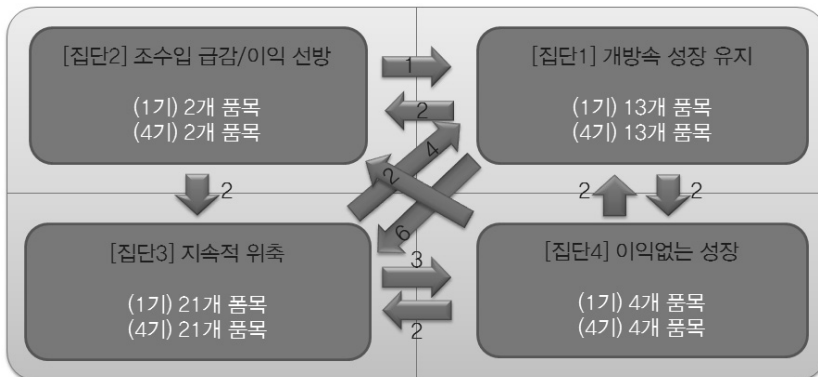
품목	시설채소				과수
	시설딸기(축성)	시설멜론(축성)	시설양상추	피망	단감
조수입증감률	8.6	8.7	23.5	7.7	9.9
부가가치증감률	2.8	7.7	-0.6	4.3	9.1



(그림4-8) 이익없는 성장 영역 품목의 시점별 Position(1기→4기)

(4) 경로이동 패턴

집단 1영역에 있는 품목은 시간과 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모든 영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적 위축으로 이동이 많아 생산성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2영역의 품목은 지속적 위축 영역으로 이동했으며, 부가가치 확대 및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3영역의 품목들은 개방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영역으로의 이동과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절감 및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 4영역의 품목은 모든 영역으로 이동가능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 1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9) 영역별 경로이동 패턴

(5) 요약과 시사점

Position matrix 분석 결과(4기), 경남 농업 실적은 그리 밝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속적 성장에 속하는 집단 1영역에는 전체 품목의 31.7%(13개)가 해당된다. 작목별로 구분하면 식량작물의 50%(3개), 노지채소의 75.0%(3개), 시설채소의 13.3%(2개), 과수의 33.3%(3개), 특용작물의 40%(2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식량작물에는 가을감자·고구마·노지팥옥수수, 과수분야에는 배·복숭아·유자, 특용작물에는 오미자·느타리버섯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조수입 급감/이익선방에 해당하는 집단 2영역에는 전체 품목의 17.1%(7개)가 해당된다. 작목별로 구분하면 노지채소의 25.0%(1개), 시설채소의 33.3%(5개), 화훼 50%(1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지채소에는 연근, 시설채소에는 시설고추·시설들깨잎·시설방울토마토·시설참외·파프리카, 화훼에는 시설국화가 집단 2영역에 해당된다.

지속적 위축에 해당하는 집단 3영역에는 전체 품목의 39.0%(16개)가 해당된다. 작목별로 구분하면 식량작물의 50.0%(3개), 시설채소의 26.7%(4개), 과수 55.6%(5개), 화훼 50.0%(1개), 특용작물 60.0%(3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식량작물에는 맥주보리·봄감자·시설팥옥수수, 시설채소에는 시설딸기(반축성)·시설수박(반축성·축성)·시설토마토(축성), 과수에는 노지포도·매실·사과·알로에·참다래, 화훼에는 시설장미, 특용작물에는 녹차·새송이버섯·양잠이 집단 3영역에 해당된다.

이익없는 성장에 해당하는 집단 4영역에는 전체 품목의 12.2%(5개)가 해당된다. 작목별로 구분하면 시설채소의 26.7%(4개), 과수 11.1%(1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설채소에는 시설딸기(축성)·시설멜론(축성)·시설양상추·피망, 과수에는 단감이 집단 4영역에 해당된다.

집단 1영역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속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지역특화전략을 세워 새로운 성장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미자나 유자가 그러하다. 반면 경남의 핵심 품목인 파프리카(2영역)는 성장위축시 지속적 위축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포화상태에 있는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매실·알로에·참다래·녹차(3영역)은 새롭게 재배되거나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이긴 하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어 산지조직화·마케팅강화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¹¹⁾

11) Postion Matrix 분석에 따른 품목영역별 전략은 5장에서 다시 언급됨.

2) 축산부문

(1) 분석대상

경남 축산농가의 한우·돼지·닭 사육농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축종별로 생산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비 분석은 한우번식우·한우비육우·젓소·육우·비육돈·산란계·육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남의 축산물생산비 결과가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 축산물 생산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항목은 조수입과 경영비를 이용하여 수익성을 살펴보고, 경영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경영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보았다.

(2) 축종별 사육 현황

경남의 축종별 사육가구수를 살펴보면, 전 축종 모두 사육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사육가구는 '05년 4/4분기 35,269가구에서 '11년 4/4분기 23,419가구로 연평균 6.6%씩 감소하였다. 더불어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에 18.8%에서 14.9%로 3.9%(p) 감소하였다. 육우 사육가구는 '05년 4/4분기 559가구에서 '11년 4/4분기 329가수로 연평균 8.5%씩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7.3%에서 5.8%로 1.5%(p) 감소하였다. 젓소 사육가구는 '05년 4/4분기 572가구에서 '11년 4/4분기 353가구로 연평균 7.7%씩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 6.4%에서 5.8%로 0.6%(p) 감소하였다.

(표4-8) 경남의 축종별 사육가구

(단위:가구·%)

구분	'05 4/4	'07 4/4	'09 4/4	'11 4/4	연평균 증감률
한우	35,269 (18.8)	32,380 (18.1)	26,409 (15.6)	23,419 (14.9)	-6.6
육우	559 (7.3)	377 (6.2)	354 (5.9)	329 (5.8)	-8.5
젓소	572 (6.4)	456 (6.0)	421 (6.2)	353 (5.8)	-7.7
돼지	2,423 (19.7)	1,426 (14.5)	1,074 (13.5)	868 (13.7)	-15.7
닭	-	241 (7.0)	224 (6.3)	215 (6.3)	-2.8

주1) ()내는 전국대비 경남의 차지비중임.

2) 닭의 경우 '06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만 조사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각년도.

돼지 사육가구는 '05년 4/4분기 2,423가구에서 '11년 4/4분기 868가구로 연평균 15.7%씩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에 19.7%에서 13.7%로 6.0%(p) 감소하여 큰 감소를 보였다. 닭은 사육가구는 '07년 4/4분기 241가구에서 '11년 4/4분기 215가구로 연평균 2.8%씩 감소하였으며,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 7.0%에서 6.3%로 0.7%(p) 감소하였다.

경남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한우·돼지·닭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육우와 젓소의 마리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는 '05년 4/4분기 207,085마리에서 '11년 4/4분기 300,539마리로 연평균 6.4%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에 12.7%에서 10.3%로 2.4%(p) 감소하였다. 육우는 '05년 4/4분기 9,218마리에서 '11년 4/4분기 2,404마리로 연평균 20.1%씩 감소하여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남의 차지비중 또한 동기간 5.0%에서 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젓소 또한 '05년 4/4분기 32,601마리에서 '11년 4/4분기 26,148마리로 연평균 3.6%씩 감소하였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중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는 '05년 4/4분기 1,073,767마리에서 '11년 4/4분기 1,104,240마리로 연평균 0.5%씩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에 12.0%에서 13.5%로 1.5%(p)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닭은 '07년 4/4분기 7,081,038마리에서 '11년 4/4분기 8,875,292마리로 연평균 5.8%씩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차지비중은 5%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4-9) 경남의 축종별 마리수

(단위:마리·%)

구분	'05 4/4	'07 4/4	'09 4/4	'11 4/4	연평균 증감률
한우	207,085 (12.7)	238,707 (11.7)	263,647 (10.2)	300,539 (10.3)	6.4
육우	9,218 (5.0)	6,457 (3.9)	5,029 (3.2)	2,404 (1.8)	-20.1
젓소	32,601 (6.8)	29,700 (6.6)	29,112 (6.5)	26,148 (6.5)	-3.6
돼지	1,073,767(12.0)	1,166,213(12.1)	1,167,616(12.2)	1,104,240(13.5)	0.5
닭	-	7,081,038(5.9)	7,515,661(5.4)	8,875,292(5.9)	5.8

주1)()내는 전국대비 경남의 차지비중임.

2)닭의 경우 '06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만 조사함.

자료)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각년도.

(3) 생산비 분석

가) 한우 번식우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52,597원에서 '10년 426,812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에 들어서 -276,186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조수입이 '11년 크게 감소한 반면 경영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1,295,579원에서 '10년 1,730,669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 1,175,065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경영비는 '08년 1,242,982원에서 '11년 1,451,251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0) 한우 번식우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1,295,579	1,594,608	1,730,669	1,175,065	-3.2
경영비(B)	1,242,982	1,330,183	1,303,857	1,451,251	5.3
소득(A-B)	52,597	264,425	426,812	-276,186	-273.8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한우 번식우의 경영비는 사료비·상각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는 '08년 914,843원에서 '11년 1,046,753원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7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각비는 '08년 140,423원에서 '11년 161,411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11.1%를 차지하며, 기타비는 '08년 187,716원에서 '11년 243,058원으로 연평균 9.0%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4-11) 한우 번식우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계	1,242,982	1,330,183	1,303,857	1,451,252	5.3
사료비	914,843 (73.6)	1,013,904 (76.2)	923,875 (70.9)	1,046,753 (72.1)	4.6
상각비	140,423 (11.3)	158,350 (11.9)	160,834 (12.3)	161,411 (11.1)	4.8
기타비	187,716 (15.1)	157,929 (11.9)	219,148 (16.8)	243,058 (16.7)	9.0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종부료·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뇨처리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나) 한우비육우

한우 비육우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644,662원에서 '10년 1,948,237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에 들어서 189,347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조수입이 '11년 크게 감소한 반면 경영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5,391,207원에서 '10년 6,806,424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 5,657,584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경영비는 '08년 4,746,545원에서 '11년 5,468,237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2) 한우 비육우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5,391,207	6,245,170	6,806,424	5,657,584	1.6
경영비(B)	4,746,545	4,897,145	4,858,187	5,468,237	4.8
소득(A-B)	644,662	1,348,025	1,948,237	189,347	-33.5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한우 비육우의 경영비는 가축비·사료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료비와 기타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사료비는 '08년 2,169,994원에서 '11년 2,724,773원으로 연평균 7.9%씩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4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비는 '08년 2,131,191원에서 '11년 2,151,881원으로 연평균 0.3%씩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39.4%를 차지하며, 기타비는 '08년 445,360원에서 '11년 591,585원으로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4-13) 한우 비육우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계	4,746,545	4,897,145	4,858,187	5,468,237	4.8
가축비	2,131,191(44.9)	2,164,035(44.2)	2,075,874(42.7)	2,151,881(39.4)	0.3
사료비	2,169,994(45.7)	2,347,810(47.9)	2,283,638(47.0)	2,724,773(49.8)	7.9
기타비	445,360 (9.4)	385,300 (7.9)	498,676 (10.3)	591,585 (10.8)	9.9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노처리비·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다) 젓소

젓소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2,350,418원에서 '10년 2,772,177원으로 연평균 8.6%씩 증가하였다. 이는 조수입이 경영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나, 한우의 경우에도 '10년까지 증가하다 '11년에 큰 감소를 보여 젓소의 소득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입은 '08년 6,720,471원에서 '10년 7,397,771원으로 연평균 4.9%씩 증가하였으며, 경영비는 '08년 4,370,053원에서 '10년 4,625,594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하였다.

(표4-14) 젓소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6,720,471	7,282,267	7,397,771	4.9
경영비(B)	4,370,053	4,602,698	4,625,594	2.9
소득(A-B)	2,350,418	2,679,569	2,772,177	8.6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표4-15) 젓소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계	4,370,053	4,602,700	4,625,593	2.9
사료비	3,106,531(71.1)	3,407,772(74.0)	3,310,841(71.6)	3.2
상각비	664,174(15.2)	689,973(15.0)	726,326(15.7)	4.6
기타비	599,348(13.7)	504,955(11.0)	588,426(12.7)	-0.9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종부료·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뇨처리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젓소의 경영비는 사료비·상각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는 '08년 3,106,531원에서 '10년 3,310,841원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각비는 '08년 664,174원에서 '10년 726,326원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15.7%를 차지하며, 기타비는 '08년 599,348원에서 '10년 588,426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젓소의 경영비는 한우 번식우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11년에 경영비가 보다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육우

육우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229,810에서 '10년 599,876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에 들어서 -536,289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조수입이 '11년 크게 감소한 반면 경영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3,154,754원에서 '10년 4,073,923원으로 증가하다가 '11년 3,306,701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경영비는 '08년 3,384,564원에서 '11년 3,842,990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4-16) 육우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3,154,754	3,635,744	4,073,923	3,306,701	1.6
경영비(B)	3,384,564	3,560,638	3,474,047	3,842,990	4.3
소득(A-B)	-229,810	75,105	599,876	-536,289	-32.6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표4-17) 육우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11	연평균 증감률
계	3,384,564	3,560,638	3,474,045	3,842,990	4.3
사료비	2,380,471(70.3)	2,661,585(74.8)	2,477,290(71.3)	2,774,360(72.2)	5.2
가축비	565,535(16.7)	445,401(12.5)	455,460(13.1)	431,421(11.2)	-8.6
기타비	438,558(13.0)	453,652(12.7)	541,295(15.6)	637,209(16.6)	13.3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 잡비·분노처리비·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한우 비육우의 경영비는 가축비·사료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료비와 기타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사료비는 '08년 2,380,471원에서 '11년 3,842,990원으로 연평균 4.39%씩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7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비는 '08년 565,535원에서 '11년 431,421원으로 연평균 8.6%씩 감소하였으며, '11년 현재 경영비의 11.2%를 차지하였다. 기타비는 '08년 438,558원에서 '11년 637,209원으로 연평균 13.3%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마) 비육돈

비육돈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73,864원에서 '10년 58,014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경영비가 조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305,253원에서 '10년 323,377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하였으며, 경영비는 '08년 231,389원에서 '10년 265,362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였다.

(표4-18) 비육돈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305,253	356,515	323,377	2.9
경영비(B)	231,389	251,650	265,362	7.1
소득(A-B)	73,864	104,866	58,014	-11.4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표4-19) 비육돈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계	231,389	251,649	265,362	7.1
사료비	131,651 (56.9)	147,353 (58.6)	150,972 (56.9)	7.1
가축비	66,537 (28.8)	70,257 (27.9)	74,483 (28.1)	5.8
기타비	33,201 (14.3)	34,039 (13.5)	39,907 (15.0)	9.6

주1) ()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종부료·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뇨처리비·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비육돈의 경영비는 사료비·상각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는 '08년 131,651원에서 '10년 150,972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비는 '08년 66,537원에서 '10년 74,483원으로 연평균 5.8%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28.1%를 차지하였다. 기타비는 '08년 33,201원에서 '10년 39,907원으로 연평균 9.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산란계

산란계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36원에서 '10년 -2,618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조수

입은 감소한 반면 경영비는 유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31,137원에서 '10년 28,627원으로 연평균 4.1%씩 감소하였으며, 경영비는 '08년 31,101원에서 '10년 31,245원으로 연평균 0.2%씩 증가하였다.

(표4-20) 산란계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31,137	31,857	28,627	-4.1
경영비(B)	31,101	32,704	31,245	0.2
소득(A-B)	36	-847	-2,618	-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표4-21) 산란계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계	31,100	32,705	31,244	0.2
사료비	17,471 (56.2)	19,373 (59.2)	18,086 (57.9)	1.7
가축비	9,440 (30.4)	9,169 (28.0)	9,402 (30.1)	-0.2
기타비	4,189 (13.5)	4,163 (12.7)	3,756 (12.0)	-5.3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제료비·종부료·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뇨처리비·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산란계의 경영비는 사료비·상각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료비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는 '08년 17,471원에서 '10년 18,086원으로 연평균 1.7%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5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비는 '08년 9,440원에서 '10년 9,402원으로 유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30.1%를 차지하였다. 기타비는 '08년 4,189원에서 '10년 3,756원으로 연평균 5.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육계

육계의 마리당 소득은 '08년 4,399원에서 '10년 3,922원으로 연평균 5.6%씩 감소하였다. 이는 경영비가 조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나타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수입은 '08년 19,856원에서 '10년 22,545원으로 연평균 6.6%씩 증가하였으며, 경영비는 '08년 15,458원에서 '10년 18,623원으로 연평균 9.8%씩 증가하였다.

(표4-22) 육계의 수익성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조수입(A)	19,856	22,088	22,545	6.6
경영비(B)	15,458	17,958	18,623	9.8
소득(A-B)	4,399	4,131	3,922	-5.6

주)경영비는 자가노력비와 자본이자를 제외한 일반비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산란계의 경영비는 사료비·상각비·기타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료비와 가축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는 '08년 9,189원에서 '10년 11,466원으로 연평균 11.7%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비는 '08년 3,437원에서 '10년 4,809원으로 연평균 18.3%씩 증가하였으며, '10년 현재 경영비의 25.8%를 차지하였다. 기타비는 '08년 2,833원에서 '10년 2,349원으로 연평균 8.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3) 산란계의 경영비

(단위:원·%)

구분	'08	'09	'10	연평균 증감률
계	15,459	17,956	18,623	9.8
사료비	9,189 (59.4)	11,022 (61.4)	11,466 (61.6)	11.7
가축비	3,437 (22.2)	4,579 (25.5)	4,809 (25.8)	18.3
기타비	2,833 (18.3)	2,355 (13.1)	2,349 (12.6)	-8.9

주1)()내는 해당연도 경영비 중 항목별 차지비중임.

2)기타비용은 수도광열비·방역치료비·수선비·소농구비·제재료비·종부료·차입금이자·임차료·고용노력비·기타잡비·분뇨처리비·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각년도.

3) 수출농업부문

(1) 경남의 수출시장

'06~'10년까지의 경남의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액은 217만불에서 366만불로 6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백만불에서 19백만불로 171.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홍콩 88.9%·일본 58.2%·중국 18.8%의 성장을

보였다. 이들 국가를 유형화시켜 보면 홍콩의 경우 고성장근린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중국은 성장잠재근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²⁾

(표4-24) 경남의 주요 국가별 농식품 수출증가 기여도('06~'10) (단위:백만불)

구 분	'06(A)	'10(B)	증가액	기여도(%)	증가율(%)
총 액	217 (100.0)	366 (100.0)	149	100.0	68.7
일 본	110 (50.7)	174 (47.5)	64	43.0	58.2
중 국	16 (7.4)	19 (5.2)	3	2.0	18.8
미 국	7 (3.2)	19 (5.2)	12	8.1	171.4
홍 콩	9 (4.1)	17 (4.6)	8	5.4	88.9
기 타	75 (34.6)	137 (37.4)	62	41.6	82.7

자료)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최근 2년('10년~'11년)의 주요 국가별 농수산물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10년 1,048백만불에서 '11년 1,087백만불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47.4%)·중국(32.9%)·러시아(20.9%)·홍콩(20.8%)에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미국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하여 보면 경남의 신흥시장으로는 중국·싱가포르·홍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수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시장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12)어명근외 4인(2011)은 농식품 신흥 수출시장의 유형을 4가지(고성장근린형·성장잠재근린형·성장잠재원거리형·이질문화형)로 유형화 하였음. 고성장근린형은 국산 농식품 수출액 평균 증가율보다 월등하게 빨리 성장하는 국가로서 선박 운송기간이 7~10일 이내인 지역(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태국·몽고 등)이 해당되며, 성장잠재근린형은 수출액 증가폭이 평균보다 별로 높지 않지만 시장규모, 경제성장률,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접국가(중국·홍콩·대만 등)가 해당됨. 성장잠재원거리형은 수출액 증가폭은 평균보다 높지 않아도 인구와 소득수준,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선박 운송에 10일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국가(러시아·UAE·호주·캐나다)가 해당됨. 마지막 이질문화형은 최근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식습관과 사회문화적 관행상 우리나라와 차이가 큰 이슬람권 국가들과 거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유형을 지닌 국가가 해당됨.

13)러시아의 경우 일본·중국·미국에 이어 제4의 수출시장이나, 김경필외 2인(2008)에 의하면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품목들 중에서 돈육 수출액이 가장 크고 과실류, 채소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과실류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수입량도 세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실류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감귤 0.12%·배 0.004%)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본 원고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축산품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신흥시장에서 제외코자 함.

(표4-25) 경남의 주요 국가별 농수산물식품 수출증가 기여도('10~'11) (단위:백만불)

구 분	'10(A)	'11(B)	증가액(B-A)	기여도(%)	증가율(%)
총 액	1,048 (100.0)	1,087 (100.0)	39	100.0	3.7
일 본	458 (43.7)	526 (48.4)	68	174.4	14.8
중 국	76 (7.3)	101 (9.3)	25	64.1	32.9
미 국	116 (11.1)	75 (6.9)	-41	-105.1	-35.3
러시아	43 (4.1)	52 (4.8)	9	23.1	20.9
홍 콩	24 (2.3)	29 (2.7)	5	12.8	20.8
싱가폴	19 (1.8)	28 (2.6)	9	23.1	47.4
기 타	312 (29.8)	275 (25.3)	-37	-94.9	-11.9

주)기타국가에는 태국·말레이시아·대만·괌·호주·스페인 등이 해당됨.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 경남의 유망품목

경남의 수출유망품목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 '09~'11년도 수출액을 살펴 보면, 농식품의 수출액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화훼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내 신선농산물 생산시설 파손 등으로 對일본 한국산 채소류의 딸기·토마토·단감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09~'11년까지 성장이 지속적인 품목은 딸기·파프리카·토마토이며, '10년은 감소하였으나 '11년에 다시 증가한 품목으로 단감·배·주류로 나타났다. '11년 기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품목으로 토마토로 109.3% 증가하였으며, 배 51.3%·딸기 44.9%·단감 18.7%순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남 농식품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프리카와 주류·커피(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에 하락)의 경우 여전히 경남의 농식품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출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미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 '09~'10년에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출이 급감하여 앞으로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아야할 품목으로 판단된다.

경남의 수출유망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로는 토마토·딸기·파프리카·단감·장미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으로는 주류로 판단된다.

(표4-26) 경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 기여도('09~'11)

(단위:천불)

구 분	'09(A)	'10(B)	'11(C)	증가액 (C-B)	기여도 (%)	증가율(%)	
						'09~'10	'10~'11
총액	472,199	478,648	468,372	-10,276	-100.0	1.4	-2.1
딸기	12,635	15,466	22,410	6,944	67.6	22.4	44.9
파프리카	33,693	33,862	35,786	1,924	18.7	0.5	5.7
버섯	4,801	6,526	7,585	1,059	10.3	35.9	16.2
토마토	1,598	1,991	4,168	2,177	21.2	24.6	109.3
단감	10,223	7,989	9,479	1,490	14.5	-21.9	18.7
배	689	347	525	178	1.7	-49.6	51.3
양란	6,040	6,369	4,479	-1,890	-18.4	5.4	-29.7
장미	4,834	10,680	2,368	-8,312	-80.9	120.9	-77.8
국화	3,183	3,117	3,107	-10	-0.1	-2.1	-0.3
김치	66,449	64,397	62,410	-1,987	-19.3	-3.1	-3.1
주류	66,542	58,763	61,623	2,860	27.8	-11.7	4.9
커피	52,849	71,373	70,473	-900	-8.8	35.1	-1.3
기타	208,663	197,768	183,959	-13,809	-134.4	-5.2	-7.0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3) 시장별 수출제약요인¹⁴⁾

가) 일본시장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제약요인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낮은 가격 수준을 지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 수입단가는 국내 도매가격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일부 품목은 남미나 아프리카의 농식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한국산은 중저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경영효율성 제고나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 등 자생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국내 수출업체의 과당 경쟁으로 가격이 늦게

14)어명근외 7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어명근외 5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어명근외 4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을 재정리함.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품질 수준의 저하이다. 한국산 파프리카 품질은 경쟁국인 네덜란드·뉴질랜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장미 또한 네덜란드나 대만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농산물의 경우 선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확 후 통관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번째로는 바이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재배농가의 기술력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입바이어의 기호나 규격·물량 등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해 수출확대에 한계점으로 발생하며, 수출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입바이어는 주 소비시기에 충분한 농산물의 공급을 원하지만, 비수기에 수입이 집중되어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네번째로는 협상력 부족이다. 국내에 영세한 수출업체가 난립되어 수입국의 가격하락 시기에 맞춰서 농식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수입국에 대한 시장정보 부족이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수출국 다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중국시장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제약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선농산물 가격경쟁의 어려움을 지목할 수 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용역비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아 신선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로 인하여 중국시장 수출 농식품들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가공식품을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두번째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혼돈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낮은 인건비로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자의 경우 한국산 유자청을 사용하여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 매장 등에서의 적극적 마케팅으로 한국산과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직수입 제품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장교란 및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다) 미국시장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제약요인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지인들이 아닌 한국 교민들이 주 고객층이라는 점이다. 미국내 교민시장은 규모가 작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인들에게까지 소비계층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지인의 선호가 한국 교민들과는 달라 쉽사리 소비 대열에 동참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두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이다. 주고객층이 한국교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식품은 미국 현지인들에게 생소한 소수인종 식품(ethnic food)에 속하므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세번째로는 국내 농식품 생산농가나 수출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진입기에 들어선 상품의 품질과 물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바이어나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출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포장단위의 변경 등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발생한다.

라) 싱가포르시장

싱가포르시장에 대한 수출제약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불완전한 선별로 인하여 급격한 품위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현지에서 요구하는 포장 박스별 품위와 크기가 달라 판매 시에 애로사항으로 발생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조생종의 품질이 매년 불완전하여 만생종인 부유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시기가 이스라엘산과 중복되어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스라엘산과의 경쟁이 부득이하다.

(표4-27) 주요 수출시장별 개요 및 수출계약요인

국가별	시장개요 ¹⁾	경남 관련 주요품목	수출계약요인
일본	-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나 시장 점유율은 2009년에 1.7%에 불과 - 파프리카·백합·소주·과실곡물 발효주·버섯류는 상위 5개 품목	파프리카 (58.6%, 한국이 중심) ²⁾ 딸기 (57.7%, 미국에 이어 2위) 장미 (32.4%, 경쟁력이 가장 강함)	- 낮은 가격수준 - 품질수준 저하 - 바이어 요구사항 충족 미흡 - 협상력 부족 - 수입국의 시장정보 부족
중국	- 소득증가가 빠르게 확산, 농업 생산과 소비가 세계 최대 - 수입시장 점유율은 '10년에 0.65%에 불과 - 일본에 이어 농식품의 제2의 수출시장 - 중국시장 수출 농식품은 대부분 가공식품임	유자조제품	- 신선농산물 가격경쟁의 어려움과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구조 - 신뢰 하락 및 혼돈요인 내재
미국	- 세계 최대 시장 - 일본, 중국에 이어 제3의 수출시장 -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짐 - 배·인삼류·기타채소·채소종자·밤·버섯류 수출	배 (0.6% ³⁾ , 시장점유율 40.7% ⁴⁾)	- 고객층이 한국 교민임 -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 규모의 상대적으로 작음 - 국내 수출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
홍콩	- 대부분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 5위의 수출시장 -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비교적 많음	유자조제품	
싱가폴	신선딸기 수출이 많음	딸기 (32.4%, 품질과 맛이 우수) 단감 (100%, 다국경쟁구도)	- 불완전한 선별로 인한 품위저하 - 한정적인 수출품목(부유)에 의한 국가별 경쟁

주1) 시장개요는 전국기준임.

2) ()내 첫번째는 2010년 기준 전국 품목별 수출액 중 경남의 비중이며, 두번째는 수입국가내 품목이 위치임.

3) 전국 배 수출액 중 경남의 비중은 2010년 0.6%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1%로 증가함.

4) 미국 시장내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임.

자료) 어명근외 7인(2010)·어명근외 5인(2011)·어명근외 4인(2011)을 참고하여 작성.

2. 농외소득사업의 성과와 과제

1) 농공단지

(1) 관련사업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5가지 사업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째에 해당하는 사업유형인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이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이다.

지원방식	사업유형	지원부문
제조 가공중심의 산업화지원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생산 유통시설비, 생산 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농수산물 제조 가공지원	제조 가공등 시설및 설비,연구개발비,지적재산권출원비용,컨설팅비용,사업추진단운영비 등
	체험 전시 지원	홍보: 체험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출원비용, 박람회참가비용, 컨설팅비용, 사업추진단운영비 등
체험·관광중심의 산업화지원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농어촌 테마공원] 시설비 [어촌·어항 관광개발] 시설비 [복합 낚시공원 조성] 기반조성 시설비, 어촌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농공단지부지조성비,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 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비용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그림4-10)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유형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사업은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및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 및 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과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표4-28)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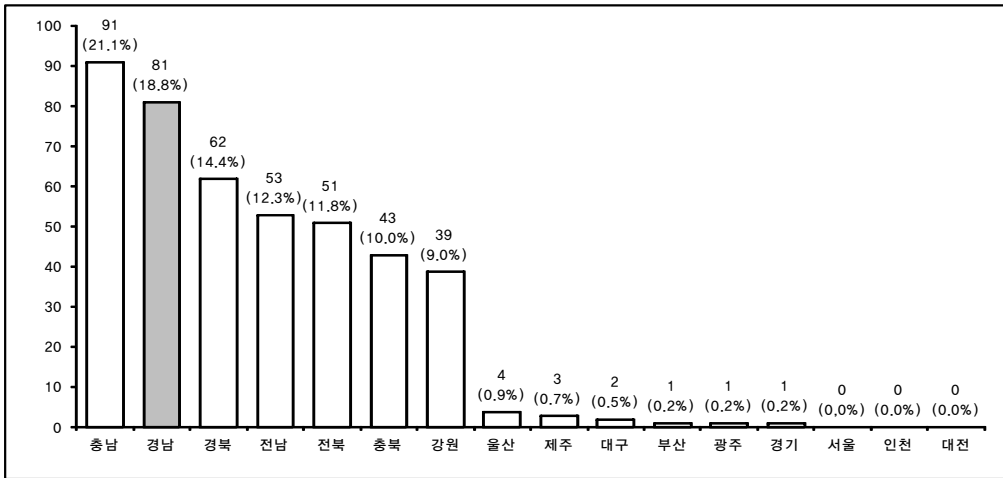
구분	관련 내용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13년부터는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용지취득비·단지시공비·부대시설비(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 되어 개보사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15-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 농공단지 현황

2012년 1/4분기 현재 전국에 432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시설구역 면적은 43,241천㎡이다. 이 중 공공용지나 지원시설 면적을 제외한 분양대상 면적인 47,749천㎡ 중 46,037천㎡가 분양되어 9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조성된 농공단지 수 기준으로 보면 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960개)의 45.0%가 농공단지이지만, 면적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단지 면적(444,586천㎡)의 8.8%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공단지가 타 산업단지에 비하여 비교적 소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남에는 현재 전국 총 농공단지의 18.8%인 81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었으며, 산업시설구역 면적은 7,391천㎡이다. 이 중 공공용지나 지원시설 면적을 제외한 분양대상 면적인 7,391천㎡ 중 7,269천㎡가 분양되어 9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보다 2.0%(p) 높은 수치이다. 경남에 조성된 농공단지 수 기준으로 보면 경남 전체 산업단지(160개)의 50.6%가 농공단지이며, 면적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단지 면적(69,093천㎡)의 13.1%로 전국 평균에 비해 경남에서는 농공단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그림4-11)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표4-29)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개·천m²·%)

구분	단지수	면적	분양현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전국	432(45.0)	53,241(8.8)	47,749(10.7)	46,037(10.8)	1,712(10.3)	96.4
경남	81(50.6)	9,040(13.1)	7,391(15.3)	7,269(15.2)	122(24.3)	98.4

주1)2012년 1/4분기 기준임.

2)면적은 산업시설구역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임.

3)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4)()내의 값은 전체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의 차지비중임.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2012년 1/4분기 현재 전국 농공단지에 6,064개사가 입주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5,327개사가 현재 가동 중으로 87.9%의 가동률을 보였다. 전년 동분기에 비해 입주업체는 3.4%, 가동업체는 4.5% 증가하였다.

경남에 조성된 농공단지에는 2012년 1/4분기 현재 936개사가 입주계약을 하였으며, 이중 784개사가 현재 가동 중으로 83.8%의 가동률을 보였다. 전년 동분기에 비해 입주업체는 3.1%, 가동업체는 2.9% 증가하였다. 경남의 경우 전국에 비해 가동비율이 4.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동업체가 입주업체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4-30)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

(단위:개사·%)

구분	입주업체			가동업체			가동비율
	'12.1/4	'11.1/4	증감률	'12.1/4	'11.1/4	증감률	
전국	6,064	5,864	3.4	5,327	5,098	4.5	87.9
경남	936	908	3.1	784	762	2.9	83.8

주)가동비율=[가동업체/입주업체]×100.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3) 농공단지 실적

2012년 1/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138,306명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단지당 평균 320.2명, 업체당 평균 22.8명이 고용되어 있다.

경남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23,142명(전국의 16.7%)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증가하여 전국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단지당 평균 285.7명, 업체당 평균 24.7명을 고용하여 단지당 고용실적은 전국에 비해 낮은 반면, 입주업체당 고용실적은 높았다.

(표4-31) 농공단지 고용실적

(단위:명·%)

구분	고용자 수			단위당 고용자 수	
	'12.1/4	'11.1/4	증감률	단지당	업체당
전국	138,306(100)	130,870(100)	5.7	320.2	22.8
경남	23,142(16.7)	21,636(16.5)	7.0	285.7	24.7

주)()내는 전국 농공단지 총 고용자 중 경남의 비중임.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2012년 1/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총 생산액은 12조656억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단지당 평균 279.3억원, 업체당 평균 19.9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총 생산액은 2조119억원(전국의 16.7%)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9% 증가하여 전국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단지당 평균 248.4억원, 업체당 평균 21.5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여 단지당 생산실적은 전국에 비해 낮은 반면, 입주업체당 생산실적은 높았다.

(표4-32) 농공단지 생산실적

(단위:억원·%)

구분	생산액			단위당 생산액	
	'12.1/4	'11.1/4	증감률	단지당	업체당
전국	120,656(100)	120,506(100)	0.1	279.3	19.9
경남	20,119(16.7)	19,744(16.4)	1.9	248.4	21.5

주)()내는 전국 농공단지 총 고용자 중 경남의 비중임.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2012년 1/4분기 현재 전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총 수출액은 27억2,900만불로, 전년동분기 대비 14.0% 감소하였으며, 단지당 평균 6.3백만불, 업체당 평균 0.4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총 수출액은 7억1,300만불(전국의 26.1%)로, 전년동분기 대비 3.0% 감소하여 전국보다 낮은 감소를 보였다. 단지당 평균 8.8백만불, 업체당 평균 0.8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여 전국에 비해 경남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수출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4-33) 농공단지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구분	수출액			단위당 수출액	
	'12.1/4	'11.1/4	증감률	단지당	업체당
전국	2,729(100)	3,172(100)	△14.0	6.3	0.4
경남	713(26.1)	735(23.2)	△3.0	8.8	0.8

주)()내는 전국 농공단지 총 고용자 중 경남의 비중임.

자료)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7.

(4)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과제

현재 농공단지는 지역과 관련이 적은 업체의 입주·자금난·인력난·판매부진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곤란, 편의 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우장명, 2009·이한성외 3인, 2006).

첫째, 지역과 연관기업과의 연계성 측면이다. 지역특산물의 산업화나 향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농공단지가 입주해 있는 해당 지역의 향토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입주업체나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여 지역내 집적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하는 현지고용 비율이 낮아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행 농공단지는 취업자 중 상당수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지역상품 구매, 지방세수 증대, 지역인구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상태이다. 현지인 중심의 취업자 구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판매지원기능 강화가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3.83배), 현행 판매지원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농공단지는 영세성으로 인해 운전자금 조달과 판로개척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농산물가공 및 식품사업

(1) 관련사업

농산물가공사업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이 있다.

(표4-34)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사업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 대학·연구 등의 R&D 네트워크 구축 ○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지원

자료)농림수산식품부.

먼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2번째 사업유형인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지원,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비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와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과 산업화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한다.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을 위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전문 CEO 영입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를 사업내용으로 하며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 개발 육성, R&D지원, 홍보 및 공동마케팅,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표4-35)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내용

지원대상	사업내용		세부내역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체험관, 공동연구개발 센터, 전문판매장, 통합문류센터, 가공·유통시 설 등

자료)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S/W, H/W 포괄지원)하고 있다. S/W분야 지원은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으며, H/W분야 지원은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이 있다.

(표4-36) 향토산업육성사업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지원내용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지원분야	S/W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H/W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지역내에 한함)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 식품산업 현황¹⁵⁾

경남에 식품제조산업과 관련된 업체 수는 '06년 1,698개소(전국의 9.1%)에서 '10년 1,920개소(전국의 9.1%)로 연평균 3.1%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전국의 식품제조산업과 관련한 업체 중 경남의 비중은 8% 중반~9% 초반수준으로, '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06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37) 경남의 식품제조산업 업체수 현황

(단위:개소·%)

구분	'06	'07	'08	'09	'10	전년대비 증감율	연평균 증감율
총 업체수	1,698 (9.1)	1,797 (9.1)	1,752 (8.5)	1,731 (8.3)	1,920 (9.1)	10.9	3.1
식품 등 제조가공업	1,680 (9.2)	1,778 (9.2)	1,732 (8.6)	1,711 (8.3)	1,901 (9.2)	11.1	3.1
건강기능식품	18 (5.3)	19 (5.5)	20 (5.6)	20 (5.4)	19 (5.5)	-5.0	1.4

주1)축산물가공품 제조업 제외함.

2)()내는 전국대비 경남의 차지비중임.

3)전년대비증감율은 2009년 대비 2010년의 증감율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각년도.

15)업체현황의 경우에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한 업체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매출현황은 네가지 유형으로 재분류됨. 이에 업체현황과 생산·매출현황의 분류는 상이함.

업체유형별로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가 '06년 1,680개소(전국의 9.2%)에서 '10년 1,901개소(전국의 9.2%)로 연평균 3.1%씩,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06년 18개(전국의 5.3%)에서 '10년 19개(전국의 5.5%)로 연평균 1.4% 증가, 전년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남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보다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경남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식품산업 생산액은 '09년 2조7,498억원에서 '10년 2조9,021억원으로 5.5%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증가율(7.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표4-38) 경남의 식품산업 생산액

(단위:억원·%)

구분	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
'09	27,498 (8.7/100)	24,191 (9.2/88.0)	756 (6.1/2.7)	2,551 (6.4/9.3)
'10	29,021 (8.6/100)	25,843 (9.2/89.0)	515 (4.0/1.8)	2,663 (6.1/9.2)
증가율	5.5	6.8	-31.9	4.4

주1)식품=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지=기구·용기·포장지+용기류임.

2)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3)()내는 각각 전국대비 비중과 전체생산액 중 항목별 비중임.

4)전국의 경우 식품산업에서 품목별 차지비중은 식품(83.3%), 식품첨가물(3.8%), 기구·용기·포장지(12.9%)임.

5)전국의 경우 식품산업(7.0%), 식품(6.7%), 식품첨가물(3.2%), 기구·용기·포장지(10.1%)의 증율을 보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각년도)·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2011) 재인용.

품목별로는 식품이 '09년 2조4,191억원에서 '10년 2조5,843억원으로 6.8% 증가하였으며, 기구·용기·포장지가 '09년 2,551억원에서 '10년 2,663억원으로 4.4% 증가하였다. 반면에 식품첨가물은 '09년 756억원에서 '10년 515억원으로 31.9% 감소하였다. 전국의 경우에는 기구·용기·포장지의 증가율(10.1%)이 두드러지나 경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의 경우 식품산업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전국의 경우 8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산업에서 식품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6)'10년 기준 경남의 식품산업관련 생산액과 매출액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5번째에 해당됨.

경남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09년 2조9,613억원에서 '10년 3조2,386억원으로 9.4%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증가율(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09년 2조6,295억원에서 '10년 2조8,387억원으로 8.0%, 식품첨가물이 '09년 534억원에서 '10년 607억원으로 13.7%, 기구·용기·포장지가 '09년 2,784억원에서 '10년 3,392억원으로 21.8% 증가하였다. 전국과 경남 모두 기구·용기·포장지의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경남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매출액 증가(13.7%)가 전국(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생산액은 31.9%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고부가 창출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4-39) 경남의 식품산업 매출액

(단위:억원,%)

구분	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
'09	29,613 (8.5/100)	26,295 (8.9/88.8)	534 (5.2/1.8)	2,784 (6.8/9.4)
'10	32,386 (8.6/100)	28,387 (9.0/87.7)	607 (5.5/1.9)	3,392 (6.9/10.5)
증가율	9.4	8.0	13.7	21.8

주1)식품=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지=기구·용기·포장지+용기류임.

2)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제외.

3)()내는 각각 전국대비 비중과 전체생산액 중 항목별 비중임.

4)전국의 경우 식품산업에서 품목별 차지비중은 식품(84.0%), 식품첨가물(2.9%), 기구·용기·포장지(13.0%)임.

5)전국의 경우 식품산업(8.8%), 식품(7.3%), 식품첨가물(7.4%), 기구·용기·포장지(20.7%)의 증가율을 보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각년도.

(3)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의 문제점과 과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는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의 문제점과 과제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낮은 연계성을 높이는 문제로 요약된다. 농산물가공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는 농산물 원료구입의 어려움, 제품차별화를 통한 시장판매전략의 부족, 홍보의 취약성, 경영인의 경영능력 미흡, 재무구조 및 인력관리 취약, 컨설팅 제도의 내실화, 사후지원대책 구축, 공동마케팅 구축 등을 들고 있으며 구매력 및 판매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이 낮은 연유로는 원료산 지역농산물의 높은 가격과 안정적 조달의 어려움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식품산업과 지역산 농산물 간의 연결고리가 이와 같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산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전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성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안병일, 2010).

3) 그린투어리즘

(1) 관련사업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이 있다. 이 중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은 세부적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으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학습관·지역특산물판매시설·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3만(어촌관련인 경우 1만5천 m^2)~100만 m^2 미만이며, 사업기반시설은 단지조성·진입로·주차장·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이 있다. 사업자는 반드시 농림어업전시관과 학습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특산물판매장·체육시설·휴양시설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표4-40)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사업규모	○3만(어촌관련인 경우 1만5천 m^2)~100만 m^2 미만	
시설기준	기반시설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본시설	○농림어업전시관(60 m^2 이상), 학습관(60 m^2 이상)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지원분야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으며, 전액 사업자가 부담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관광농업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영농체험시설·체육시설·휴양시설·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2,000~100,000 m^2 미만으로 사업자는 영농체험시설(농

장면적)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마찬가지로 지역특산물판매시설·체육시설·휴양시설·음식제공시설·기타시설 등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규모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수동식 소화기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이용객에게 숙박·취사시설·농산물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4-41) 관광농업 사업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사업규모	○ 2,000~100,000㎡미만	
시설기준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체육시설·휴양시설·음식제공시설 등
지원분야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개보수 및 관광 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용자한도는 15억원 이내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의 사용은 일체 불허함	

자료)농림수산식품부.

(표4-42) 농어촌민박 사업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사업규모	○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시설기준	○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 오수처리시설 설치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역범위(숙박·취사시설·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지원분야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신축은 미지원)

자료)농림수산식품부.

(2) 그린투어리즘 운영현황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광농업을 포함한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은 '09년 기준 전국 1,468개 중 219개(14.9%)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항목으로는 관광농원이 92개로 가장 많았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51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개·어촌체험마을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광농업·녹색농촌체험마을·농어촌민박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2개년도('10·'11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4-43) 그린투어리즘 관련 현황('09)

구분	관광 농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자연상태 복원우수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08)	계
전국	463	442	102	167	100	17	177	1,468
경남	92 (19.9)	51 (11.5)	20 (19.6)	13 (7.8)	19 (19.0)	3 (17.6)	21 (11.9)	219 (14.9)

주)()내는 전국대비 경남비중임.

자료)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녹색농촌체험마을·정승(2012) 재인용.

가) 관광농원

경남에 운영 중인 관광농원의 수는 '10년 97개에서 '11년 101개로 4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해당 면적 또한 2,150,856㎡에서 2,161,74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관광농원에 참여한 가구 수는 오히려 354가구에서 297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 또한 374명에서 35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4) 경남의 관광농원 현황

구분	농원 수(개소)	면적(㎡)	참여호수(가구)	종사자수(명)
'10	97	2,150,856	354	374
'11	101	2,161,746	297	356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관광농원에 방문하는 연간방문객수는 '10년 552,620명에서 '11년 7,479,520명으로 29.9% 감소하였으나, 연간수입은 오히려 동기간에 6,501,100천원에서 7,479,520원으로 15.1% 증가하였다. 관광농원 수당 수입 또한 67,022천원에서 74,055천원으로 증가하여 연간 방문객수가 감소하였어도 농원 당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별로 '10년에는 음식물 판매액이 2,439,000천원(연간수입의 37.5%)으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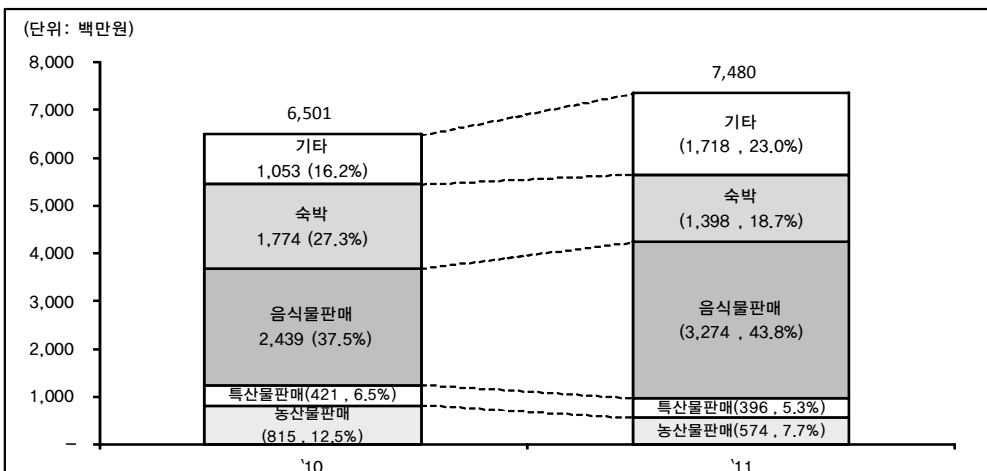
많았으며, 숙박 1,773,700천원(27.3%), 기타수입 1,052,500천원(16.2%), 농산물 판매 815,300천원(12.5%), 특산물 판매 420,600천원(6.5%)순으로 나타났다. '11년에는 음식물 판매액이 3,274,100천원(연간수입의 43.8%)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수입 1,718,400천원(23.0%), 숙박 1,397,870천원(18.7%), 농산물 판매 574,100천원(7.7%), 특산물 판매 396,100천원(5.3%) 순으로 나타났다. 2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물 판매를 통한 수입과 기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숙박을 통한 수입과 농산물·특산물 판매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의 패턴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당일여행을 선호함에 따라 숙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벼운 여행을 함에 따라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지역 음식점을 이용함에 따라 음식물 판매를 통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45) 경남의 관광농원 운영실적

(단위:명·천원·%)

구분	연간 방문객수	연간 수입					
		계	농산물 판매	특산물 판매	음식물 판매	숙박	기타
'10	552,620	6,501,100 (100.0)	815,300 (12.5)	420,600 (6.5)	2,439,000 (37.5)	1,773,700 (27.3)	1,052,500 (16.2)
'11	387,152	7,479,520 (100.0)	574,100 (7.7)	396,100 (5.3)	3,274,100 (43.8)	1,397,870 (18.7)	1,718,400 (23.0)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그림4-12) 경남의 관광농업 수입원

나) 녹색농촌체험마을

경남에 운영 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수는 '10년 62개에서 '11년 69개로 7개 마을이 증가하였다.

연간 방문객수는 '10년 452,473명에서 '11년 487,399명으로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유형별로는 당일체험 방문객이 '10년 211,230명(46.7%)에서 '11년 149,652명(30.7%)으로 29.2% 감소한 반면, 숙박체험 방문객은 동기간에 62,344명(13.8%)에서 87,079명(17.9%)로 39.7% 증가하였다. 더불어 기타 방문객 또한 동기간에 178,899명(39.5%)에서 250,686명(51.4%)로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최근의 여행패턴인 당일여행보다는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6)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방문객수 (단위:개·명·%)

구분	마을수	방문객 수			
		계	당일체험	숙박체험	기타
'10	62	452,473 (100.0)	211,230 (46.7)	62,344 (13.8)	178,899 (39.5)
'11	69	487,399 (100.0)	149,652(30.7)	87,079 (17.9)	250,686 (51.4)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통한 매출액은 '10년 4,103,734천원에서 '11년 4,583,562천원으로 11.7% 증가하였다. 하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당 매출액은 '10년 평균 66,189천원에서 '11년 66,428천원으로 0.4% 수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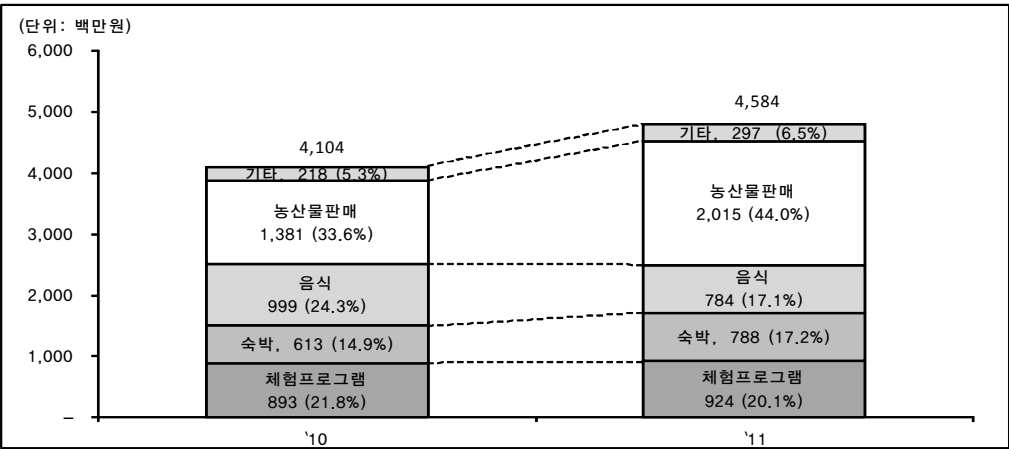
매출액 품목별로는 '10년에는 농산물 판매가 1,380,612천원(33.6%)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998,796천원(24.3%), 체험프로그램 893,483천원(21.8%), 숙박 613,181천원(14.9%), 기타 217,662천원(5.3%) 순으로 나타났다. '11년에는 농산물 판매가 2,014,777천원(44.0%)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체험프로그램 923,507천원(20.1%), 숙박 788,310천원(17.2%), 음식 783,545천원(17.1%), 기타 297,475천원(6.5%) 순으로 나타났다.

(표4-47)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 (단위:천원·%)

구분	계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농산물판매	기타
'10	4,103,734	893,483 (21.8)	613,181 (14.9)	998,796 (24.3)	1,380,612 (33.6)	217,662 (5.3)
'11	4,583,562	923,507 (20.1)	788,310 (17.2)	783,545 (17.1)	2,014,777 (44.0)	297,475 (6.5)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개년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은 숙박비·체험프로그램·농산물판매·기타는 증가한 반면 음식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감소하였다. 이는 숙박체험을 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에 방문하는 등으로 인하여 음식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그림4-13) 경남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구조

다) 기타 사업

경남 농어촌민박사업수는 '10년 2,585개소에서 '11년 2,617개소로 1.2% 증가하였으며, '11년 현재 민박규모는 312,969㎡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경남에 조성중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양산시(양산뉴월드)와 거창군(거창사과테마마크)에 각각 1개소로, 거창사과테마파크의 경우 '11년 현재 4,000명이 방문하였으며 무료체험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8) 경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구 분	면적	운영실적('11)			비고
		방문객수(명)	매출액	종사자(명)	
양산뉴월드(양산시)	3.0ha	-	-	-	공사 지연
거창사과테마파크(거창군)	7.0ha	4,000	무료체험	2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현재 운영 중인 거창사과테마파크의 주요시설로는 전시관(90.36㎡)·학습관(76㎡), 사과체험장(20,232㎡)·화장실(46.6㎡)·공원시설(14,235㎡)·생태소류지(2,188㎡)·오미자 체험장(2,500㎡)로 사과와 오미자 체험장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린투어리즘 문제점과 과제

가) 관광농원의 문제점과 과제

관광농원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김정수, 2005). 문제점으로는 1인 중심의 개발과 운영 및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부족, 농원조성 및 작목 입식의 부실, 관광농원 부대시설 활용의 미흡,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의 미비,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비용의 과다 투자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운용자금의 부족과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부실운영 증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종합한 특색있는 관광농원 개발과 경영자의 경영역량 강화, 협업경영 방식의 도입과 전문경영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생산자조직과 법인체 중심의 운영제도 개선, 고객만족과 관광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련시설(숙박·부대편의·체육·휴양 등)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 운영자금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및 관광코스화, 정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단체이용객 확보를 위한 연중 예약 이용체제 확립, 체험활동의 다양화(자연체험·농사체험 등), 가격 및 판매 유통전략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김한도, 2008). 문제점으로는 운영자 측면에서 일회성(3년간) 사무장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착화 미흡,

과다한 초기투자자와 부대시설 부족, 홍보부족, 프로그램 운영 부족, 빈집활용을 위한 민박리모델링 부족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홍보부족에 따른 이용도 저하, 교육과 학습을 위한 가족동반 중심의 이용패턴, 지속적인 프로그램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통합적인 운영시스템 강화, 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 및 내부갈등완화 장치 필요, 도농교류 확대 및 방문객 유치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3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1.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관련 정책 및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조직화는 자생적으로 추진된 경우와 정책에 의해 추진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자생적으로 추진된 경우는 두레·계·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정책에 의해 추진된 경우는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정책구분 방식에 따라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정책, 농촌지역 개발 정책, 농외소득원 개발 정책, 농촌의료·복지 정책, 농촌교육 정책 형태로 전개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시대적으로는 해방 직후 미군정의 농사교도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다른 기조의 정책이 추가되어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경영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의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사업비 지원·바우처 제도·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4-49)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여건

구 분	인건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바우처 제도	운영비 지원
고용 노동부	○ 사회적일자리 창출 ○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진흥원

자료) 김기태(2012)·이인우(2012) 재인용.

(표4-49)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여건(계속)

구 분	인건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바우처 제도	운영비 지원
자치 단체	○ 사회적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			
행정 안전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마을기업/희망마을 ○ Green마을/녹색마을 ○ 정보화마을		○ 자원봉사센터
농림수 산 식품부	○ 취약농가 인력지원	○ 농어촌공동체회사 ○ 도농교류활성화 ○ 마을단위농업공동체		
보건 복지부	○ 자활공동체 ○ 자활근로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 방과후돌봄서비스 ○ 아동안전지킴이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 ○ 장애부모아동언어 발달지원	○ 자활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법인 ○ 대한노인회
기타	○ 장애학생교육지원 ○ 생활체육지도사	○ 숲가꾸기사업 ○ 환경지킴이		

자료) 김기태(2012)·이인우(2012) 재인용.

농촌의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조직화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 마을만들기 관련사업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7개 사업(녹색농촌 체험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어촌체험마을·정보화마을·농촌건강장수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산촌생태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4개 사업(마을기업·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자활공동체)¹⁷⁾이 추진 중에 있다. 마을만들기

17)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업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발전과 지역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총칭(행정안전부, 2011).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마을단위 법인·들녘별 경영체·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조직을 포괄하는 개념(농식품부, 2011).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함(고용노동부, 2011).

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 사업과 같이 일부사업은 농촌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은 사회적 경제로 제한하고자 한다.

(표4-50) 마을관련 주요 육성정책과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사업조직

구 분	소관부처	관련 사업
	5개 부처	11개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소 계	7개 사업
	농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행안부	정보화마을
	농진청	농촌건강 장수마을·농촌전통테마마을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광역자치단체	-
사회적 경제 (사업조직체)	소 계	4개 사업
	행안부	마을기업
	노동부	사회적기업
	농림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자료)이만수 외(2012)·이인우(2012) 재인용.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 조직체의 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인쇄·출판제조업·제과 등과 같은 주류 시장경제의 가치사슬에서 탈락한 사업유형이며, 둘째, 희망공동체사업·아시아 문화센터 등과 같이 전통적 호혜 경제(mutual economy)이다.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로컬푸드 사업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업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문화활동처럼 교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급만을 창출하려는 사업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4-51)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 조직화 정책 여건

사업유형	사업종류
주류 시장경제에서 탈락	인쇄·출판제조업·제과 등
전통적 호혜 경제	희망공동체사업·아시아 문화센터
새롭게 요구되는 재화/서비스 생산·교환	보호자 없는 병원·로컬푸드 사업
공급만을 창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문화나눔 새노리 예술

자료)이인우, 2012.

2. 경남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조직 현황

사회적경제조직 중 경남 사회적기업의 현황은 '1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27개,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40개, 노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9개가 조직되어 있다. 조직형태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고 혼합형과 기타형이 조직되어 있다.

(표4-52) 경남의 사회적기업 현황('11년 말)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경남형 사회적기업
27개소	9개소	40개소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011년 현재 마을기업은 전국에 총 5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은 2012년 현재 총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지역자원활용형 43개, 생활지원복지형 3개, 친환경녹색에너지형 2개로 구분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3) 경남의 마을기업 현황('12년)

선정년도(신규)	계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형	생활지원·복지형
'10년 선정	19	16	1	2
'11년 선정	16	15	-	1
'12년 선정	13	12	1	-
계	48	43(89.6)	2(4.2)	3(6.2)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농어촌공동체회사는 2012년 현재 전국에 총 720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다. 2012년에 선정된 전국 54개 업체중 경남은 3개 업체(전국 대비 5.5%)로 전남 13개(24.1%), 경북 7개소, 충북 5개소 등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에 있다. '11년에는 밀양시·하동군·산청군 3개 시군이 추진되었으며, '12년에 들어서는 창원시 2개소, 산청군 1개소가 추진되고 있어 2012년 현재 경남 총 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표4-54) 경남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현황('12년)

'11년도 추진	'12년도 추진
밀양 평리 산대추정보화마을	창원 미더덕영농법인
하동 배영농조합법인	창원 가고파수출영농법인
산청 조섬유 배합사료영농법인	산청 조섬유 배합사료영농법인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3. 경남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조직 성과와 과제

1) 사회적기업 사업성과¹⁸⁾

(1) 경제적 성과분석

가) 재무상태

경남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재정규모는 '10년 총액기준 자산은 95.83억원, 부채는 67.84억원, 자본은 27.9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이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대비 '10년의 사회적기업 총자산은 102.5% 증가하였다. 이중 부채는 86.1% 증가한데 반해 자본은 157.3% 증가하여 자본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10년 242.4%로 '07년 67.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08년(353.2%) 이후로는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마다 차이가 있어 실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8)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제활동 조직들은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을 선정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경제활동 조직 중 사회적기업의 경우 성과분석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곽선화(2011)는 사회적기업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발표함. 이에 곽선화(2012)의 자료를 재정리하여 경남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10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남의 경우에는 20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임.

'10년 평균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자산은 평균 5.04억원, 부채는 평균 3.57억원, 자본은 평균 1.47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일정한 추세보다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09년 대비 '10년의 사회적기업 총자산은 27.9%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7.7%, 자본은 62.5%로 증가하여 자본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비율은 총액기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4-55)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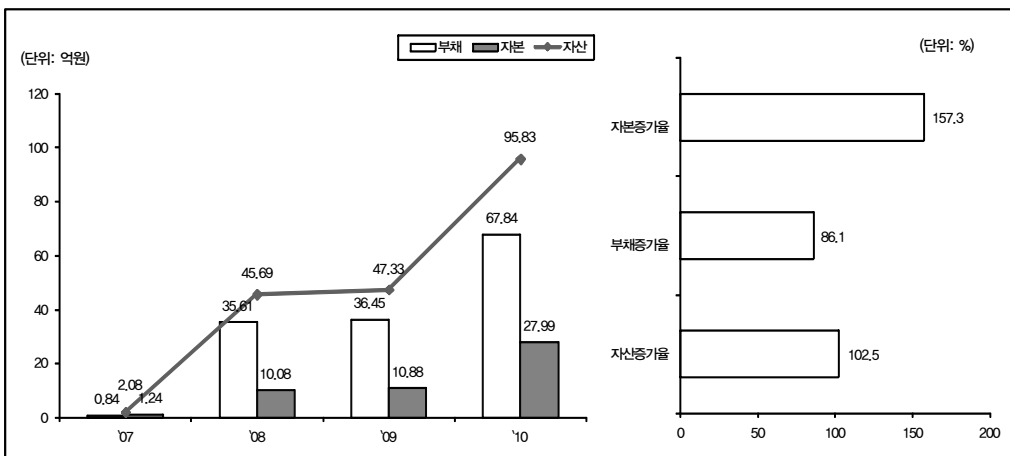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 분	총액 기준					평균 기준				
	'07	'08	'09	'10	증감율	'07	'08	'09	'10	증감율
자산	2.08	45.69	47.33	95.83	102.5	2.08	6.53	3.94	5.04	27.9
부채	0.84	35.61	36.45	67.84	86.1	0.84	5.09	3.31	3.57	7.7
자본	1.24	10.08	10.88	27.99	157.3	1.24	1.44	0.91	1.47	62.5
이익잉여금	-	-	-	5.46	-	-	-	-	0.29	-
부채비율	67.9	353.2	335.1	242.4	-	67.9	353.2	365.6	242.4	-

주1)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가를 의미함.

2)제시되지 않은 값은 이전 분석에서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아 해당 값이 없거나, 계산된 값이 회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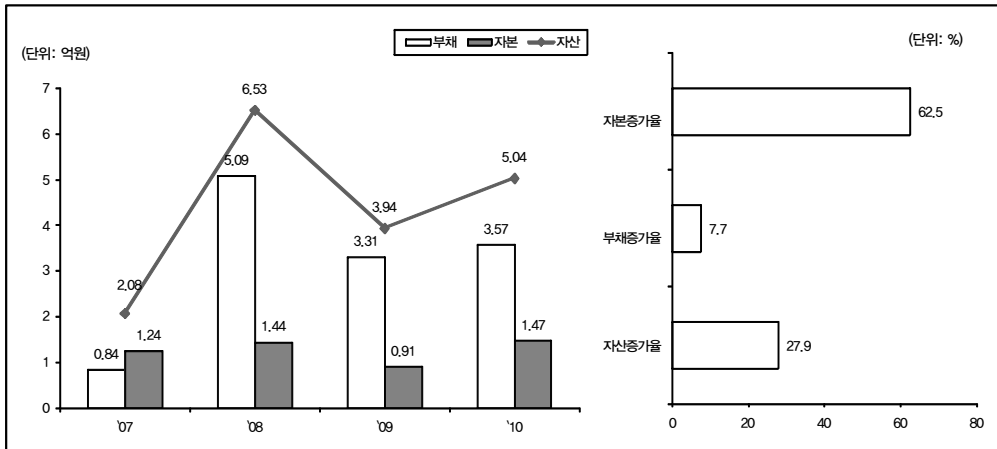
자료)곽선화, 2011.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4)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총액기준)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5) 경남의 사회적기업 재무상태(평균기준)

나) 수입구조 분석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는 '10년 총액기준 매출액은 121.32억원, 영업외 수익은 5.8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9년에 대비 매출액은 158.6%, 영업외수익은 5.8% 증가하였다. '10년 평균기준 매출액은 6.07억원, 영업외 수익은 1.5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영업외 수익은 '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09년 대비 매출액은 55.2% 증가한 반면 영업외수익은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6)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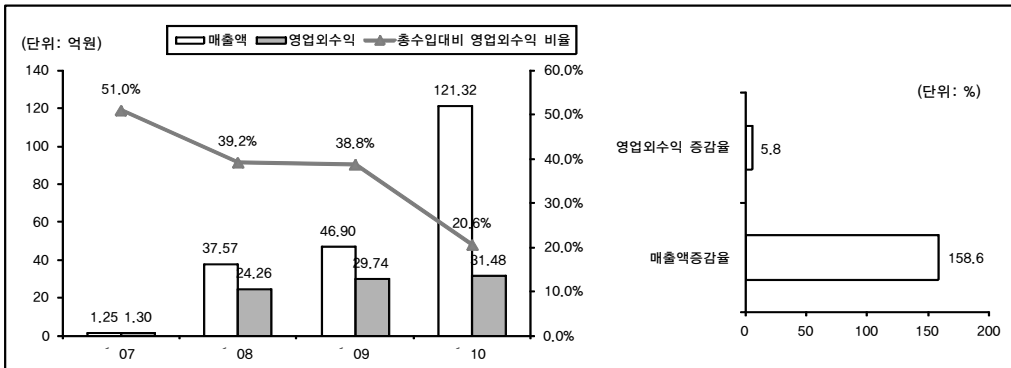
구 분	총액 기준					평균 기준				
	'07	'08	'09	'10	증감율	'07	'08	'09	'10	증감율
매출액	1.25	37.57	46.90	121.32	158.6	1.25	5.37	3.91	6.07	55.2
영업외수익	1.30	24.26	29.74	31.48	5.8	1.30	3.47	2.48	1.57	-36.5
총수입대비 영업외수익 비율	51.0	39.2	38.8	20.6	-	51.0	39.2	38.8	20.6	-

주1)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가를 의미함.

2)제시되지 않은 값은 이전 분석에서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아 해당 값이 없거나, 계산된 값이 회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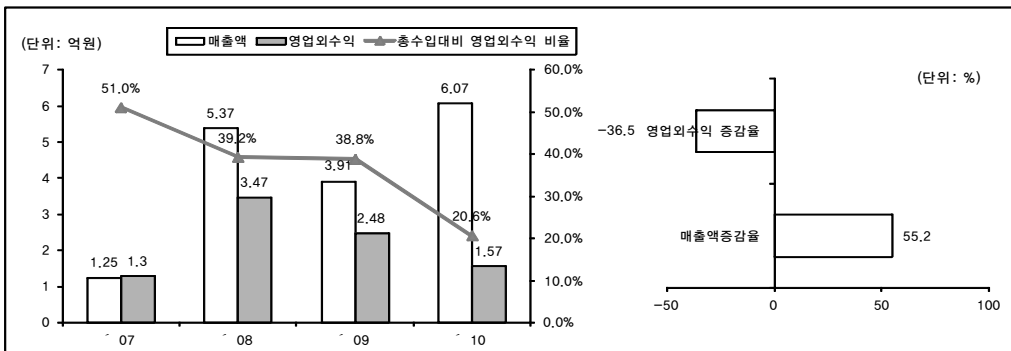
자료)곽선화, 2011.

영업외수익은 정부지원금·모기관후원금·기업후원금·기타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수입대비 영업외 수익비율을 보면 '07년 51.0%로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매년 영업외수익 비율은 감소하여 '10년 기준 20.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6)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총액기준)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7) 경남의 사회적기업 수입구조(평균기준)

다) 비용구조 분석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는 '10년 총액기준으로 매출원가는 71.3억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는 7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대비 매출원가는

177.5%, 판매비는 58.1% 증가하였다. '10년 평균기준 매출원가는 3.75억원, 판매비는 4.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원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대비 매출원가는 60.6% 증가한 반면 판매비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7)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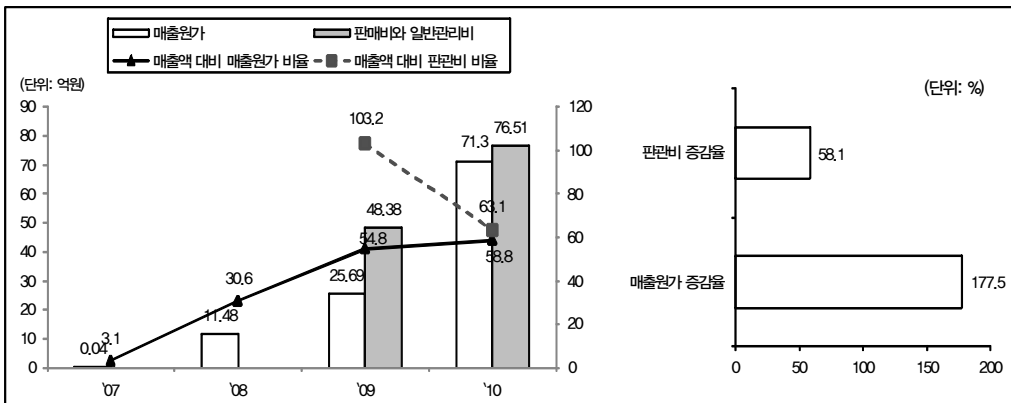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 분	총액 기준					평균 기준				
	'07	'08	'09	'10	증감율	'07	'08	'09	'10	증감율
매출원가	0.04	11.48	25.69	71.3	177.5	-	1.64	2.34	3.75	60.6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48.38	76.51	58.1	-	-	4.03	4.03	-0.1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3.1	30.6	54.8	58.8	-	-	30.5	59.7	61.8	-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율	-	-	103.2	63.1	-	-	-	103.1	66.3	-

주1)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가를 의미함.

2)제시되지 않은 값은 이전 분석에서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아 해당 값이 없거나, 계산된 값이 회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임.

자료)곽선화,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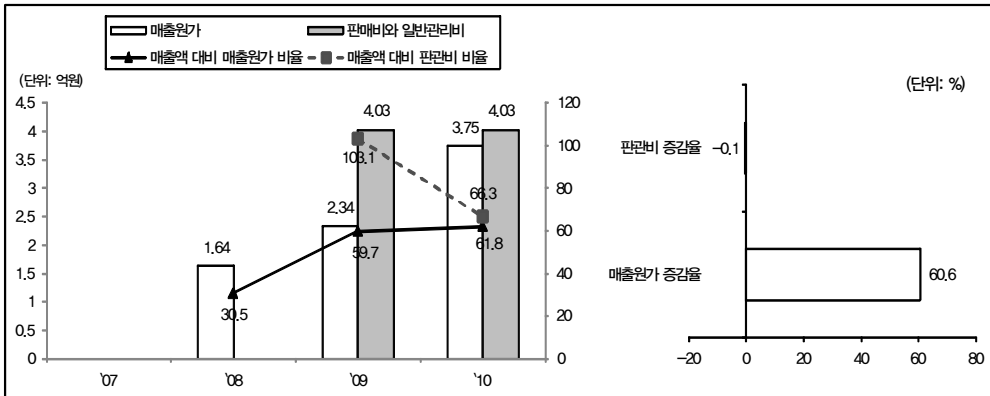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8)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총액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총액기준, 평균기준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총액기준의 경우 58.8%, 평균기준의 경우 6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라 원자재 구매량 증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비율은 총액기준, 평균기준 모두 감소하였으며, '10년 총액기준의 경우 63.1%, 평균기준의 경우 6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40%정도 감소한 수치로 매출액에 비해 판관비의 증가가 낮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19) 경남의 사회적기업 비용구조(평균기준)

라) 이익구조 분석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는 '10년 총액기준 영업이익은 23.72억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1.29억원 흑자로, 매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당기순이익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기준 영업이익은 1.19억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0.06억원 흑자로 총액기준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10년 기준 1.1로 '09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58)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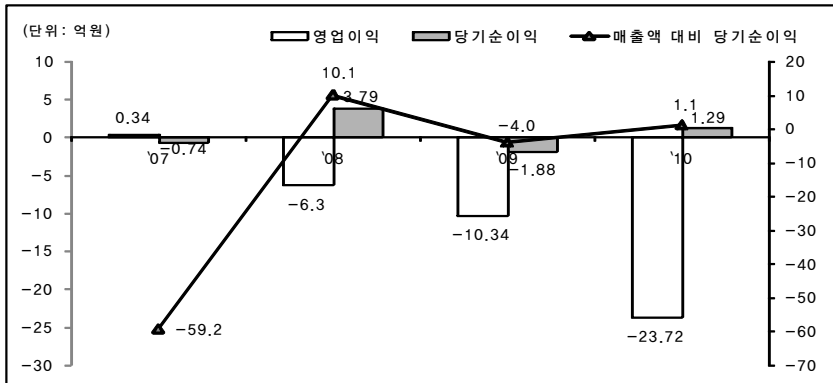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 분	총액 기준					평균 기준				
	'07	'08	'09	'10	증감율	'07	'08	'09	'10	증감율
영업이익	0.34	-6.30	-10.34	-23.72	-	0.34	-0.90	-0.86	-1.19	-
당기순이익	-0.74	3.79	-1.88	1.29	168.3	-0.74	0.54	-0.16	0.06	141.0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59.2	10.1	-4.0	1.1	-	-59.2	10.1	-4.0	1.1	-

주1)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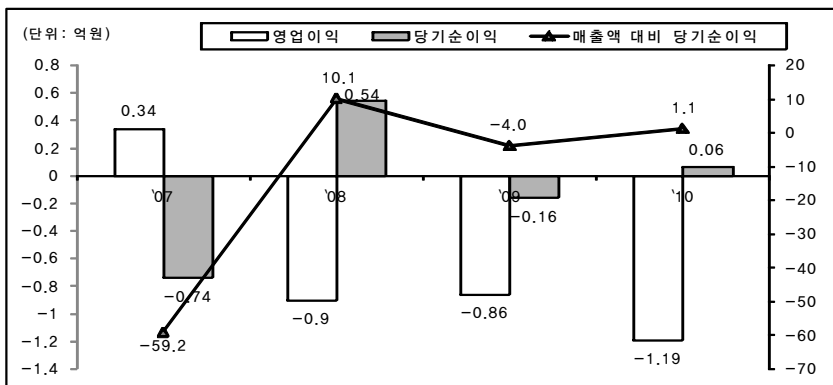
2)제시되지 않은 값은 이전 분석에서는 업종이 세분화되지 않아 해당 값이 없거나, 계산된 값이 회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임.

자료)곽선화, 2011.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20)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총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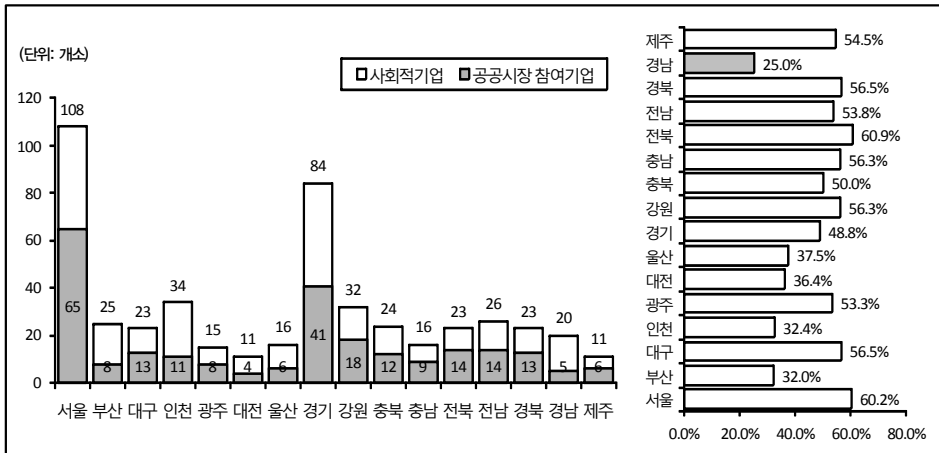
주)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감율임.
자료)곽선화, 2011.

(그림4-21) 경남의 사회적기업 이익구조(평균기준)

마) 공공시장 조달현황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보호된 시장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공공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이다.

경남의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한 현황은 '10년 기준 5개소로 경남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의 25.0%정도가 공공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기준 50.3%에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곽선화, 2011.

(그림4-22) 지역별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참여현황

경남의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매출규모는 '10년 기준 1.3억원으로 '09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의 증감율 77.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공공시장 매출 비중은 '10년 9.2%로 전년대비 53.3% 감소하여 경남에서는 공공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9) 경남의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조달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공공시장 매출				공공시장 매출 비중			
	'08	'09	'10	증감율	'08	'09	'10	증감율
경남	0.50	10.92	11.07	1.3	1.6	19.6	9.2	-53.3
전체	247.69	584.42	1,037.81	77.6	20.5	27.5	29.4	6.8

자료)곽선화, 2011.

(2) 사회적 성과분석

가) 고용창출 효과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중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유발한다. 개인적 차원의 경우에는 고용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성취감을 가져오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행정비용을 절감시켜 추가적인 매출 및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경남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는 '07년 7명에서 '10년 557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09년 대비 49.7% 증가하여 전국(32.9%)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기였던 '08년의 경우 '07년에 비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이어지는 경기불안정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수적 증가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 다양한 일자리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수적 증가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간과하여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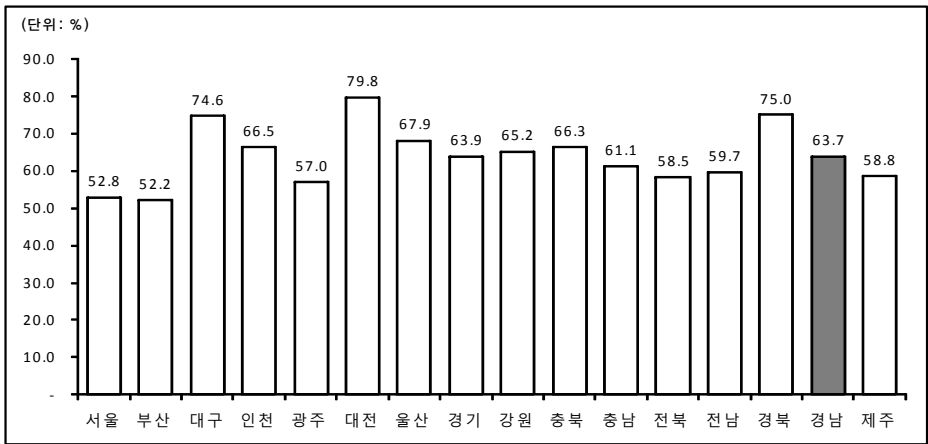
(표4-60) 경남의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명·%)

구 분	전체 유급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07	'08	'09	'10	증감율	'07	'08	'09	'10	증감율
경남	7	263	425	557	49.7	4 (57.1)	168 (63.9)	283 (66.6)	355 (63.7)	21.2
전체	2,539	8,329	11,150	13,443	32.9	1,403 (55.3)	4,832 (58.0)	6,467 (58.0)	8,227 (61.2)	36.1

주1) ()내는 전체유급근로자 수 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중임.

2)증감율은 '09년 대비 '10년의 증가를 의미함.

자료)곽선화, 2011.



자료)곽선화, 2011.

(그림4-23) 지역별 취약계층 고용비율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07년 4명에서 '10년 35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대비 21.2%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전국의 증감율 36.1%보다는 낮으며,

경남의 전체유급근로자 증가율(49.7%)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중은 '10년 63.7%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치 61.2%보다 높아 타 시도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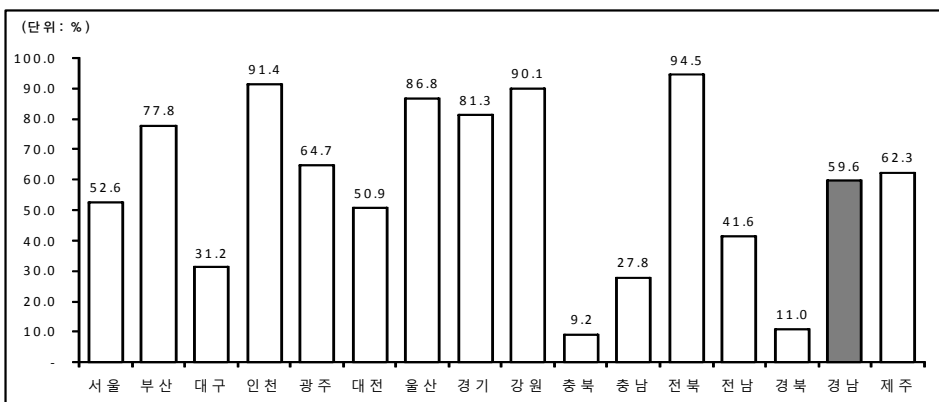
경남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수는 '08년 3,648명에서 '10년 21,66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는 사회적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 수혜자 수 또한 '08년 3,585명에서 '10년 12,91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61) 경남의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명·%)

구 분	전체 수혜자 수				취약계층 수혜자 수			
	'07	'08	'09	'10	'07	'08	'09	'10
경 남	-	3,648	7,145	21,661	-	3,585 (98.3)	3,179 (44.5)	12,919 (59.6)
전 체	26,121	307,944	842,135	6,562,077	17,166 (65.7)	198,676 (64.5)	505,767 (60.1)	3,890,202 (59.3)

주)()내는 전체 수혜자 수 중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중임.
자료)곽선화, 2011.



자료)곽선화, 2011.

(그림4-24) 지역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자의 비중은 '10년 현재 59.6%로 전체(59.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해 취약계층 수혜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수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계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마을기업의 과제

먼저 마을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2년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되 지원이 종료되거나 재선정되지 못한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이나 회계역량 및 경영노하우의 부족이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마을기업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또한 신속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마을기업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장명, 2012).

3)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사업성과와 과제

농식품부에서 '12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농어촌공동체회사는 720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경우 '10년 329,913백만원에서 '11년 571,0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의 경우에는 '10년 10,293명에서 '11년 13,153명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방문객 또한 '10년 1,541천명에서 '11년 1,673천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2) 전국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분석 결과

(단위:백만원·명·%)

매출액			고용인원			방문객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329,913	571,062	73.1	10,293	13,153	27.8	1,540,879	1,673,202	8.6

자료)농식품부, 2012.6.8.

경남의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경우에도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에 위치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고용인원에는 변화가 없으나 주변지역의 관광홍보 성과에 따라 방문객이 전년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에 위치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108.3% 증가, 고용인원이 36.4% 증가, 방문객이 100.0% 증가하는 등 농어촌공동체회사를 통한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지역에 위치한 농어촌공동체회사 또한 전년대비 매출액 20.6%, 고용인원 25.0%, 방문객 1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3) 경남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분석 결과

(단위:백만원·명·%)

지역	매출액			고용인원			방문객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10	'11	증감률
A	300	300	-	250	250	-	4,500	6,600	46.7
B	2,400	5,000	108.3	11	15	36.4	300	600	100.0
C	248	299	20.6	20	25	25.0	22,000	25,000	13.7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농어촌공동체회사의 문제점으로는 자금부족, 원료조달 애로, 판매 부진, 금융비용 상승, 홍보지원 부족, 마케팅 역량(포장·규격화 등) 부족, 농가참여도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수익창출 구조 미흡, 통합적 지원체계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장덕기, 2012).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는 전문성 강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발굴, 기존 마을 및 지역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강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등이 제시된다(유정규, 2011).

제4절 소결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크게 시장경제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 영역은 농산업 영역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사업이 대표적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은 농촌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각 영역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업 영역(시장경제 영역)의 농업소득에는 농업·축산업·수출농업이 있다. 농업은 Position Matrix분석상 지속적 위축 영역(39.0%)에 빠진 품목이 많고 지속적 성장중

인 품목(31.7%) 또한 향후 지속적 위축에 빠질 우려가 존재하므로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Position Matrix 분석에 따라 미래성장 지역특화전략, 품목 및 사업경쟁력 강화 전략, 유통조직 및 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등 품목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Nation Food와 Local Food 육성전략의 구분이 필요하다.

축산업은 조수입이 최근에 감소하고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축종별 경영비 중 조사료 비중이 높다. 따라서 마케팅 산지조직화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경영비 부담요인인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농업은 파프리카·딸기·단감·장미 등이 경남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양하고, 국가에 따라 수출제약요건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시장 환경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시장 환경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략 수립으로 Global Food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농산업 영역의 농외소득은 농공단지,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그린투어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농공단지는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전국에 비해 가동업체의 비중이 낮다. 따라서 경남 농공단지의 가동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을 산업화단지로 활용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식품산업에서 경남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업체보다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과 관련한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과는 식품산업 관련 생산액 증가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과 관련하여 전국과 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경남 고유의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린 투어리즘에서 관광농업의 경우 숙박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숙박형 체험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시군단위 농업관광경영체의 육성, 우수사무장제도의 확대 및 활용, 지역리더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 중 사회적 기업에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있다. 경제적 성과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외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원자재 구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증가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

가하였으나,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공공시장 참여현황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사회적 성과를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경남의 경우 전국평균치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비중이 높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경제적 수입을 향유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 경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성이 낮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호책 마련과 지역자원 의무사용 제도 도입이 요구되며, 경남의 경우 공공시장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고 공공제품 구매 바스켓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마을기업과 공동체회사의 경우 경영능력이 미흡하고 자금이 부족하며,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고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지역농가의 참여도 미흡하다. 따라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축이 요구되며, 우수한 지역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사회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4-64)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소결

영역			요약	시사점
농산업 영역	농업 소득	농업	○지속적 위축 영역(39.0%)에 빠진 품목 많음 ○지속적 성장 중인 품목(31.7%) 또한 향후 지속적 위축에 빠질 우려가 존재 ○조수입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	○Position Matrix분석에 따른 품목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 ○미래성장 지역특화전략, 품목 및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 유통조직 및 시스템 개선 전략 수립 필요 ○Nation food, Local Food 육성 전략 구분
		축산업	○조수입은 최근에 감소,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축종별 경영비 중 조사료 비중이 높음	○마케팅 산지조직화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경영비 부담요인인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 필요
		수출농업	○파프리카·딸기·단감·장미 등이 경남의 주요 수출품목임 ○국가별로 시장환경이 다양하고, 국가에 따라 수출제약요인이 상이함	○국가별 시장 환경 파악 필요 ○시장 환경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 수립 ○Global Food 산업 육성 필요

(표4-64) 농산업과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성과와 과제 소결(계속)

영역			요약	시사점
농산업 영역	농외 소득	농공단지	○농공단지 중 경남의 비중이 높음 ○전국에 비해 가동업체의 비중이 낮음	○경남 농공단지의 가동률 증가방안 필요 ○농어촌지역 산업화단지로 활용 및 전환
		농산물 가공/식 품산업	○경남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업체보다 는 식품 등 제조가공업과 관련한 업체가 크게 증가함 ○전국과는 식품산업 관련 생산액 증가구조 가 다름	○농산물가공과 관련하여 전국과 구조가 상 이함에 따라 경남 고유의 전략이 필요함 ○지역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강화 필요
		그린 투어리즘	○관광농업의 경우 숙박수입이 감소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숙박형 체험 증가	○시군단위 농업관광경영체의 육성 ○우수사무장제도의 확대 및 활용 ○지역리더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기업	경제적 성과	○제정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 또한 점 차 감소함 ○외부제정에 대한 의존도 감소 ○매출 증가에 따라 원자재 구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증가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수익성이 여전히 낮음 ○공공시장 참여현황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음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기단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 사회적경 제 교육 및 홍보 강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성 이 낮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호책 마련. 지역자원 의무사용 제도 도입 ○경남의 경우 공공시장의 참여가 더욱 필요함. 공공제품 구매 바스켓 제도 도입 필요
		사회적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증가하며, 경남의 경우 전국평균치에 비해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 제공 비중이 높음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경제 적 수입을 향유할 기회 증가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경영능력 미흡, 자금부족, 판매부진 ○마케팅역량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지역농가 참여 미흡	○마케팅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사후관리체계 강화,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역인력 참여 유도 ○농촌사회 재능기부 활성화 필요

제5장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방안

제1절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공공영역의 소득 및 사회 안정망 구축

제4절 농산업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제5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제6절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제5장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방안

제1절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 SWOT 분석

경남농업·농촌환경분석, 농가소득분석, 농산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과와 과제 도출을 통해 내부환경분석을, 세계농업 환경변화와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외부환경분석을 실시하여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창출방안의 과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을 하였다.

1) 내부환경분석

(1) 강점요인(Strength)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인구 증가와 농촌지역의 활력화가 증대되고 다문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Position Matrix 상 43개 품목중 13개 품목(31.7%)이 지속적 성장 영역에 해당된다.

(2) 약점요인(Weakness)

농촌인구감소 및 노령화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역민의 참여저조와 자율농정기반이 미약한 실정으로, 농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가경제가 축소되고 도농격차 및 대농과 소농간 계층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Position Matrix상 16개품목(39.0%)이 지속적 위축 영역에 해당되었다. 축산업의 경우 중간재비의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기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농외소득사업과 사회적경제 사업성고가 미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2) 외부환경분석

(1) 기회요인(Opportunity)

개방화로 인해 해외 수출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되었고 국내 지역간·품목간 경쟁효과에 의한 생산성 향상, 유통효율성 및 품질경쟁력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량수요 및 소비의 고급화로 고품질·친환경·안전농산물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 도래와 아열대기후로의 변화로 인해 농촌·농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2) 위협요인(Treat)

국내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역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 집중 현상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공급과잉 위험이 예상된다. WTO와 FTA 수입 개방 가속화로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수출의 독과점으로 인한 농식품 가격상승 압력과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호주의에 의한 의존성 심화와 부실경영 증대가 농업·농촌에 위협이 된다.

2. 과제 도출

1) S-O 전략

강점을 활용해서 외부환경의 기회요인들을 살리기 위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농업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고, 현지인, 귀농·귀촌인, 이주민 등의 농촌계급 구성원의 화합을 강화시켜야 하며, 친환경농업·생산·유통·소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및 먹거리 유통체계 개선 및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며,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고령화 시대·녹색성장시대·융합복합기술시대·여가문화시대)를 신성장동력원의 발굴 기회로 활용하고 아열대 기후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작목(유자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S-T 전략

강점을 활용해서 외부환경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지향적인 농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을 육성, 녹색에너지마을 조성과 함께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며, 식량주권(=먹거리주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W-O 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 기존 농업소득원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층별 소득증대 방안을 차별화하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함께 지역농정 파트너로서 농업인·농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

4) W-T 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케팅 산지조직화가 필요하고 농업소득 안정과 사회안정망 구축, 농가부채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농촌부분의 하드웨어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료비 절감을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전개됨과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적으로 다원적인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표5-1) 과제도출을 위한 SWOT 분석

			경남농업·농촌환경분석, 농가소득분석, 농산업 및 사회경제적 영역의 성과와 과제	
			Strength	Weakness
외부환경분석			○ 귀농·귀촌인구 증가와 농촌지역의 활력화 증대 ○ 다문화 가구 증대 ○ 농식품의 수출 확대 ○ 43개 품목중 13개 품목(31.7%)이 지속적 성장 영역에 해당	○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 지역민의 참여저조와 자율농정 기반 미약 ○ 농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가경제 축소 ○ 도농격차 및 대농과 소농간 계층 격차 확대 ○ 43개 품목중 16개 품목(39.0%)이 지속적 위축 영역에 해당 ○ 중간재비 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축산업) ○ 농외소득사업 성과 미흡 ○ 사회적경제 사업 성과 미흡
세계농업 환경변화와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	Opportunity	○ 개방화로 해외 수출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기회 확대 ○ 국내 지역간·품목간 경쟁효과에 의한 생산성 향상, 유통효율성 및 품질경쟁력 증대 ○ 식량수요 및 소비의 고급화로 고품질·친환경·안전 농산물수요 증대 ○ 농업·농촌 메가트렌드 도래 ○ 아열대기후로의 변화	○ 시장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농업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 현지인, 귀농·귀촌인, 이주민 등의 농촌계급 구성원의 화합 강화 ○ 친환경농업·생산·유통·소비대책 필요 ○ 식품 및 먹거리 유통체계 개선 및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 필요 ○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를 신성장동력원 발굴기회로 활용-고령화시대, 녹색성장시대, 융합복합기술시대, 여가문화시대 ○ 아열대 기후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작목 개발(유자 등)	○ 기존 농업소득원 사업 경쟁력 강화 ○ 계층별 소득증대 방안 차별화 ○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활성화 필요 ○ 사회적경제 사업의 통합적 운영 필요 ○ 지역농정 파트너로써 농업인·농민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Threat	○ 국내 농업생산활동의 위축과 농촌경제 어려움 가중 ○ 무역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 생산집중 현상 불가피 → 공급과잉 위험 ○ WTO·FTA 수입 개방 가속화 ○ 농업·농촌이 지니는 비교역적 공익적 기능 상실 및 축소 ○ 식량수출의 독과점으로 인한 농식품 가격상승 압력과 식량안보 위협 가중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가중 ○ 보호주의에 의한 의존성 심화와 부실경영 증대	○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장지향적 농산업 육성 정책 필요 ○ 경쟁력있는 농업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구조조정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육성 ○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 식량주권(=먹거리 주권)의 제도화	○ 마케팅 산지조직화 필요 ○ 농업소득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 농가부채 완화 대책 필요 ○ 하드웨어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 전환 ○ 사료비 절감대책 필요 ○ 농업의 특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 ○ 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필요

제2절 기본방향

1. 패러다임의 전환

농가소득의 핵심적인 문제는 농가소득의 ‘정체와 불안정성’에 있다. 정체와 불안정성은 농가간 계층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령화된 영세농과 규모화된 전업농은 증가하는데 반해 중간층은 감소 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영세농은 고령화로 인해 농외소득 확보가 어렵고, 규모화된 전업농은 가격하락으로 소득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구조와 추이는 우리 사회가 1저2고(저성장·고실업·고령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에서 한층 더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을 수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유지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제 곡물메이저의 독과점 구조 하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과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위기상황은 식량주권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로 진행된 농업무역 자유화 속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는 지역농업의 주권(지역생산과 소비의 주권, 지역자원 배분의 주권 등)과 특성을 무시하고 규모의 논리로 접근하는 생산성과 효율성 편향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 패러다임이고, 둘째는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소득안정망·사회안정망·농업재해 지원 등)이 계층간·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만큼 그리 충분치 않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있다.

국내 농업은 시장개방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여건의 변화 속에서 4대 불안요소(FTA로 인한 시장불안, 부채증가와 소득불안, 교역조건의 악화, 소득 및 사회 안정망이나 재험 보험과 같은 안정망 장치의 미비)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단기적 처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농업인력의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와 불안정 심화, 도농 소득과의 격차 확대 등 농가소득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소득의 정체와 불안정의 심연에는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요인이 얹

혀 있어 현재와 같은 비전과 전략으로는 위기의 본질을 극복할 수 없다.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는 직접적으로 개방확대 등에 따른 농업소득의 하락에 기인한 농가소득 저하, 그리고 농촌의 낮은 삶의 질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농가소득 보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최소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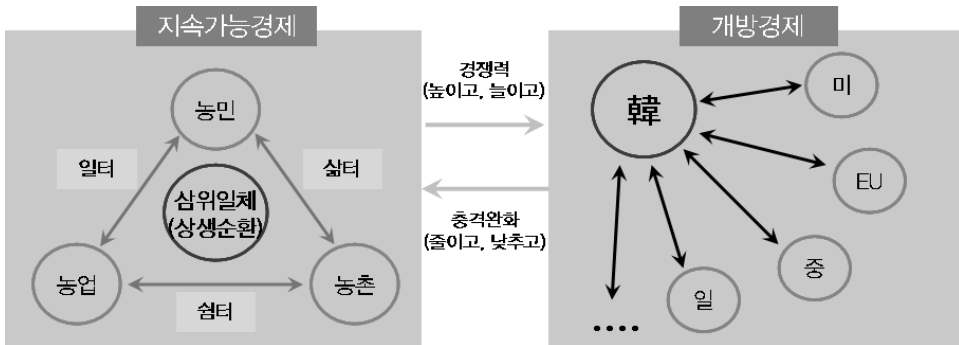
효율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농업에서 벗어나 농민-농업-농촌의 순환상생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발전 이념을 중시하고 수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기본방향

농가소득의 창출과 안정화를 위한 지역의 당면 과제는 첫째, 외부적으로 개방경제 하에서 개방 압력과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둘째,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지역통합경제영역)의 경제 3영역을 농가소득의 안정 및 창출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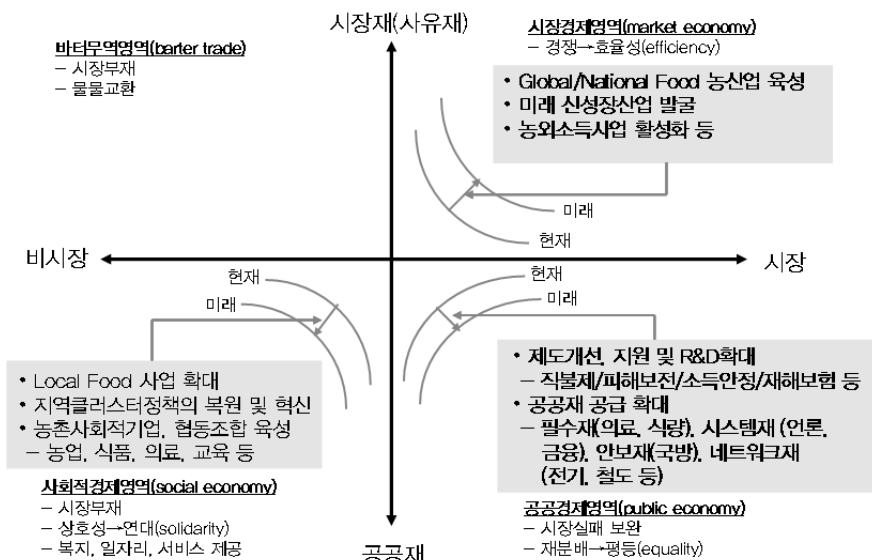
먼저,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개방경제 확대에 따라 한편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농업-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3각체제의 지속가능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제는 농민-농업-농촌의 3각체제가 일터·쉼터·삶터로서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일터로서 기능은 농업을 통해 농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쉼터로서 기능은 지역민은 물론 도시민의 협력을 통해 농촌이 보유한 유산가치가 높은 환경을 보전하고 사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삶터로서 기능은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이 지니는 산업적·공간적 기능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5-1) 지속가능경제와 개방경제의 공생

둘째, 경제 3영역과의 관계설정과 연계이다. 농민-농업-농촌을 잇는 3각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제의 완성은 경제 3영역(시장경제영역·공공경제영역·사회적경제영역)으로 상호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연계성이 녹아들 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시장경제영역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 지향적 영역이므로 Global 및 National Food 농산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미래 신성장 농산업 발굴, 농외소득사업의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그림5-2) 농가소득 창출과 안정화를 위한 경제3영역과의 관계 및 연계

공공경제영역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면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는 영역이므로 주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이나 공공재 공급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직불제·피해보전·소득안정·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개선이나 지원, R&D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필수재(식량·의료), 시스템재(언론·금융), 안보재(국방), 네트워크재(전기·철도 등) 등은 국가는 물론 지역의 안위나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사회적경제영역은 수요는 발생하지만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이 미진하거나, 공동체의 유지와 보전을 위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폐경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화폐경제 영역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윤추구보다는 협동과 연대 등 상호성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Local Food 사업, 농촌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농업·식품·의료·교육 등) 육성 등이 해당된다.

제3절 공공영역의 소득 및 사회 안정망 구축

1. FTA 상생기금의 설치

FTA 수혜산업의 기업 법인세 일정부분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업종인 농수축산업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2. 직불제 정비와 강화 및 계층별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현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쌀보전직불제 등)를 통합하고 친환경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와 차별화된 가산형의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농가계층 대상으로 한 선별적 소득정책과 목표계층의 설정이 필요한데, 저소득 농가계층을 위한 소득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소득정책이 아닌 선별적 소득정책이 되어야 한다. 선별적 소득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되는 목표계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표계층 설정에는 경지면적·연령·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농가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불안정을 해소해 주는 경영위험 감소정책이 적절하고,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는 다원적 기능을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3. 농가부채 완화 및 경영회생프로그램 가동

농협 등 금융기관, 사회보장기관 등의 연채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경영위기 농가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도입이 필요하다. 경영위기 농가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 후 그에 맞는 맞춤형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만성적 부채 늪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사회보장비 감면, 납부기한 연기, 이자감면 또는 여기, 원금상환연장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품목전환 등 경영전환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4. 농업재해지원제도(농업재해보험농업재해대책법)의 개선 및 선진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과 이로 인한 농가경제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보험대상재해의 범위확대와 상품다양화로 농가의 선택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가입의무화 검토, 지방정부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의 도입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국내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곡물수입액 증가, 가공식품 및 식료품가격 상승, 곡물 사료가격 상승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은 계속 증가하여 경영수지 악화가 만성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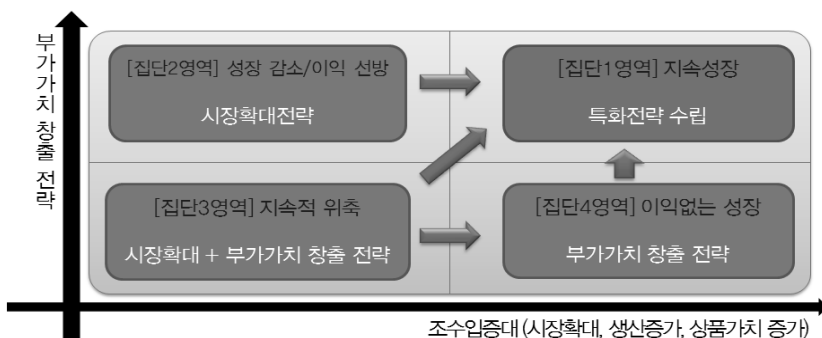
제4절 농산업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1. Position Matrix에 따른 품목별 전략

그룹 1영역은 개방을 기회로 활용하고 미래성장을 추구하는 영역으로 군살을 제거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단행,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지위 강화, 바이오매스 등 미래 성장분야¹⁹⁾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룹 2와 4영역은 품목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영역으로 집단 2영역은 높은 부가가치율을 유지하기 위해 R&D 차세대 투자를 지속하고 부진했던 분야(생산·조직·유통 등) 강화, 신제품 출시로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집단 4영역은 비용절감으로 대응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룹 3영역은 강력한 재생대책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 폐업유도, 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품목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한계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생존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간/지역간 생산자 조직화, 연합사업단 제휴 등의 전략적 제휴 및 연합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생산 및 유통방식을 재검토(Off-Line 유통→On-Line 유통, 개별판매→공동판매, Bulk 출하→브랜드 출하 유도)하고 변신을 추진하며 실적 악화 중에도 미래 성장을 위해 차세대 성장 품목(지역토착형 토종농산물 산업화)에 전략적 투자의 단행이 필요하다.



(그림5-3) 품목영역별 대응전략

19) 해수담수화/해수농업, 바이오매스 등의 환경/에너지 분야와 종자산업·말산업·곤충산업 등의 분야가 있음.

2. 농업소득 증대 및 창출

1) Glob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 강화

단감·파프리카·딸기 등 대표적 수출품목에 대해 품목별 글로벌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뉴질랜드 제스프리와 폰테라는 전세계적인 키위와 낙농브랜드로 그 힘의 근원은 법과 제도이다. 따라서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특히 마케팅 보드의 성패는 농가 조직화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품목전국연합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마케팅보드(유통위원회)법 제정, 농가조직화(계약재배·공동선별·공동계산) 및 유통협약·유통명령 확대, 품목별 의무자조금 확대 및 자조금 조직 집중 육성, 품목별 전국연합 육성 및 생산·유통·가공계열 확대가 필요하다.

2) Nation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농업 강화

꽃고추·피망 등 전국 대비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오미자·유자·블루베리 등 지역특화품목, 연·메밀·숙청·쥐눈이콩 등 토종농산물 품목에 대해 품목별 지역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지역연합의 범위는 기초지자체 농정단위와 일치하고, 지역공동체 생활영역과도 일치하므로 시군지역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계약생산과 농가조직화(공동선별 및 출하, 생산법인화 유도), 협동조합간 협동에 의한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과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이 요구된다.

3) Loc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강화

전 품목에 걸쳐서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자본의 요구나 시장경제를 통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 및 시장이 지역생활경제에서 결합되는 형태로 계약생산과 소비의 결합으로 지속가능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생산경제와 소비경제(생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먹거리 체계 거버넌스 구축, 지역먹거리운동 활성화 제도 마련, 지역먹거리체계 통합적 사업추진(농민장터·직판장·학교급식·꾸러미사업 등)이 필요하다.

3. 농외소득 증대 방안 및 창출

1) 농공단지 소득증대 방안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연고를 두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이 산업화단지로의 활용 및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는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농어촌지역 산업화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경부(산업정책 주무부처)와 농식품부(농어촌정책 주무부처)가 정책적 공조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성화 단지 개발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조성비 지원 확대와 투자촉진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농공단지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메카로 기능하도록 정책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지역단 위에서는 ‘농어촌자원산업화 TF’를 구성하여 관련사업 세부 협력체계 수립·사업시행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2)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소득증대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농업클러스터·향토산업·지역특구사업은 지역산업 부흥을 통해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지역농업이 식품산업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식품원료의 조달과 공급이라는 1차적 목적이외에 이를 가치사슬화하는 작업(유통인프라, R&D, 브랜드 개발, 안정성 검사 등)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식교육 등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확립(품목별 공급사슬정책 수립, 품목별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생산자단체 및 생협 식품산업 참여 확대, 신선편이농산물 산업 및 전통식품 육성과 함께 식품업체 및 외식업체의 국내 식재료 공동구매 촉진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4. 그린투어리즘 소득증대 방안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이 있다.

첫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농촌관광 경영체를 선발하고, 교육·체험·체류·직판·맛집 등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관리 규약을 두어 전문화시키고, 이들 경영체들을 지역단위에서 공동브랜드 조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농촌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하여 시군단위 농촌관광경영체의 육성 및 농가경영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군단위 농촌관광전담팀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내 관련 팀을 조직해서 관광경영체들을 관리·육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홍보 및 마케팅, 관광상품개발, 품질관리 등 지역의 농촌관광시장을 조직화하여 주체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둘째,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한 우수 사무장에 대해서는 사무장 제도를 연장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사례의 확산과 품질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체험마을간 협력 및 내부갈등을 완화하는 해법을 찾고, 운영 효율성 및 관리 지속성을 높이고, 공동마케팅을 통한 도농교류 및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한 시군단위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의회 구성이 요구된다.

5. 신성장동력원 창출방안

1) 고령장수화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1) 향노화산업 클러스터 및 실버형 여가산업 육성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1차(1955~1963년생)와 2차(1968~1974년생) 베이비부

며 세대가 2020년부터 65세 이상 실버층으로 진입할 예정으로,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세대와 달리 능동적인 소비주체로서의 성향을 갖고 있어 향후 새로운 실버 트렌드를 주도하여 새로운 실버문화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계기로 탄생되는 건강·가족·여가·사회참여·디지털라이프 등의 베이비부머 5대 트렌드를 뉴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신체활력+자존감 유지)을 활용한 ‘프로액티브 케이 비즈니스(향노화산업)’, 가족(직접 봉양에서 원거리 효도)을 활용한 ‘원거리 효(孝) 비즈니스(생활밀착형 IT서비스)’, 여가(문화소외층에서 문화주류층으로)를 활용한 ‘목적지향 휴(休) 비즈니스(실버형 여가산업)’, 사회참여(사회수혜층을 넘어 사회기여층으로)를 활용한 ‘배움지원 비즈니스(재능기부산업)’, 디지털라이프(디지털둔감층에서 스마트실버로)를 활용한 ‘스마트실버 비즈니스(IT상품, SNS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남의 향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서부경남의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 여건으로는 약재 및 한방은 도라지(진주·산청)·약초(산청)·산삼(함양)·오미자(거창), 오색농산물은 푸른색(사천·남해·하동·합천)·붉은색(함양 제외 서부경남 전지역)·황색(함양)·흰색(하동·합천)·검은색(합천), 고로쇠는 하동·함양·산청에서 생산된다. 연구여건으로는 진주시 바이오21센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서부경남의 주요대학이 있다. 또한 클러스터기반여건으로는 산청군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 진주시 바이오밸리가 있으며, 관광여건으로는 산청군 한의학엑스포(‘13), 합천군 대장경엑스포(‘14), 함양군 산삼엑스포(‘15) 등 주요 엑스포가 개최되며, 시군별로 고유의 관광테마가 조성되어 다양한 관광테마 접목이 가능하다.

경남의 향노화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는 약재, 산삼 및 오색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향노화 연구단지 조성, 주변 관광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사업화, 엑스포를 통한 서부경남의 향노화산업 홍보 등의 방향을 가지고 정부 및 도 단위의 지원책 마련,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전략 구축, 향노화산업과 관련한 연관 산업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향노화산업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 등의 과제 추진이 요구된다.

(2) Medical Food 개발 및 육성

‘메디컬 푸드’는 기능이 극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한 부류로 질병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 하에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식품 산업 또한 노인용 식품이나 특정질환식품 등 개별 맞춤형 식품의 수요 급증하고 이에 따라 자연 친화적 식품이 부각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전혀 다른 의사의 감독이나 처방이 필요한 메디컬 푸드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은 약물처럼 의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환자와 이에 대한 효과와 효과 대비, 위험성 등에 대해 많은 대화 필요하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고 원료에 대한 기능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등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면 약물 치료와 함께 치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와 처방전에 의해 메디컬 푸드가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골다공증,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 보조제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메디컬 푸드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서는 메디컬 푸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용 실태조사(영양 및 의료 전문가), 국내 식품 관리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미국·유럽·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법과 규정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정부는 법적 근거와 보험 수가 적용을, 산업계는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의료계는 사회적 관심 유발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녹색성장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1) 곤충산업 육성

최근 곤충의 미개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부각에 따라 곤충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21세기 녹색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0년 2월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부의 육성의지를 표명하였으며, 2020년의 세계 및 국내 곤충시장은 각각 38조원과 7천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경남은 지역곤충자원산업지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녹색 신성장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천척(경기) 및 화분매개(경북) 곤충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집약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경남은 식약사료용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지역분산형 생산시스템과 농축산폐기물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경남 곤충산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녹색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 곤충산업 블루오션분야 발굴 및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R&D기능 및 기술이전 교육 강화와 함께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농어촌공동체사업 연계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 종자산업 육성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식량자급을 향상과 국내공급기반 안정화를 기하고, 경남 토종농산물 생산과 보호를 위해서는 종자보존과 육성은 필수적이다. 이에 가뭄이나 병충해가 들어도 수확량에 영향이 적은 종자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국내 채소시장의 60%를 점했던 국내 4대 종자회사가 다국적기업에 인수되었다. 흥농종묘와 종양종묘는 세미니스에, 서울종묘는 노바티스에, 청원정묘는 사카다에 인수되었으며, 세미니스가 다시 모산토에 인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정부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 식량자원 생산성 확보, 품종보호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종자를 개발하고 미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전략품목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 종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국 등 종자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종자시장을 조사하고 수출전용 품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산물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지역 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품종육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간차

원의 토종 및 유기종자 연구개발 지원활성을 위한 토종종자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

(3) 미세조류(algae)산업 육성

엘지는 습지·늪·소택지·염호 등에서 자라는 미세조류로, 엘지에서 나오는 오일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로 전환이 가능한 바이오연료 3세대(미세조류계)이다.²⁰⁾

경남의 경우 해안가, 우포늪 등 환경적 요인과 두산중공업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기술력도 지니고 있어 연구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특히 습지의 경우, 환경부에서 지정한 내륙습지 16개소 중 경남은 4개소로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경기, 강원에 이어 3번째로 넓은데, 국가지정 습지를 포함하여 경남 내에 총 168개소의 습지가 존재한다(내륙습지 104개·산지습지 14개·연안습지 50개).

미세조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담연구팀조직(산업주도권 확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고려), 교류활성화를 통한 정보축적, 기술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논에 벼와 밭작물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다각적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밭에 대해서는 관개시설을 구축하여 가뭄이나 이상고온에 대응한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 에너지 절약 컨설팅 지원 서비스 도입하고 농가의 에너지 절약 시설도입(신규·대체)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 마을단위 생활형 녹색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효율농업(저에너지 및 저투입)과 농가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불제 지원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확대(10년 경남 친환경인증 농가는 15,062농가로 10.8% 차지),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제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공공부문의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및 사용 의무화(군대급식·공공기관·병원 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판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20)현재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1세대(곡물계)에서 2세대(목질계)로 전환 중이며, 엘지 바이오연료 산업은 향후 10년 이내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융합복합기술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1) 분자농업과 식물공장 육성

분자농업은 식물을 생산수단으로 삼아 고부가가치를 지닌 유용 단백질이나 화학물질을 대량생산으로 하는 산업으로 IT·BT·NT 등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물공장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의 유력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최근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분자농업을 식물공장과 연계하여 고부가 농업기술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공장의 상용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장운영 관련 핵심부품인 LED-IT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식물공장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2) 첨단기술농업 육성

농업과 IT의 융합기술은 미래농업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식량부족 및 식품 안전성 문제의 대안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은 2011년 기준 선진국의 60% 중반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농업·IT 융합기술은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기술에 다양한 IT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생산과 효율성 향상, 품질향상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향후 IT 융합기술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감안할 때 「경남 IT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 IT농업은 매출증대, 편리함 추구, 에너지 절약, 식품 안전성 확보, 지역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남기반형 IT농업 기술개발 추진, 경남 IT농업육성계획 수립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여가문화시대 신성장동력 육성

(1) 말산업 육성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진입하면서 요트와 승마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부상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영국·독일·미국·일본 등) 말산업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말산업은 미래 신성장(녹색레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

서, 종부업·사육·사료업·조련·보건·운송업·장구류제조업·거래중개업·재활 및 치료 승마 등 고부가가치의 6차산업(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9일에 말산업 육성법(제정법률 제10451호)을 제정하였고,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말산업 육성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경남말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종축장건립, 육성목장 조성, 초지조성, 경마공원/승마타운 조성, 사육농가 지원체계 구축, 기존시설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말산업육성기반 조성, 말친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승마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치 등 초·중등학교 교육에 말 분야 반영, 말연구소 설립, R&D 연구시설, 대학교육 과정개설, 승마 등 아카데미 개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기반 확충 등 연구시설 유치 및 인력양성, 걷는 길과 연계, 말 관련 지역축제 발굴 및 콘텐츠화, 말 박물관 및 말 그림 전시나 말 관련 세미나 유치 등 관광·전시·회의 기능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Farm Party 사업 개발 및 육성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가 결합된 팜파티는 농촌체험관광에 파티문화를 결합한 농촌 관광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다. 원래 미국의 농촌체험 활동 중의 하나로, 농장에서 생일파티와 같은 이벤트를 열고 친목을 도모하는 소규모의 사교적인 활동에서 유래되었다. 이 기법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파티의 공동주최자가 되어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 음식 및 문화 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체험관광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의 농촌관광·체험과는 달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만드는 ‘팜파티’는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농업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체험관광에 ‘팜파티’를 접목한 사례가 활발한데 2009년 전남

해남에서 논두렁·딸기밭·고구마 밭 등에서 팜파티를 개최해 1,300여명의 관광객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들어, 2012년 4월 28일 전남 화순에서 복사꽃 팜파티를 개최해 500여명이 참석하고 당일 농산물 판매로만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육성 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전남농업기술원, 해남, 화순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중점 추진 중(해남과 화순지역에서 10회 실시)이다. 또한, 2012년 5월 26일 경북 경산에서 대추밭 팜파티를 개최하여 200여명이 참석하고 대추 가공공장 견학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였다.

경남 Farm Party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팜파티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농촌 팜파티 사업 발굴 및 개발, 농촌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획과 운영, 파티마케팅 홍보전략, 파티음식의 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농촌 팜파티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우수 농촌 팜파티 운영자 선정과 성공적 노하우 확산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5절 사회적경제 영역의 소득증대 및 창출방안

1. 정책과제

1) 유사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관련사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이 유사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어 그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 평가와 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업추진과 지속은 지역 내부에서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중앙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면서 이것이 광역(시도)은 물론 기초단위까지 실과소별 분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사업간 중복과 자원배분의 왜곡 발생하여 정책실행력 감소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2) 커뮤니티 단위사업의 지역연계와 사업연계성 강화 필요

커뮤니티사업의 성과와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내 순환되도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연사업의 융복합화, 6차 산업화,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3) 지역인력의 참여확대와 중간조직의 육성 필요

노령화와 부녀화 및 농촌인력 감소 추세하에서 기존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인력조달방안은 활성화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주여성·귀농귀농인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경영역량이 미흡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컨설턴트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육성도 필요하다.

4)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필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의 문제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 사후관리 부재에 따른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이 용이해져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조기에 착근하고 스스로 발전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이다.

2. 정책대안

1)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전담조직 설치

현재 사회적경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나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기업은 노동고용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혹은 농식품부, 자활사업은 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관련사업이 경제통상국, 농수산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범실국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실행력을 갖춘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조직은 경남 사회적경제 발

전계획 수립, 공공부문의 우선구매제도의 강화와 실행력 향상, 사회적기업가육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설립,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등의 방안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

2) 경남 농어촌 사회적경제활성화재단 설립

경남 농어촌지역의 협동과 공생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써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경남 농어촌 사회적경제활성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 재단은 경남 농어촌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지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역량강화,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컨설팅 제공,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킹 구축,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및 농어촌 공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노력 지원, 정부 및 경상남도 농어촌지역정책과의 연계 강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지역주민 참여 제고, 지역자원 활용 제고, 귀농·귀촌인력의 활용도 제고 등)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3) 경남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경남의 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광역·기초)와 대규모 공공조직과 기관(학교·병원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자원사용 의무제도를 제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투입과 산출의 내부순환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 및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수립을 통해 초·중·고 과정에 사회적경제 교과과정 도입 및 농어촌지역의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도입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인재은행’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

제6절 추진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1. 추진체계 구축

1) 지역주도의 통합적 농정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합의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역량이 결집된 사업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업의 수립·추진·평가 등 컨설팅 지원시스템 구축하고 농업·농촌정책의 중앙정부 추진부처인 5개 부처(농식품부·행안부·국토부·환경부·문광부)의 유사사업을 통합화하여 농업·농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하여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농정체계를 정비하고, 상호연계를 활성화시키는 통합성과구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민간 농정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법제화

민간 농정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민간 농정주체인 농민과 농민지도자의 자발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농업회의소의 법제화 및 농업회의소 설립을 촉진하고, 농업회의소의 운용을 통해 신규 농업·농촌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정책 추진시스템 정립

중앙부처는 농업 및 농촌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수립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 및 평가 기능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차원의 전문가 그룹과 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지원 기능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하고 사업의 집행은 지자체로 이관하되, 중앙-지자체-전문가 등이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적 농정에 기초한 상향식 농정체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리더양성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구분	정책 과제	중앙정부	지자체 (광역시·군)	농어민/ 시 민
시장 경제 영역	○ Glob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농업 강화 ○ 마케팅보드구성, 전국연합 육성 등	○	○	○
	○ Nation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강화 ○ 계약생산과 농가조직화, 협동조합간 사업연합 등	○	○	○
	○ 메가트렌드를 신성장동력원으로 활용 및 육성 ○ 고령화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 향노화산업 및 실버형여가산업 ○ Medical Food 개발 및 육성 ○ 녹색성장시대 친환경산업 발굴 및 육성 ○ 곤충산업, 종자산업, 바이오/미세조류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시스템 구축 ○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 융복합기술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 분자농업과 식물공장, IT농업 ○ 여가문화시대 친화적 산업 발굴 및 육성 ○ 말산업 육성 ○ Farm Party 사업 개발 및 육성	○	○	○
	○ Local Food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먹거리 체계 강화	○	○	○
	○ 농공단지 농어촌 산업화단지로 활용 및 전환 ○ 지경부와 농식품부 정책적 공조 강화 ○ ‘농어촌자원산업화 TF’ 구성	○	○	○
	○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 ○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품목별 공급사슬연계 강화 ○ 생산자단체와 생협 및 식품산업 참여 확대	○	○	○ ○
	○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 시군단위 농촌관광경영체의 육성 및 농가경영 다각화 ○ 시군단위 농촌관광전담팀 조직 및 시군단위 협의회구성 ○ 우수사무장제도 확대 및 활용	○	○ ○ ○	○ ○ ○
	○ FTA 상생기금의 설치	○		
	○ 직불제 정비와 강화 및 계층별 농가안정망 구축	○	○	
	○ 농가부채 완화 및 경영회생 프로그램 가동	○	○	
공공경제 영역	○ 농업재해지원제도 개선	○	○	
	○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 도입	○	○	
사회적경제 영역	○ 경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전담부서 및 조직 설치		○	
	○ 경남 농어촌 사회적경제활성화재단 설립 ○ 기금조성, 운영지원, 중간조직 육성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	
	○ 경남 사회적경제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공공구매시장 조성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덕기, 전남지역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리전인포 제270호, 전남발전연구원, 2012.
- 강혜정·권오상,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9권 제1호, 2008.
- 권오상·강혜정, 농업소득·농외소득·농가소득의 절대적 수렴과 상대적 수렴, 농업경제연구, 제49권 제2호, 2008.
- 권용덕,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농업의 대응, 정책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2012.
- _____, 향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서부경남의 발전전략, 경남정책 Brief, 경남발전연구원, 2012.
- _____, 경남의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지역농식품체계 구축, 정책포커스, 경남발전연구원, 2011.
- _____, 기후변화와 경남농업의 대응, 이슈페이퍼, 경남발전연구원, 2009.
- _____, 쌀소득직접지불제의 실태와 문제점, 이슈페이퍼, 경남발전연구원, 2008.
- _____, 애그플레이션과 경남 농수출산업의 대응, 이슈페이퍼, 경남발전연구원, 2008.
- 김병률외 4인, 농업경쟁력 저해요인 실태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R5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3.
- 김성용, 농가소득 불균형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4호, 2004.12.
- 김성훈, 경남 농산물 마케팅보드 구축방안, 경남농업·농촌비전개발 2차 포럼, 경남발전연구원, 2011.
- 김재윤, The Change:메가트렌드로 보는 미래비즈니스, 삼성경제연구소, 2012.
- 김정근외 3인,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제 869호,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12.
- 김정수, 관광농원 경영활성화 방안 연구, 제7권 제1호, 문화관광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2005.
- 김정호외 4인,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정책연구보고 P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8.

김제안·채중훈, 농가유형별 소득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2009.

김종인의 3인, 말산업을 일으키자, 정책메모, 강원발전연구원, 2011.

김창길외 6인,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
구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김한도, 경남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기본연구 2008-14, 경남발전연구원, 2008.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 농이 바로 서는 세상: 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2012.

박준기·문한필·김용택,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2004.

박진도,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 내발적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제20집, 농촌사회, 2010.

안병일,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방향, 농업생명과학, 경상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0.

오내원의 4인,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C2001-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오한진, 메디컬 푸드란?, 2012년 춘계학술대회, 대한비만건강학회, 2012.

우장명,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2009.

유정규, 농어촌동체회사 육성정책의 개요와 발전과제, 6권, 지역과 발전, 지역발전위원회, 2011.

이명현, 소득문제의 올바른 해법, 2011 대안농정대토론회, 2011.

이수행, 경기도 농축산업의 비전과 과제, 정책연구 2011-35, 경기개발연구원, 2011.

_____, 경기 신농정패러다임, 이슈&진단, 경기발전연구원, 2011.

이은우,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격차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1호, 2006.

이한성의 3인, 농공단지의 부실요인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6.

임상봉외 7인, 30년 후의 바람직한 농어촌 지역개발모형 연구,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
공사, 2010.

전남수, 지역곤충자원산업지원센터 유치와 경남의 과제, 경남정책 Brief, 경남발전연구

- 원, 2012.
- 최양부, 농가소득 증대방향에 관한 이론적 검토, 농촌경제, 1978.
- 함창모, 녹색성장산업으로서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Focus 16호, 충북발전연구원, 2012.
- 황수철, 한국농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2011 대안농정대토론회, 2011.
- 황의식·강혜정,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제29권 제2호, 농촌경제, 2006.
- 황홍도, 농가경제의 위기와 정책과제, 제36권 제3호, 농업생명과학연구, 2002.
- 황홍도의 5인, 경남 농업로드맵 연구 용역보고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5.
- Bowler, I. R., C.R. Bryant, and C. Cocklin, The Sustainability of Rural Systems: Geographical Interpretations, Kluwer Academic Pub. 2002.
- Hunt, S.D., A General Theory of Competition, Marketing for a New Century, 2000.
- Pearce II, J.A. and R.B. Robinson, JR.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Control of Competitive Strategy, 1994.
- Polenske, K. R.(ed.), The Economic Geography of Innovation, Cambridge Press, 2007.
- Woods, M., Rural Geography: Processes, Responses and Experience in Rural Restructuring, SAGE Pub. 2005.

경남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방안

2012년 10월 25일 인쇄

2012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 은 진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우:641-728)

248 Yongji-ro UiChang-gu Changwon Gyeongnam 641-728

Tel(055)239-0137. Fax(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BN 978-89-8351-394-6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